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활동백서

20 since 1999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년의 기록 1999-2019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 since 1999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년의 기록 1999-2019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년의 기록(1999-2019)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발행인	김영기, 박경기, 백종만,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
조직위원장	이경한
기획·편집위원장	김남규
발행일	2019. 11. 22
발행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20주년 조직위원회
설립일	1999. 11. 29
주소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기업은행 4층)
전화	063-232-7119
팩시밀리	063-232-8119
홈페이지	www.pspa.or.kr
전자우편	jbngo@pspa.or.kr
제작	디프

20 since 1999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년의 기록 1999-2019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발 간 사

‘20주년 백서’를 만드는 것은 지난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며 앞으로 함께 할 사람들과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니 20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 중년이 되고 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처음 지녔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때문에 ‘20주년 백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활동기록임과 동시에 함께한 사람들의 ‘행복의 기록’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첫발을 내딛던 1999년은 시민의 시대가 막 열린 때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시민의 권리가 확장되고 다양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권력감시형-대변형’ 단체를 자임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방권력감시’를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시민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시민의 힘!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믿음은 광장에 모인 ‘촛불’이 보여주었듯이 ‘시민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억은 투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촛불이 되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단체가 첫발을 내딛었던 그날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20년의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년의 역사를 함께 써온 소중한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활동가분들께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기, 박경기, 백종만,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

일 러 두 기

1. **'20주년 활동백서'**는 지난 '10주년 활동백서'와 중복되는 내용을 피해 정리하였다. 한눈에 볼 필요성이 있는 내용은 20년(1999년~2019년) 목록에 통합하여 정리하였고, 나머지는 후반기 10년(2009년 7월~2019년 7월) 자료로 구성하였다. 20주년 백서에 수록되지 않은 전반기 10년(1999년 7월~ 2009년 7월) 내용은 10주년 활동 백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10주년 백서와 중복된 내용이더라도 창립 자료와 운영 규범 등 단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은 제 1장에 담았다.

3. 각종 발간 자료 및 조사·보고서는 별도의 CD에 담았다.

주 요 연 혁

[준비에서 창립까지] 1999년 3월~11월

▶ **3월** | 지방권력(정부)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시민운동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새로운 시민운동단체 준비 모임]구성

▶ **7월** | 50여 명의 준비위원을 모시고 (가칭)[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준비위원회]를 발족, 준비위원회는 말보다 실제 사업을 통해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주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 운동]을 전개함.

▶ **11월 29일** | 80여 명의 준비위원과 90여 명의 후원회원으로 창립

[2000]

-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 98~99년 지방의회 의원 해외공무여행 평가 발표
- 전라북도지사 업무추진비(판공비) 분석결과 발표
-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전북연대 활동
- 계도지 예산 폐지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 행동 추진
- 국가보안법 개정,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 실시 촉구활동

[2001]

- 도지사 업무추진비. 홍보비 행정소송
- 국회의원 정치자금 실사
- 전북교육청 판공비 사용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의료보험료 인상반대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
- 제1회 역사기행(가람 이병기 생가, 백제 유적지 등)
- 전주시 주차장 범칙금 징수내역과 사용내역(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전북교육청 공보관실 판공비 공개운동
- 전북불소화추진위원회 발대식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
- 제 2회 역사문화기행-고창 고인돌, 선운사 일대
- 선심성 홍보 예산인 계도지 폐지를 위한 간담회/ 자치단체장 면담
- 전라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청원

[2002]

-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부시방한 규탄대회
- 도지사 업무(출근) 현황, 도지사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정보공개청구운동
- 성매매방지법 촉구 서명운동
- 도내 도립공원 운영. 관리실태 정보공개 청구
- 사립대(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예결산서 정보공개 청구운동
- 대선자금 시민 옴부즈만 참여활동
- 전북도지사 경선 50% 도민참여 촉구운동
- 바른자치실현 유권자운동본부 결성과 지방선거 대응사업 전개
-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공개거부 행정소송 고등법원에서 전라북도 패소
- 채만식 100주년 기념행사와 친일 예찬자 '미당 서정주 시문학제'를 규탄하며 친일청산운동
- 시민강좌 <구강 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 계도지 폐지운동
- 대선유권자전북연대활동
-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창립과 분권자치운동
-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추모 및 규탄활동

[2003]

- 전주시 경전철 사업 반대운동 [전주노면경전철반대와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회의]
- 전라북도, 전주시 예산감시활동
  [업무추진비, 여비, 건설관련, 임의보조.정액보조, 홍보비, 사회복지시설]
- 전쟁반대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활동
- 전주시 대형 유통점 입점 반대 활동
- 전주화상경마장 진입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활동
- 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활동
- 제 5회 역사문화시민기행 '백제의 미소 천년의 황홀함이여!

[2004]

- 2004전북총선시민연대 발족 [낙천대상자발표]
- 부패방지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현판식 [부패방지시범사업협약식(부패방지위원회-전주시)]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국회구테타 규탄 촛불집회]

- 전주노면경전철반대와 교통문제해결을위한 시민대책회의 활동
- 제 6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전남승주일대, 송광사>낙안읍성>선암사)
- 파병철회 촛불집회 및 고 김선일 추모활동
-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전북도민운동본부 발족
- 송천동 메가월드 관련 수사를 촉구
-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
-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14개 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분석 결과 발표
- 제7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산청-구형왕릉, 함양-상림, 지리산 남원-실상사)
-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활동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 종교단체 시국회의

[2005]

- 도지사후보 경선비리 전말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공개사과와 도지사 퇴진운동
  [강현욱지사 경선비리 수사촉구, 주민소환제입법 활동]
- 전라북도 각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행정심판청구' 승소
- 일본 '독도의날' 조례제정 규탄 기자회견 (10:20, 도청기자실)
- 제8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충남 부여 일대"「또하나의 제국 그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 수돗물 공청회 '전주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에 대하여'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설 '참여자치연구소' 설립
- 제9회 역사문화시민기행「섬진강 자락에 고이 잠든, 옛 향운이 숨 쉬는 곳」
- 참여자치연구소 설립 기념토론회
- 친일청산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활동
- 제10회 역사문회시민기행(전남 운주사일대)
- 전북지역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양성교육
- 전주시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및 운영조례 제정운동

[2006]

- 2003~2005년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14개 시·군 민간지원 예산 분석 결과 발표
- 정치자금 실사 결과 발표
- 지방의회 의정비심의
- 교육재정살리기운동전북본부 법개정 촉구 서명운동

- 2006 지방선거전북연대 발족과 선거대응사업
  [청렴전북만들기 실천협약식, 청렴전북만들기 거리켐페인, 정책공약검증-헛공약 발표]
  [사회복지,행정자치교육분야 정책공약발표, 도지사 후보토론회, 전주시장 후보시장 토론회]
-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
- 제 11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안동하회마을
- 참여자치연구소 설립1주년 기념 참여자치포럼(5.31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 공공기관이전 정책제안운동
- 제12회 역사문화시민기행(해남, 강진일대 : 녹우당-대흥사-백련사-다산초당)
- 참여자치연구소 참여자치포럼 '전북인재양성의 방향과 실천'
- 전주시 청렴계약시민감시관 활동
- 전라북도 및 14개시군 민간지원예산분석결과 보고서 발표
- 참여자치연구소 토론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 정책포럼'수도권과밀정책의 문제점과 지역의 대응'

[2007]

- '2005년 도내 국회의원 및 정당 정치자금' 분석 발표
- <현안 토론회> "대형할인점 입점과 지역경제"
- 부패방지시민센터 활동
- <현안 토론회>'도시계획과 전주시 재개발·재건축의 방향과 과제'
- 제 13회 「역사문화시민기행」, 합천해인사·가야산식물원
- 제 1기 시민경제아카데미(총 10강)
- 대형마트 대응 사업 [시민토론회, 삼성 홈플러스 임시사용 승인 검토 철회 촉구]
-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TFT 참여와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활동
-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 활동
  [독배천 현장실사, 도청신시가지현장실사, 청렴계약 옴부즈만 확산을 위한 토론회]
- 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성과 지역경제살리기운동
- 전주시 초등학교 상반기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조사 발표
- '관주도 도민운동' 지원 계획 철회 활동
-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의정비책정관련 도민공청회, 진안군의회 항의 집회]
  ['전라북도내 각 의회 200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발표]

- 14회 역사문회시민기행
- 제2기 시민경제아카데미(총 8강) 개최
- 수도권집중반대결의 대회
- 민간지원예산 분석 발표

[2008]

- <총선기획토론회> “18대 총선의 의미와 지역정치혁신의 과제”
-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응 사업
  [정책공약검증, 5대민생 및 개혁입법 과제, 문제후보 발표]
- 대형마트 시민모니터단
  [대형마트 지역산품 판매·진열 분포 조사,대형마트 쇠고기 판매규탄시위]
-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비위원회 발족[언론 촛불문화제, 언론악법 반대]
- 균형발전 가로 막는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반대활동
- 제15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수원화성
- 제3기 시민경제아카데미(9강) 개최
  [공개강좌 : 한반도 대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 광우병 의심 미국산쇠고기 수입전면반대 전북대책회의 활동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
- 전주유통상생협의회[지역 산품 매입 확대, 지역 상생 촉구]
-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사발표
- <전북현안토론회> ‘새만금사업 현황과 계획’
-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 활동
- 16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순천만->낙안읍성->선암사, 오전 8시
- 지방의회 의정비심의
- 시민경제아카데미(총7강) 개최

[2009]

- 4·29국회의원재보궐선거 대응사업(민생 및 개혁 정책공약 비교)
- 중소상공인 살리기 네트워크 결성 및 중소상공인살리기 활동
- 회원통신 100호 발간(2009년 1호)
- 용산참사전북대책위활동

- 4년제대학 등록금 예결산 조사발표
-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 추모활동
- 언론악법날치기 저지 및 규탄활동
- 대형마트 공산품 가격비교 조사
-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토론회
- 10주년 기념식 및 기념사업
- 시민경제아카데미 개최(8강)
- 참여자치아카데미 개최(8강)
- 17회 역사문화시민기행(문경새재)

[2010]

- 6·2 지방선거 대응 활동(교육감예비후보초청토론회, 지방선거 좋은정책만들기)
- <토론회> '무상교육 확대 어떻게 가능한가?'
- SSM(기업형 수퍼)과 동네수퍼 장바구니생필품 가격비교 조사
-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이해관계 회피를 위한 활동
- 5.18 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식
-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재정 사례조사
- 전라북도 SSM규제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 4대강사업중단 연대활동
-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2009년 수익 결산 분석
- 시민경제아카데미 개최(13강)
- 대형마트내 우리지역농산물의 진열판매 및 용역업체 계약현황 조사
- ssm 규제관련 토론회
- 18-19회 역사문화시민기행(서산, 진도)

[2011]

- 전주시내버스 파업 해결을 위한 활동
- 유통산업법 개정 및 대형마트영업시간단축 활동(조례제정)
-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행동(전주 E마트 동전장보기)
- LH공사 경남진주 이전 규탄 활동
- 시민경제아카데미 개최(6강)

- 지방의회 20년 기념토론회 '전북, 판을 바꾸자'-총 5회
- 강연회(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이인영)
-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 강연회(민주세력 재집권의 비전과 시민사회의 역할-이해찬, 문성근)
- 20-21회 역사문화시민기행(보성, 창영)
- 한미FTA 날치기통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규탄 활동

[2012]

- 대상베스트코의 골목상권 진입 저지 활동
- 정치혁신, 무능 정치인 낙천 대상 발표
- 4·11 총선(지역가치 실현을 위한 2012 전북총선 정책과제)
- 복지강연회 '희망' 개최(8강)
- 대형마트 SSM 일요휴무제 도입 및 유통법 개정 운동
- 전라북도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현황 분석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과제점검 토론회
- 풀뿌리시민강좌(시민경제아카데미와 참여자치아카데미를 통합 운영) 개최
- 선거법개정(투표시간 연장) 활동
- 12·19 대선 대응활동(정권교체 호소, 투표참여)
- 22-23회 역사문화시민기행(속리산, 창덕궁)

[2013]

- 중고생 빵집이용 실태 설문조사
- 전 한국노총전.완지회장 횡령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
-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저지 활동
- 풀뿌리시민강좌 개최(8강)
-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정보공개 실태 조사
- 24-25회 역사문화시민기행(해남, 안동)
-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 진상 규명 시민촛불 활동
- 지방자치혁신토론회, 강연회
- 박근혜정부 정책 대응(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반대 등)
- 복지강연회 '희망' 개최(7강)

[2014]

-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활동
-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 진상 규명 전북시국회의 활동
- 풀뿌리시민강좌 개최(10강)
-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저지 활동
- 제26회 역사문화시민기행
- 6·4지방선거대응사업(지방선거 좋은 정책 제안 운동)
- 전라북도 지자체(시 · 도) 학술연구용역 공개실태 조사
- 제27회 역사문화시민기행
- 공익제보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5]

- '국회의원선거, 권역별비례대표제 논의와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토론회
-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청산을 위한 영·호남 시민단체 공동성명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
- 2010 ~ 2015년 지방교부세 현황 조사
-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 롯데쇼핑 입점 반대 사업
-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저지 활동
- 28-29회 역사문화시민기행(해인사, 목포)
- 집짓기 인문학강좌(4강)

[2016]

- 박근혜정권 퇴진 전북 비상시국회 활동
- '고 백남기 대책위원회' 활동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 활동
- 4·13총선 대응활동(정책제안-20대 국회, 이것만은 꼭!)
-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 롯데쇼핑 입점 반대 사업
- 에코시티 코스트코 입점 저지 활동
- 선불식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환원을 위한 사업
-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반대활동
- 경제민주화 및 민생살리기 분야 5대 정책과제 실현 활동

- 30회 역사문화시민기행(대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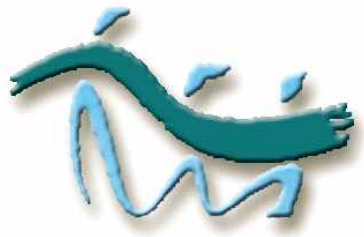
- 박근혜 퇴진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 선거법개혁 공동행동(18세 투표권,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 활동
- 5·9대통령선거 대응사업-2017대선 주권자 전북행동 사업
-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사업
-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저지 활동
- 금융(예금)입·출금 수수료 현황 조사
- 제31회 역사문화시민기행(순천)

[2018]

- 6·13지방선거 대응사업(정책제안-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
-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사업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 지방의원 겸직현황 실태조사
- 완주군(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 활동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저지 활동
- 32회 역사문화시민기행(인천)

[2019]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인상 제도 보완사업
-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 출점 저지사업
- 시민의 땅 전주종합경기장 지키기 사업
- 지방의원 겸업·겸직현황 실태조사 및 제도 보완사업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주년 기념사업



디자인 : **박홍규** 화백
시민의 힘! 세상을 바꿉니다.

1. 단체명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 영문명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Autonomy in Chonbuk (PSPA)

3. 약칭 : 참여자치연대

4. 부설기관 : 참여자치연구소(Participation Autonomy Institute/PAI)

5.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법적지위

1) 고유번호

- 1999년 5월 20일 첫 등록, 고유번호 402-82-60122 대표자 : 박종훈
- 2003년 대표자 변경 : 박창신
- 2005년 4월 11일 대표자변경 대표자 : 박종훈
- 2005년 7월 5일 참여자치연구소 고유번호 402-80-10439 대표자 : 백종만
- 2008년 1월 31일 대표자변경 대표자 : 이수금
- 2012년 4월 12일 대표자변경 대표자 : 김영기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1년 6월 16일, 제2001-1전라북도-35호, 대표자 : 박창신
- 2008년 1월 29일, 대표자변경 : 공동대표 이수금외 3인
- 2012년 4월 27일 대표자변경 대표자 : 김영기외 4인

6. 소재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팔달로 163 기업은행 4층 T. 063)232-7119 F. 063)232-8119
e-mail. jbngo@pspa.or.kr http://www.pspa.or.kr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활동규범

참여지향성

시민의 참여, 밝은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민과 회원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시민 있는 시민운동',' 열린 시민사회'를 지향합니다.

민주적인 지방행정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은 시민의 '참여'와 '공개'에 있습니다. 참여를 통하여 시민의 힘을 형성하고 열린사회, 진정한 시민주권을 찾는 것, 부정부패의 출발인 폐쇄성과 밀실성에 있습니다. 납세자로서의 시민권리를 되찾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전북시민연대가 함께 합니다.

연대성

시민의 연대와 교류, 열린 공동체를 열어 가는 초석입니다.

전북시민연대는 편견과 이기주의 벽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 속의 작은 권리를 찾아 갑니다. 작지만 큰 권리를 놓치지 않고 의로운 시민의 용기와 함께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이수모임을 다양하게 활성화 시켜 갑니다.

지역의 많은 민간사회운동과 연대하여 우리민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대안성과 합리성

합리적 대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탁상행정, 폐쇄성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지역사회의 유능한 전문인력이 능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비판이 아닌 잘한 부분은 널리 전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도•시정•사법 등 지방권력과 지역 사안에 대한 정책연구 활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예산낭비 사례 공개 및 부패추방 등 전문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합니다.

| 독립성

자율성과 시민재정,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전북시민연대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의 회비, 후원금, 재정사업으로 마련하여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단체입니다.
순수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탈피하고 시민단체 고유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활동을 전개해야합니다. 또 제반 제도권의 정치적 과정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중립성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20주년 활동백서 목차

- 한눈에 보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년
- 발간사
- 일러두기
- 연혁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안내 / 활동규범

제1장 출발과 다짐

창립 배경 / 경과보고 ····· 023
창립선언문 / 창립총회 회의록 ····· 026

제2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활동 20년!

20년 활동 총평 및 분야별 총평 ····· 033
연도별 사업 평가(1999년~2018년) ····· 059

제3장 참여자치연대의 조직과 운영

의사결정기구 / 임원 및 사무처 / 회원 / 재정 ····· 247

제4장 '기억' 그리고 '사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년 평가와 전망**] 김영기 / 윤찬영 / 임성진 ····· 275
[**창립 20주년 특별좌담회**] 2011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동전 장보기 투쟁의 의미를 돌아본다 ····· 287
회원통신 200호에 담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발자취 ····· 302

제5장 활동기록(부록)

정관 ····· 311
후반기 10년 활동 연보 ····· 318
20년 성명 논평 목록 ····· 388
후반기 10주년 총회 결과 ····· 410
후반기 10년 결산 자료 ····· 446
CD에서 찾아보는 발간자료 목록 ····· 466

제1장

출발과 다짐

1. 창립 배경 ····· 023

2. 창립 경과보고 ····· 025

3. 창립 선언문 ····· 026

4. 창립총회 회의록 ····· 028

지역에 권력감시운동을 선언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군부독재를 몰아내고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 사회변화는 단순히 대통령직선제라는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것에 머물지 않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권리의식이 확대되었고 사회 개혁의 과제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9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우리사회에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 인식이 확대된 시기이다.

전북지역은 '전북시민운동연합'과 '전주시민회' 등의 시민단체가 결성되었으나 지역사회 전반으로 보면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와 인식이 조금 늦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민중운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정치 운동'과 '시민운동'의 갈림길에서 그동안 활동해왔던 활동가들의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 부분도 원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길을 선택한 박종훈, 김영기, 김남규, 이종명 등의 활동가들이 단체 창립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는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졌다. 준비위원회를 결성(1999년 8월)하고 사무실을 전주시 경원동에 마련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단체를 창립하자'는 원칙을 제시하고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정보공개청구운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업무추진비 공개청구활동,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활동, 박원순 변호사 초청강연회 등을 진행했다. 회원을 160명으로 확대했고 1999년 11월 29일 오후 7시 동학혁명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거행 했다.

창립총회에서는 행정감시운동(도·시정감시)과 부정부패추방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사회복지활동, 올바른 정책생산을 위한 활동 등의 활동 방향을 결의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며 지역의 원로, 전문가 그룹과 회원이 힘을 합쳐 시민운동의 새장을 열어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단체 운영 원칙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원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재정의 '자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밝은 세상 투명한 사회', '시민의 힘, 세상을 바꿉니다'를 슬로건으로 과거 활동 방식에 대한 진지한 자기부정을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참여형 단체의 위상을 정립해가기로 결의하였다.

창립 이후 준비위 시기부터 진행된 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운동과 한국통신 통신비 반환운동, 지방의회.공무원 해외여행 정보공개청구 및 개선방안제시,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전북연대결성 활동, 도의원 해외연수회비 횡령 혐의 검찰고발, 교육감 판공비 정보공개청구, 전라북도.전주시 판공비 정보공개청구와 분석결과 발표, 계도지폐지 공동행동,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상담센터 개설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00년(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의 시민단체가 총망라된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는 한편 전북총선시민연대에 상근활동가를 파견하는 등 정치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창립 경과 보고

1999년 3월

지방권력(정부)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시민운동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새로운 시민운동단체 준비모임'을 구성하면서 출발하였다.

3~6월

준비모임은 제안문을 작성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뜻 있는 인사들에게 제안하고 준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6월 22일 준비모임**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시민운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박원순 참여연대사무처장을 모시고 시민강연을 개최하여 새로운 시민운동단체의 상과 활동내용을 모색하였다.

7월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회원과 함께 내딛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동안 참여한 약 50여명의 준비위원을 모시고 전체모임을 갖고(가칭)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여태권 목사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준비위원회 발족 식에서 "시작을 함께 열어 가는 창립준비위원들은 우리 단체의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힘으로 현 소재지인 기업은행 4층에 10년 활동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8~9월

사무실 집기와 살림살이가 회원들 한분, 한분의 정성으로 마련되었고 사무실 입주식을 하였으며, 자치단체 및 지역 사안에 대한 논평발표와 연대사업 등 일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0월부터는

새로운 천년을 단체 창립과 더불어 맞이하기 위해 각계전문가 영입, 조직인선작업, 회원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준비위원회는 특히 말보다는 실제 사업을 통해 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도정감시팀의 '전주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운동'으로, 작은권리팀의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 운동'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80여명의 준비위원과 90여명의 후원(자료)회원을 함께하여 창립기금모금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감격적인 2009년 11월 29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창립 선언문

우리는 지금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권위주의 통치와 억압, 빈곤과 소외, 불평등과 공동체의 해체, 분단과 이념의 대립 등으로 사람들의 삶에 짙은 얼룩을 새겨둔 시간이었다.
지금 약간의 열려진 공간은 수많은 선구자들의 값비싼 피와 희생, 그리고 시민들의 노고가 만들어 낸 열매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억압과 성장이 지배하던 지난 시대를 마감하고 자치와 창의가 존중되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고도의 물질적 경제성장 신화를 만들어냈지만 그 빛만큼이나 어두운 그늘도 사회 곳곳에 드리워 놓았다. 강권적인 군사독재는 국민들의 거대한 민주화의 물결 속에 굴복하여 사라졌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자치시대의 개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보리고개를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국민대다수가 기본적인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온 나라를 덮친 경제위기는 우리경제의 허실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거리에 내몰린 실업자 군, 소위 80. 20현상이라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 최저생활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가구가 18%에 달한다는 통계수치, 빈곤하기 짝이 없는 복지수준과 사회 안전망 시스템 등은 모두 우리의 치부에 다름 아니다. 무절제한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은 보존해야할 환경을 파괴하고 무한경쟁의 논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아 이웃간의 참다운 유대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지역을 소중히 여기며 시민의 '참여'와 '자치'에 근거하여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오늘의 시대는 시민의 민주적 자각과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나아가 시민자신이 문제해결의 주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행정참여와 감시가 일상화되고 있지 못하며, 아직도 폐쇄성과 밀실성은 공직사회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야할 정당은 당리당략에 빠져있고, 국민의 입과 귀 역할을 해야할 언론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만이 진정한 시민주권을 찾아가는 힘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는 지역주민의 작지만 큰 권리를 되찾는데 눈을 돌리고 생활과 문화가 일체화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시민운동의 힘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자율성은 시민단체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다수시민의 참여를 통한 독립적 재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는 밑바탕이 됨을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의 주장을 펼칠 것이다. 합리적 대안과 정책으로 접근할 것이며 공익을 우선하면서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열려있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한 사람의 꿈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는 믿음과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밝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꿈을 꾸자고 감히 제안한다.

다가올 세기는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열린 공동체, 풀뿌리 자치와 환경보존에 근거한 지방화, 창의와 이웃이 존중되는 열린교육 등이 화두로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대해로 나아가며,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이라는 미래의 희망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200만 전북도민의 품안에서 인간과 복지, 연대와 공동체, 자율과 창의, 참여와 자치가 살아 숨 쉬는 좋은 세상, 지역사회를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1999년 11월 29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립총회 회의록

- 일시 | 1999년 11월 29일 오후 7시
- 장소 | 풍남동 동학혁명기념관

■ 참가자

1) 회원 : 49명

강요현, 김남규, 김남직, 김봉렬, 김수돈, 김영기, 김윤수, 김주진, 김현우, 노동길, 노재중, 박노성, 박종훈, 박찬서, 박창수, 백종만, 백남운, 이희승, 임남수, 이태영, 양선호, 여태권, 이경한, 이문옥, 이미진, 이선조, 이수근, 이윤성, 이윤애, 이일섭, 이종명, 이해길, 이해범, 이형미, 이희성, 이희승, 전상호, 정상덕, 조성용, 유종완, 이석영, 정재욱, 조중길, 최성식, 홍경준, 장진호, 최 형, 김효숙, 나인경

2) 사고회원 : 2명 박창신, 박은주

3) 사전연락 : 6명 김광수, 김영훈, 김현옥, 문병학, 박찬기, 조정곤

■ 참가내빈

1. 민사협 (한규채목사, 이재규사무처장)
2. 전북시민운동연합 (최형재사무처장)
3. 전농전북도연맹 (이선형 사무처장, 황만길 정책실장)
4. 전북연성단체연합 (김금옥 사무처장)
5. 새전북포럼 (손성모)
6. 전북민미협 (진창윤 사무국장, 송만규 화백)
7. 참여연대 (김형완, 이재명)
8. 인권선교협의회 (사무국장 최재훈)
9. 전교조 (지부장 차상철)
10. 기독살림여성회 (최은미 회장)
11. 전주시민회 (염경형 사무처장)
12. 목정평 (송경숙 목사)
13. 교육위원회 (의장 유홍영)
14. 전북대 김의수 교수
15.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 (박일범)
16. 전교조 전지부장 (이미영 선생)

■ 회의록

1. 여태권 준비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니 7시 20분이더라. 준비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다.
2. 최형 선생님의 축시 낭송이 있다.
3. 박종훈 준비위원회 사무처장이 내외빈을 소개 하다.
4. 서울 참여연대 김형완 연대사업국장과 한규채 민사협대표의 축사가 있다.
5. 총회서기로 이미진, 이종명 회원을 선임하다.
6. 김남규 회원이 성원보고를 하다.
   총원 84명 중 사고2명, 출석인원 49명으로 정관 제3장 12조에 의거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하다.
7. 김남규 회원이 경과보고를 하다.
8. 김영기 회원의 정관 설명이 있은 후 수정안을 받아 승인하다.
   ① 정관 제정 제1장 4조 2항
   : 기업을 기업활동으로 수정제안하고 승인됨
   ② 정관 제3장 4절 19조 1항
   : 공동대표는 전북시민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대외적으로를 삭제)로 수정 제안하고 승인됨
   ③ 정관 제3장 4절 21조
   :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인사를 삽입)으로 수정제안하고 승인됨
9. 임원선출로 들어가 여태권, 이선조, 백종만, 이석영, 박창신 공동대표를 박수로 받고 선임하였으며 대표인사말을 듣다. 이어 감사에 강요현, 이해길, 김윤수 회원을 선임하다.
   사무처장에 준비위원회 박종훈 사무처장을 선임하다.
10. 운영위원 선출에 들어가 자동직 운영위원(공동대표 5인+이경한, 이종혜, 박종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자동직 운영위원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11. 박종훈사무처장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승인하다.
12. 여태권 대표가 폐회 선언을 하니 9시 5분이더라.

1999년 11월 29일 총회서기 이 미 진
이 종 명
공동대표 여 태 권

제2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활동 20년!

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년! 사업 총평 ····· 033

2. 연도별 사업평가(1999~2018) ····· 059

※ 2013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정보공개 실태 조사 ····· 137

※ 2013 전주시내 중·고등학생들의
제빵·제과점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146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년! 사업 총평

창립 2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지난 20년의 사업 총평은 1990년대 ~ 2019년 현재까지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적으로는 '80년 광주 민주화항쟁'과 '군부독재' '87년 6월 민주화항쟁' '97년 IMF'가 있었고 이후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이 심화되었다. '소득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고착화됨으로써 시민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변화를 겪었다. 한마디로 보면 'IMF 체제'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 시민의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년 역사를 먼저 시기별로 구분해 맥락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는지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성명·논평·보도자료를 첨부했다.

■ 시기별 사업 총평

창립(1999년) 당시는 전국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설립되고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형식적 민주주의 한계, 즉 정치적으로는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여전히 정·경 유착과 부패가 판치고 재벌기업의 부실한 경영이 국가 부도사태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NGO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고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박종훈, 김영기, 이종명, 김남규 등)이 고민한 산물이다. 1999년 초에 단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1월 29에 창립했다. 시민운동의 전성기라고도하는 이 시기에 진행된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은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군부독재 잔재 청산과 부정부패 정치인을 청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창립을 준비하면서 '정보공개청구운동'과 '정치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갔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사업'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우리사회의(정치·행정·경제·언론) 영역에서 기득권의 유착, 밀실행정, 부정부패를 청산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다. 정보공개사업은 업무추진비(판공비), 언론홍보비, 계도지 예산, 국회의원정치자금 사용 내역 공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사회 각 영역에서 개혁의 요구가 한층 더 구체화되고 높아진 시기이다. 참여정부 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개혁과제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전국네트워크(연대)가 생겨났다. '부패방지네트워크' '지방분권네트워크'등이 운영되었다. 전국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에도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졌다. '전주경전철도입반대' '부안핵폐기장건설반대' '도지사경선비리진상규명'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시민운동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화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확장된 반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제도정치권에 들어감으로써 거꾸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활동가 역량이 축소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주장했던 개혁안들이 법제화(제도화)됨으로써 의제형성 역할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활동가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긍정적으로는 제도권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실현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행정의 주변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이 높아졌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세 번째 시기는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이다. 다시 들어선 권위주의 정부, 깊어진 신자유주의 병폐 앞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전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후퇴된 상황에서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사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각론에서의 개혁 과

제는 권위주의 정부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한·미 FTA-미국산쇠고기수입' 문제와 '용산참사' '쌍용자동차사태' '4대강사업' 등으로 시민운동은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야했으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심화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87체제의 한계, IMF 이후의 한국사회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국적인 시국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한편 '지역'이라는 의제를 꺼내 들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중앙정치에 종속되었고 정권을 교체했으나 지역민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역의 낙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탈출구 없는 터널'이 되었다. 전국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을 바꾸는 것이 과제이지만 지역에서는 '지역 토호세력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총선에서 '무늬만 지역정치인' '낙하산 정치인'들의 공천을 반대하고 관료 중심의 지역정치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경제 문제에서 '대형마트 입점 반대운동'과 '유통법 개정운동' '동네빵집 살리기' 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진입으로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소상인들과 연대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도입을 포함한 유법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정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LH본사 경남 이전' 결정은 전북의 무능한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네 번째 시기는 '광장'의 시기이다. '광우병의심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촛불' 등 시민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국민주권이다. 시민운동은 광장의 뒤에 서야 했다. 시민단체의 주도성마저 부인한 광장에서 시민단체의 몫은 자원봉사였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시민단체를 매개로 했던 지난 시기의 방식을 뛰어넘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경직된 형식이 더 이상 역동적인 광장을 담아낼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87'체제와 97'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한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20년은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이 요구에 따른 변화를 함께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거의 운영구조, 사업 영역에 머무르며 변화의 물결에 조응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새로운 20년은 사업 영역, 의사결정 방식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재정까지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 분야별 사업 총평

1. 정보공개사업(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확보사업)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년 12월 31일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제정했다. 정보공개법은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시민과 시민운동에 많은 것을 제공했다.

단체의 초기 활동은 주로 정보공개운동이었다. 1999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주로 '업무추진비 공개사업'(도지사, 교육감,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 공개운동' '시·군계도지 구입 현황' '지방의원 해외여행 실태조사' '언론 홍보비 지출현황' 등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20년 동안 정보공개 사업에도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정보공개 사업은 정보공개 제도를 정상적으로 작동(공개와 비공개의 다툼)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점차 사전정보공개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질(정보의 활용)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개발 사업의 출발이 되는 각종 용역 보고서를 입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 대형마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정보공개를 진행하는 한편 이러한 조사를 행정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했다. 또한 대학등록금 사용 실태,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학교운영지원비 실태조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했다.

※ 다음 표는 정보공개사업의 일부를 예로 제시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활동연보'와 CD에 첨부된 '발간자료목록', 연도별 사업평가서, 단체홈페이지(www.pspa.or.kr)를 참조바란다.

‘민간지원예산 실태조사’(2006년~2008년)
‘전라북도초등학교방과후학교운영실태조사’(2007년)
‘전라북도·시군 업무추진비공개현황조사’(2008년)
‘전라북도 4년제 대학 등록금 예·결산 현황 조사’(2009년)
‘전주시영구임대아파트지원현황조사’(2010년)
‘전주시보도블럭교체현황’(2011년)
‘전북교육청관내급식사고발생현황’(2011년)
‘전라북도공공기관정보공개 실태조사’(2012년)
‘고용노동청진정접수현황및사업장지도점검현황조사’(2013년)
‘전라북도지자체학술용역공개실태조사’(2014년)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조성사업사업조사’(2015년) ‘전라북도재난안전관련예산현황’(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지방의원재량사업비편성및집행내역’(2017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구성및행정정보공표현황’(2018년)
‘전주종합경기장이전사업관련’(2019년)

2. 행정 감시사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창립 때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결의했고 지난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다. 행·의정 감시사업은 지방권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활동영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전반기 10년의 행정감시사업은 행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하고 있는 계약 비리, 인사비리·관언 유착·예산낭비에 초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업무추진비 공개’사업이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접대하고 현금으로 격려금을 주는 관·관 접대, 언론사 기자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관·언 유착,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각종 식사비나 선물 등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업무추진비 공개 요구에 대해 전라북도가 사본 공개를 거부하고 열람을 결정하자 회원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1만 2천 페이지의 사본을 ‘필사’했던 것은 전국적인 사례가 되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단계에서 사업을 막아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시경전철'사업이다. 사업을 합법화하는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형적인 수법으로 '공사비는 축소하고 이용률은 높이는 방법'으로 눈속임하려는 전주 경전철 사업을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막아냈다. 눈속임 용역으로 진행한 타 도시 경전철(도시철도)사업은 거의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경전철 사업이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주 경전철 도입을 막아낸 것은 우리단체와 시민의 큰 성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감시 사업에서 특징은 '민간지원예산 실태조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보조금 지원의 원칙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시·군 지방정부에 구제척인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특정업체와 유착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청렴계약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2006년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조례(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전주시첨렴시민감시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후반기 10년 동안의 행정 감시사업은 전반기에 비해 사업 내용이 다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초기부터 진행해왔던 정보공개 사업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조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각종 학술·연구용역 공개 실태조사'등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인사특혜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했고, 특정 산하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인사청문회'를 도입하도록 촉구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지방재정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지방재정 수익 결산 분석, 지방교부세 수입 분석'등을 진행하였다. 행정감시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 조사 및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나아갔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를 조사했다. '전주시상수도블럭화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에 대해 1차 인상에 이은 2차 인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체 선정에서 장기 연장 계약이 되고 있는 특혜성 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전주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후반기 10년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주시시내버스 문제' 해결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관한 사업이다. 전주시시내버스 문제는 2011년 '통상임금과 버스재정의 투명성' 문제 등을 제기한 민주노총의 파업이 장기화되었다. 시내버스문제는 이후에 우리 단체가 참여하는 '전주시시민의버스위원회'라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활동함으로써 노·사 갈등 조정, 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활동의 성과를 이루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현재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시민의 땅에 재벌기업이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으로 출발하여 종합쇼핑몰, 대형백화점 건축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12년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발의 문제점을 알려낸 것이다. 이후 지역 중소상인과 함께 투쟁한 결과 쇼핑물(롯데) 개발 계획을 백지화 시켰으나 김승수 시장이 공약을 어기고 다시 롯데백화점을 이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성명·논평·보도자료 발표 현황 - 행정감시사업 분야 총 92건 〉

1999	성 명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조건 없이 공개하라!
1999	성 명	전라북도체육회 산하경기단체장에대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일제추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2000	성 명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시민연대 입장

2000	보도자료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시민의 힘으로 받아낼 터
2000	보도자료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운동 전국 400여개 단체가 나섰다.
2000	성 명	고창경찰서는 고창군으로부터 받은 격려금에 대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00	보도자료	전라북도, 전주시 판공비 분석결과 시민연대 입장
2002	논 평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평
2002	성 명	전주시 경전철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03	성 명	경전철 관련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3	성 명	또다시 추진되는 경전철 관련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 대한 입장
2003	성 명	전주시장의 경전철 재추진 발언을 규탄한다.
2003	성 명	전주시 의회의 경전철 날치기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3	성 명	경전철 날치기 배후조종 김 완주 시장을 규탄한다.
2003	성 명	9월 9일 경전철 날치기는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2003	성 명	푸른온고을 21(운영위원장 허종현. 사무국장 오창환)의 행태를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한다!
2004	성 명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중징계 하려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4	성 명	공노총전북도청지부와 도의회 일부의원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2004	성 명	송천동 메가월드 관련 수사를 촉구한다.
2004	성 명	경전철 유보에 대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입장
2004	성 명	전주노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방식 획책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라!
2004	성 명	전라북도는 전주시 경전철 사업을 즉각 중단 시켜야 한다!
2004	성 명	전주시의 파행적인 경전철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2004	성 명	실정법을 우습게 여기는 전라북도를 강력 규탄한다!
2005	논 평	전라북도 '소모성, 낭비성' 신청사 개청행사를 개탄한다
2005	성 명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환영하며 전라북도는 이를 수용하라
2005	성 명	전북도는 군산시민을 현혹시키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하라!
2005	성 명	전라북도는 전주시 경전철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2005	성 명	노면경전철을 이용한 김완주 시장의 전시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2005	성 명	정보공개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전주시를 강력 비판한다!
2005	성 명	정보공개법의진정성을훼손하는전주시를강력비판한다!

2005	성 명	정보공개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전주시를 강력 비판한다
2005	성 명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환영
2005	성 명	전주시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및 운영조례안 부결을 강력 규탄한다.
2005	성 명	전주시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 부결을 강력 규탄한다.
2006	보도자료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14개 시.군 민간지원예산 지원현황 분석 보고서
2006	보도자료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민간지원예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06	논 평	2007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지업사업과 관련한 논평
2006	논 평	2007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지업사업과 관련한 논평
2006	성 명	이병학부안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6	성 명	전라북도 금고 협력기금 집행 결과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
2007	성 명	민선 3기식 발상 '관주도 도민운동' 지원 계획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07	성 명	비리 혐의로 직무정지 상태인 김진억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2007	성 명	테스코사는 부당한 관례를 앞세워 전주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2007	논 평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위촉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2008	성 명	전주시보건소장의 장기공백, 전문의료인으로 해소해야 한다.
2008	성 명	송하진 전주시장은 무원칙한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09	성 명	전라북도는 도립국악원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2009	성 명	전주시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례제정을 환영한다.정 보공개조례에 근거한 행정정보공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010	성 명	김완주지사는 기자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2010	논 평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매지 마라! -전주시 시설공단 특채와 관련
2010	보도자료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2009년 수익 결산 분석 자료
2011	논 평	전라북도 도시가스요금 소폭인하는 시민홍보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2011	성 명	전라북도는 도시가스요금 추가인하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2011	성 명	노•사 양측은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011	성 명	버스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2011	성 명	전주노동지청의 '불법파업'규정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재고되어야 한다.
2011	성 명	버스 파업 사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한다.
2011	논 평	버스파업의 해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22일 대타협을 통한 버스파업 해결을 기대한다-

2011	논 평	버스파업의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를 환영한다.-성실한 합의 이행을 위한 성숙한 노사관계를 기대한다
2011	보도자료	전주시장, 전주시의회의장께 드리는 전주시 수도요금 인상 관련 공개 질의
2011	성 명	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 전주시장은 시민들께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	성 명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 버스요금 인상 기정사실화 절대 안 된다
2011	성 명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 버스보조금 지급 있을 수 없다.
2011	논 평	전라북도의 중학교 의무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한다.
2011	성 명	김완주 지사는 '도청 광장'을 닫고서 도민 소통 운운하지 말라!
2012	성 명	LH는 전주 효자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라.
2012	성 명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특혜시비 수의계약연장을 중단해야한다.
2012	보도자료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목합단지 개발사업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2012	성 명	종합 경기장 이전 개발 사업이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2012	성 명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개획 백지화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시민문화공원 조성방안 등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12	성 명	전라북도는 전주종합경기장 양여 조건 변경하고, 전주시는 전주•완주 통합 결정 이후로 사업을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2	보도자료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부의 지역 차별과 특정지역 편중예산 의심
2013	논 평	전주문화재단 횡령사건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의 회전식 인사 개선해야 한다.
2013	보도자료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정보공개 실태 조사 결과
2013	보도자료	정보공개 실태 조사 결과에 '날조 운운하는 전북교육청의 발언'에 심한유감을 표한다.
2013	성 명	전주시는 롯데쇼핑 입점 추진을 멈추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2014	성 명	롯데쇼핑 입점에 대한 행정적 청산 없이 일방적인 컨벤션센터 건립은 절대 안 된다.
2014	보도자료	전라북도 지자체(시·도) 학술연구용역 공개실태 조사분석
2015	성 명	전주시 다가동 29층 아파트 건축 심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전면 보완하라!
2015	논 평	종합경기장개발 4자 협의,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한다.
2015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방식 폐기를 환영한다."
2015	논 평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도내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016	논 평	정치적 갈등을 키울 뿐 실익이 없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폐기 논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	논 평	대한방직 부지개발, 특혜시비 해소가 먼저다
2018	성 명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	보도자료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2018	보도자료	전북도 지자체(시·군)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회신결과
2019	논 평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2019	성 명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돌고 돌아 다시 롯데, 김승수전주시장은 롯데와 협의를 중단하고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2019	성 명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땅! 롯데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2019	성 명	전주시의 일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들러리선 전주시의회의 무능력과 답답함을 개탄한다

3. 의정 감시사업

의정감시 사업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활동 즉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에 대한 것과 관행처럼 되어버린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을 차단하는 이해 충돌 방지 사업이 중심이다.

시기별 흐름으로 보면 초기에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중반기에는 지방의원 윤리조례 재정을 비롯한 이해충돌 방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지방의원의 겸업겸직 실태 조사, 재산등록 현황 조사, 재량사업비 폐지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방의원 해외여행의 문제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98~99년 지방의원 해외여행 전수조사 보고서는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이후 해외여행 심의위 구성과 보고서 작성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조례 재정 사업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부패방지 사업에서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직자 재취업 제한,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조례를 재정하여 지방의원의 윤리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업겸직 실태 조사와 재산등록 현황 조사, 지방의원의 비리 온상이 된 재량사업비 폐지 운동을 진행하였다.

전라북도는 특정정당의 독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단체장 지방의원이 같은 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이른바 '짬짬이' 폐해가 심각하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보다는 선거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작동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지역사회를 '관과 지방정치의 주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행·의정 사업은 지역정치와 지역사회에 건강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성명·논평·보도자료 발표 현황 - 의정감시사업 분야 총 78건 〉

2000	성 명	도의회는 해외여행과 관련한 여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2000	보도자료	유철갑의원 해외연수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00	논 평	행자부의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비 제한 방침에 대한 논평
2001	성 명	교육위원회는 비리의원을 감싸는 것이 의리라고 착각하지 말라
2001	논 평	행자부의 지방의회의원해외연수비 제한방침에 대한 논평
2001	성 명	유철갑 도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시민연대 입장
2001	논 평	전주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논평
2002	성 명	전주시의회 폭력사건에 대해 의장단의 책임 있는 조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3	성 명	건설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전주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규탄한다.
2003	성 명	전주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규탄한다.
2003	성 명	유철갑 의장은 적반하장과 안하무인의 태도를 즉각 사죄하라
2003	성 명	유철갑 도의회의장은 …선거법위반 선처 탄원행위를 즉각 취소하라
2003	성 명	전주시의회는 성추행 관련 의원을 의원총회를 열어서 즉각 제명시켜야 한다!
2004	성 명	전라북도 의회의 파행을 강력 규탄한다!
2005	성 명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의 '술판 의정활동'을 강력 규탄한다
2006	성 명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전주시의회와 무능한 집행부를 개탄한다
2006	성 명	전라북도의회는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철회하라
2007	논 평	만취운전 시의원, 용납할 수 없다
2007	논 평	만취운전·부녀자폭행, 전주시의원들의 추태에 경악한다
2007	성 명	연봉 올리기에 급급한 의정비 책정 재고해야한다
2007	성 명	과대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
2007	성 명	완주군과 진안군 의회는 의정비 인상안을 재고하고 자진 삭감해야 한다
2007	보도자료	전라북도내 16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2008	성 명	겸직과 이해충돌이 가능한 상임위 배정을 반대한다.
2008	성 명	전주시의회의장 선거, 교황선출방식은 안 된다
2008	성 명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의 금품거래 의장단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실을 알리는 양심선언을 촉구하며 의원 소속정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2008	성 명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시의원 사퇴는 용납할 수 없다.
2008	보도자료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사결과
2008	성 명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부결에 개탄한다.
2008	성 명	지방의회 의장단선거의 금품거래를 개탄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2008	성 명	전주시의원의 전주시립어린이집 수탁신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8	성 명	전주시의회 김철영 의원의 전주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자진 양보를 환영하며 단체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한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08	성 명	09의정비심의, 지방의회를 지역주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9	성 명	전주시의회 유재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2009	성 명	전주시의회가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실질적인 의회윤리회복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
2009	성 명	전주시의회는 정우성의원 사태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2010	보도자료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 이해관계(겸업,겸직) 회피를 위한 방안 모색 조사
2010	논 평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입후보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2010	성 명	전북도의회 이현주의원 본인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0	성 명	이현주 도의원은 투기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
2010	논 평	전북도의회 이현주의원 부동산문제 의혹해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0	논 평	11월 29일 〈논평〉 민주노동당 이현주의원 징계조치는 정치적 면피에 불과하다
2010	성 명	11월 11일 〈성명〉 임동규 도의원이 발의한 시대착오적인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0	논 평	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발생한 기표 공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선거법 적용이 필요하다.
2010	논 평	도의회 의장단선거 금품수수설 수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0	논 평	지방의원 이해관계 회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011	성 명	민생을 저버린 김호서 의장의 떳떳하지 못한 골프외유를 개탄 한다.
2011	성 명	검찰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관여 여부 수사를 촉구 한다.
2011	성 명	일제 만행 전범 행위를 찬양한 전주시의회 김윤철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1	성 명	전주시의회 김윤철의원을 비호하는 의원들을 규탄한다-망언의 당사자는 즉각 사퇴하라-
2011	성 명	김윤철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2011	기자회견	김윤철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전주시의회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2	성 명	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어려운 주민 살림과 지방재정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2012	성 명	불법영업 의원, 돈봉투 여행 의원에 눈감고 전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절대 안된다.
2012	성 명	도의회의 책임 없는 면피용 사과, 도민을 우롱하지 말라!
2012	성 명	N타운웨딩홀의 교통영향 평가 관련 노석만도의원의 사과와 전라북도는 교통현실을 반영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
2012	성 명	N타워웨딩홀 불법영업 책임지고 노석만도의원 자진 사퇴해야한다.
2012	성 명	도 금고 선정을 앞둔 돈 봉투 사건, 도의회는 해당의원들 징계하라!
2013	성 명	전북도의회는 '품앗이 서명 의혹'과 '도교육청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	성 명	지역구 챙기기의 전형,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와 의장의 사과와 대책을 촉구한다.
2014	성 명	롯데쇼핑 이익을 대변하는 이미숙의원은 의원자격 없다.
2015	성 명	전북도의회 '갑질·음주 의원'에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
2017	논 평	의원 갑질 논란,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해야 방지할 수 있다
2017	성 명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재량사업비도 즉각 삭감하라
2018	논 평	오평근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2018	보도자료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및 겸직신고 내용 전수조사 요청
2018	보도자료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2018	성 명	국회만 바라보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
2018	보도자료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3,4인 선거구 확대, 전주시의회 선거구 광역의회선거구 그대로 - 전라북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의견 전달
2018	성 명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의원 쌈짓돈, 재량사업비 부활 절대 안 된다
2018	성 명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
2018	성 명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의정비 인상안을 완주군의회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2019	성 명	완주군의회는 몰염치한 의정비 인상 중단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을 부결하라
2019	보도자료	"주민 반발은 안중에도 없나?" 의정비 조례개정안, 상정 5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 내일(22일) 오전 10시 본회의도 공동방청 진행한다

2019	보도자료	완주군의회 의정비 개정조례안 깜짝 부결
2019	성 명	완주군수는 의회의 의정비 인상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2019	성 명	완주군 호정공원 개발 사업 비리 의혹 밝혀야한다.
2019	성 명	최찬욱 도의원의 호정공원 개발 관련 건설업체 주식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사업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4. 정치개혁 사업(각종 선거 대응사업 포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0년간 진행한 정치개혁 사업은 ① 부패정치인 퇴출(2000년, 2004년 총선시민연대) ②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운동 ③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검증 및 정책제안 사업 ④ 지역정치 혁신사업(낙하산 공천 반대, 무늬만 지역 출신 공천 반대, 지역민의를 왜곡하는 관료정치 혁신) ⑤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체 창립 초기인 2000년~2004년에는 '전북총선연대'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주요 활동은 독재정권에 부역했거나 부패·비리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낙천·낙선운동이었다. '정치인 물갈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정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국민들의 성원 또한 뜨거웠다. 그러나 과거의 부패정치인 몇몇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정치개혁 사업은 정치제도의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되었다. 정치인의 부패를 낳게 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의 개정, 선거공영제 확대,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과 여성할당제 도입, 정당법 개정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권위주의의 산물인 제왕적 총재 체제에서 낙하산식 공천을 없애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지역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공천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주민참여) 공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형식만 주민참여 방식일 뿐 여전히 중앙당에 줄 세우기식 공천이 진행되었고, 선거에 즈음하여 지역정서를 모르는 무늬만 지역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귀향이 성시를 이루었

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는 없고 중앙정치에 여전히 예속되었으다. 지역의 실정도 모르는 국회의원들 손에 지방의원의 공천권이 맡겨져 지역 정치가 실종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역정치 혁신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 정책 검증 및 정책제안 운동을 진행했다. '2002년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 시민공약' '2006년 5·31 지방선거 사회복지, 행정자치교육분야 정책공약' '총선 입후보자 정책공약 및 5대 민생과제와 입법과제 검증' '2009년 4·29 재선거후보자, 정책공약 비교분석' '2010년 좋은 정책 만들기 6·2지방선거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 결과 발표' '2012년 지역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총선 정책과제' '2018년 6·13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우리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 사업을 진행했다.

최근 정치개혁 사업은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소도시와 지방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욱 약화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판결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었다.전체국회의원 의석수의 절반을 수도권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군단위 선거구는 3~4개가 통합되어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권역별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고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영·호남 정치개혁선언'과 '정당법 개정'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 사업을 지역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 성명·논평·보도자료 발표 현황 - 정치개혁사업 분야 총 96건 〉

2000	성 명	2000년 총선에 대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입장
2000	논 평	여야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2002	논 평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추대에 대한 논평
2002	성 명	양측 후보는 도민들을 믿고 완전한 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2002	논 평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대한 논평
2002	논 평	정치자금법 개정하고 수입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003	성 명	이회창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2004	성 명	철새정치근절에 역행하는 열린우리당을 비판한다
2004	성 명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력 규탄한다!
2004	성 명	6월 5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2004	성 명	이번 6월 5일 보궐선거에 출마신청한 현직 시.도의원은들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2004	성 명	도지사 경선 선거부정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5	논 평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역 기간당원의 문제점을 즉각 보완하라!
2005	성 명	강현욱지사는 경선비리전말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도민에게 공개사과하라
2005	성 명	강현욱지사는 경선비리전말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2005	성 명	경선비리 책임지고 강현욱지사의 즉각 사퇴와 정계은퇴를 요구한다.
2006	논 평	전주시축구협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2006	보도자료	2004년 하반기 전라북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실사 분석 보고 기자회견
2007	성 명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관련 검경의 엄정수사와 선관위의 공정조사촉구한다.
2007	보도자료	05년 전북지역 정치자금 분석결과
2008	성 명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입장
2008	성 명	통합민주당 공천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기회주의적 공천신청을 개탄하며 자진 철회해야 한다'
2008	성 명	합민주당공천혁명과 한나라당 30%비례대표약속 지켜야 한다.
2008	성 명	통합민주당 공심위의 무원칙한 인적쇄신을 우려한다.
2008	논 평	통합민주당 제18대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논평
2008	보도자료	총선 입후보자 정책공약 및 5대 민생과제와 입법과제 검증운동 전개한다
2008	논 평	통합민주당 전북도당과 후보들은 후보자법정방송토론회'가 성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008	보도자료	이제, 민생이다! '제18대 총선 후보자, 정책공약을 말한다'
2008	성 명	교육감선거에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호소합니다.

2009	성 명	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이명박-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한다는 전북도민과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2009	성 명	원칙도 명분도 없는 무소속연합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정치발전을 가로 막는 보스정치의 부활이다.
2009	성 명	유권자를 기망하는 낙하산공천으로 전주를 오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김근식교수의 전략공천 내정을 철회함이 마땅하다
2009	성 명	비리정치인의 정치복귀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한다.
2009	논 평	〈4.29재선거에 대한 평가〉 민주당은 전주시민의 변화의 바람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당선자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2009	보도자료	4·29재선거 후보 정책공약 검증과 민생 및 입법과제 답변결과 발표
2009	성 명	4·29 재선거 후보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후보토론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언론사 토론회 불참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2009	성 명	〈4.29재선거에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4.29재선거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합니다.
2010	성 명	민주당은 시민참여배심원제를 확대하고 지방의원 줄세우기식 공천을 중단해야 한다.
2010	성 명	민주당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한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철회 하라.
2010	논 평	정동영의원은 줄 세우기식 정치행보를 멈추어야 한다.
2010	논 평	불법 선거 철저한 수사로 당선이 면죄부라는 인식 바로 잡아야 한다.
2010	성 명	전라북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시도를 중단해야한다
2010	논 평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선관위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0	보도자료	'좋은 정책 만들기' 6·2지방선거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 결과보고서
2010	성 명	민주당 K모 의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해당의원을 징계하라!
2010	논 평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하려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일,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2011	기자회견	지역정치변화와혁신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2011	성 명	장세환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정권 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버릴 수 있도록 현역의원들의 결단을 촉구 한다.
2011	논 평	윤승호.강인형군수 확정판결에 대하여-유권자를 현혹하는 불법 선거행위는 뿌리 뽑혀야 한다.
2012	성 명	전략 공천 압력에 눈치만 살피는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과 비겁함을 규탄 한다.
2012	성 명	전주완산을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력 촉구 한다!
2012	성 명	정동영 의원의 지역 불출마 선언을 환영하며 지역정치 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 지역 다선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2	성 명	낡은 정치, 무능 정치를 혁신하고 전북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2012	성 명	낡은 정치, 대리정치 행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12	성 명	민주당 공천 갈수록 실망, 평창 땅 투기 의혹 후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2	성 명	고리대부업 주식 보유 후보, 전략 공천 절대 안 된다.
2012	성 명	정권교체실현을 위한 전북도민 호소문
2012	보도자료	지역가치 실현을 위한 2012 전북총선 정책과제 발표
2012	성 명	국민참정권 확대! 투표시간 연장 하라!
2012	성 명	4.11총선, 미래에 투표합시다!
2012	성 명	'나는 투표하는 시민!' 투표참여 켐페인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
2012	성 명	미래를 여는 소중한 선택, 도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2013	논 평	민주당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결정, 문제는 정치개혁과 민생이다.
2014	논 평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과 신당 창당 선언을 환영한다.
2014	성 명	정치권은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과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2014	성 명	새정치연합 공천파행, 주민 무시 독선과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
2014	성 명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 범민주진보 교육감후보 추대위의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에 불과하며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2014	성 명	지방권력 독점,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자.
2014	성 명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	성 명	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2014	성 명	'토론기피'는 '도민기피'이다. 중앙당 눈치만 보는 구태정치 중단하고 주민 앞에 당당히 나서라!
2015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 청산을 위한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2015	보도자료	비례대표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시민홍보캠페인
2015	논 평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지키려는 새정연,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2015	성 명	영호남 정치개혁 2차 선언
2015	논 평	새정연 윤리심판원 징계결과 보니 '역시나 말로만 혁신'
2015	논 평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단순 인구비례 권역별 의석배분 문제 있다.
2015	보도자료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2015	성 명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야한다.

2015	성 명	영호남 시민단체 정치개혁 공동성명
2016	성 명	전라북도 관건 선거 개입 의혹,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부터 나와야
2016	보도자료	['전북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문] 잘못된 정치를 바꾸기 위해 시민이 나섭니다.
2016	성 명	국회의원 보좌직원 친인척 채용 금지법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2016	논 평	여·야합의 선거구획정안은 지역대표성 약화와 승자독식
2016	논 평	투표율은 지역정치의 존재감과 비례한다. 사전투표부터 도민의 힘을 보여주자.
2016	논 평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을 되살리는 유권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2017	보도자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행동' 구성과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보도자료	촛불대선#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대선주권자행동
2017	보도자료	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2017	보도자료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시민을 정치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2017	성 명	촛불대선 국민의 승리로 만듭시다.
2018	논 평	민생보다 골프모임이 먼저인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사과하고, 골프모임에 불법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
2018	논 평	교육감선거 의혹 공방, 검경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	보도자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
2018	성 명	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2019	성 명	국회정개특위자문위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환영하며 연동형비례제는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

5. 민생사업

민생사업은 2010년에 민생사업국(국장 이창엽)과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운영위원장 김진왕)을 만들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에 앞서 2007년 전주 우아동 홈플러스가 차명으로 우회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이 시작되었고, 2007년 <현안토론회-대형할인점 입점과 지역경제>를 갖고 내부 학습을 통해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같은 해 '시민경제 아카데미'를 열고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 시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

형마트시민모니터단'을 구성했다. 모니터단은 현재 '시민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민생사업은 주로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문제를 일으킨 대형마트 입점저지운동이 중심이 되었다. 유통법 개정운동을 통해 '월 2회 의무 휴업제'와 '재래시장 반경 1Km 이내 대형유통점 입점 금지'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의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전주이마트 '10원짜리 동전장보기 운동'(2011년)을 진행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중소상인 카드수수료인하' '대형마트 이익 지역환원조사' '대형마트 지역산품진열분포도 조사' 'SSM 입점 대응 사업조정'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저지' '대상 입점저지' '지역 4년제대학 등록금 예·결산 현황 조사' '새만금카지노 입점 저지' '동네 빵집 살리기운동' '지방정부 유통상생조례 제정'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출점 저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성명·논평·보도자료 발표 현황 - 지역 민생사업 분야 총 55건 〉

2007	성 명	전주시는 삼성 홈플러스 임시사용 승인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
2007	성 명	삼성홈플러스 임시사용승인으로 인한 주민피해 책임은 모두 전주시에 있다.
2007	성 명	국회는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시장잠식으로 고사하는 지역경제의 회생대책을 마련하라
2008	성 명	대형마트는 지역이익환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08	성 명	대형마트 지역 외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2008	성 명	대형마트 지역 외면, 이제 시민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08	성 명	이마트는 지역이익환원 협약 체결에 나서고 주유소사업 확장을 철회하라.
2009	보도자료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도내 국회의원 모두 SSM 개설허가제 찬성
2009	보도자료	전북지역소재 4년제대학 등록금관련 예결산현황 조사결과 발표
2009	보도자료	대형마트 공산품 가격비교 조사 결과 - 지역법인 마트 가격 경쟁력 확인!!-
2009	논 평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주유소사업 진입에 대하여 사업조정심의를 해야 한다.
2009	성 명	지역외면· 쇼핑몰 유치, 전북대학교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2009	보도자료	지역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풀뿌리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출범
2010	보도자료	SSM(기업형 수퍼)과 동네수퍼 장바구니생필품 가격비교 조사 보고
2010	성 명	10월 27일 〈성명〉롯데수퍼 우아동개점을 즉각 중단하라
2010	논 평	식품안전 외면하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10	보도자료	대형마트 지역 외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0	논 평	한국인삼공사 대형마트 직영점 확대 철회되어야 한다.
2010	성 명	지역주민을 속이고 중소상인을 농락한 롯데수퍼의 기습적인 개점에 대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2010	성 명	서곡지구 SSM 기습인수 개점으로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GS슈퍼의 탐욕을 규탄한다.
2011	성 명	전라북도 유통상생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은 지역중소상인 보호에 눈감고 지방자치정신을 몰이해한 행위이다(전북중소상인네트워크)
2012	성 명	지역경제 파괴하고 중소상인 생존권을 유린하는 대상베스트코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탄한다.
2012	성 명	(주)대상의 파렴치한 식자재소매업 꼼수 진출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중소기업청은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2012	성 명	원안에서 후퇴한 유통법 개정은 국회의 민생외면 대기업 밀어주기이다
2012	논 평	전주시 '대형마트 SSM 월2회 일요휴무지정'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2012	성 명	개혁 대상 재벌기업의 후안무치한 '대형마트 휴무관련 헌법소원'을 규탄한다.
2012	성 명	서울행정법원 대형마트 판결관련 중소상인 시민사회 입장
2012	성 명	전주지방법원의 대형마트 관련 판결에 대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의 입장
2012	성 명	대형마트 일요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결정은 당연하다
2013	보도자료	중고생 빵집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13	보도자료	시내곳곳 패션상점 상인들 동네 빵집 살리기 나섰다
2013	논 평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억지에 원안에서 후퇴한 유통법 개정을 개탄한다.

2014	성 명	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15	성 명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도민호소문'
2015	논 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판결은 상생 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시작점이며 이를 환영한다.
2016	논 평	'군산롯데아울렛 입점 상권영향조사' 여론 호도해서는 안 된다.
2016	성 명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률개정' 중단하라!
2016	보도자료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 보도협조 요청
2016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들,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철회요구 기자회견 (10.20)
2016	보도자료	새만금 내국인출입 카지노 허용을 위한 '새만금특별법'개정 발의 관련 공개질의서 및 안건 폐기 요청서
2016	성 명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 관련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의혹 보도, 최순실 입법 로비 의심된다.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2016	성 명	전주시는 에코시티 대형쇼핑몰 입점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2016	보도자료	시민사회·중소상인 제안 3개 분야 우선입법과제 발표 공동기자회견
2016	보도자료	시민사회·중소상인 제안 우선입법과제 후보자수용성 평가 발표
2017	보도자료	골목상권, 중소상인살리기 정책 토론회
2017	보도자료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도민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2017	성 명	정부는 하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라
2017	성 명	전주시장은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 계획을 철회하고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8	성 명	GM군산공장 사태, 민·관·정 지역정치역량을 총 망라한 TF를 구성하여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8	보도자료	"이마트 노브랜드 익산(부송점)에 입점, 전라북도는 정말 몰랐었나"
2018	보도자료	익산 노브랜드(부송점) 사업조정을 전면 재협상하라!
2018	보도자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6·13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우리지역을 살리는 8가지정책
2019	성 명	정동영 대표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발언, 개탄스럽다
2019	성 명	이마트 노브랜드는 가맹점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2019	보도자료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2019	성 명	세상에 없던 새로운 꼼수출점, 노브랜드 출점규탄한다
2019	보도자료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출점 저지 및 전라북도 중소상인 투쟁지지 선언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6. 연대사업

연대 사업은 지난 20년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대사업의 세부 내용은 '10주년 백서'와 '20주년 백서 - 제 2장, 연도별 사업평가'를 참조 바란다.

연대 사업은 상설적 연대(가입과 탈퇴, 의무와 권리가 명시된 규약이 있고 정기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연대 기구)와 사안별·과제별 연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진행하며 과제가 해소되면 해체되는 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주요하게 참여한 연대 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설적 연대 기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전북연대회의)'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를 표방한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 창립 초기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정보공개운동' '정치개혁운동' '관료감시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을 비롯해 복지, 민생 등 영역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20년 사업은 이러한 연대 사업을 통해 더욱 공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범위의 상설적 연대기구로 지역운동연대가 있다면 전북지역에서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001년 창립)이다. 이 역시 단체 창립초기에 만들어져 20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전북연대회의는 현재 총12개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현안과 시국 집회 등의 공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설적 연대를 제외한 연대 사업은 사안별·과제별 연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주요 연대 사업 연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기 10년 동안 진행된 연대 사업이 후반기 10년 동안 진행된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전반기에는 개혁과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의 요구가 높았다. 반면 후반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를 거치면서 각각의 영역별로 연대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 환경, 여성, 복지, 노동, 인권 등의 영역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연대 역시 각 분야의 관련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후반기에 '광우병 대책위' '용산참사 대책위' '세월호 대책위' '박근혜퇴진 국민행동'등 시국 관련 연대 사업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 주요 연대 사업 연표 〉

연도	연대사업
2000년	2000년 총선시민연대/ 정치개혁
2000년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전북연대
2001년	전북연대회의/조선일보반대운동, 수돗물불소화운동,계도지폐지운동
2002년	불평등한 SOFA개정, 살인미군 처벌, 부시공개사과 시민촛불
2002년	친일청산운동/ 채만식,서정주 기념사업 반대
2002년	바른자치실현을위한 유권자운동본부
2002년	대선유권자전북연대
2003년	전쟁반대파병반대한반도평화실현을위한전북도민대책회의
2003년	화상경마장 진입저지운동
2003년	부안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 정책전환을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2003년	정치개혁전북연대
2003년	전주노면경전철반대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2004년	2004년 총선시민연대/ 정치개혁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 전북본부
2004년	경선비리강현욱지사 퇴진운동
2004년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전북도민운동본부
2005년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남측준비위원회 전북본부
2006년	2006 지방선거전북연대
2008년	광우병의심미국산쇠고기수입대책위
2009년	용산참사전북대책위
2009년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2009년	MB악법저지 민주회복전북도민회의
2009년	(가)민주회복을위한 전북시국회의

2010년	4대강사업중단 전북협의회
2013년	롯데쇼핑 입점저지 및 지역경제살리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2013년	국정 대선개입정치공작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
2014년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2015년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2016년	반GMO전북도민행동
2016년	박근혜정권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
2017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전북공동행동
2017년	2017대선 주권자 전북행동
2017년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2018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2018년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2019년	노브랜드전북대책위
2019년	모두를 위한 전주종합경기장 시민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연도별 사업 평가

(2009~2018)

2009년(제10기) 사업 평가

◈ 사업 기조(2009년)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반민생 정책 저지 지역 경제, 민생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회원 소통 공간 확대와 장기 발전 정책 수립
1.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민주·반민생 정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연대 2. 지역 민생관련 예산 확대, 공공 영역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촉구 3. 국회의원 보궐 선거-낙하산 공천 반대, 상향식 지역 인사 공천 촉구 4. 회원 소통 공간 확대, 창립 10주년 기념 - 장기발전 정책 수립

◈ 사업 총평

■ 2009년은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민주주의 후퇴' '민생위기' '남북관계 위기'로 시국이 더욱 요동쳤다. '용산참사'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쌍용자동차 폭력진압' '서해교전 재발' '시국선언 교사 징계' '공무원노조탄압' '행복도시 원안 수정' 등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지역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어 '행복도시 원안 수정' 결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완전 포기함으로써 혁신도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자감세로 인해 정부 교부금이 축소됨으로써 지방 재정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2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신당 추진 세력 등 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 지역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주 완주 통합 논의는 양 지역의 갈등만 심화 시킨 채 여론 조사 결과 결국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창립 10주년을 맞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백서'와 '단행본'을 출간하여 10년의 역사를 정리 기록하고 10주년의 의미를 돌아보았다.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

서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적극 대응 하였으며, 전직 두 대통령의 서거에 '도민 추모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활동 하였다. 또한 '용산참사 대책위' '미디어공공성위원회'에 참여하여 용산참사와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응하여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현 시국에 대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시국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였으며, '전주시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과 '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전라북도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 09년은 민생 관련 사업을 확대 강화했다. '4년제 대학 예•결산 현황'을 조사 발표하였으며, 특히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형마트 입점저지를 위한 법률개정 운동,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 중.소상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내용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모니터단은 두 번의 조사 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 민생과 지역 경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 하였다.

- 돌발적으로 발생한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 시국 관련 사업으로 인해 회원 사업을 비롯해 계획한 사업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사이버 사업을 안정화 시켰다. 10주년을 맞아 회원 배가 운동을 의욕적으로 계획했으나 시국 대응과 10주년 사업의 실무 부담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09년 12월 현재 763명으로 연간 200명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10주년 후원의 밤' 결과 후원금을 전년도 결산 대비 178% 달성하여 백서와 단행본 등 10주년 편찬 비용을 감당 할 수 있었으며, 회원의 정기 회비가 월평균 10,186천원으로 3년전과 비교하여 회원 정기 회비가 100% 증가했다.

- 2010년은 위기를 맞고 있는 시국에 대응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종교.학계 등 다양한 세력과 연대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운동을 통해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위한 과제, 10주년을 넘어 단체의 장기적 전망을 만들고 재정과 역량을 더욱 안정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분야별 사업 보고

1 정치·정세·시국 관련 사업

▶ 국회의원 재·보궐 대응 사업

1. 주요사업 추진일정

▶ 2월 12일 <기자회견> 4·29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 발표
'공천권을 시민에게!'(전략공천..낙하산공천 부패연루자의 공천을 반대한다. 지역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 줘야 한다)
-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중앙당의 밀실공천, 낙하산공천을 반대한다.
-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의 입장이 반영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앙정치무대의 유력한 정치인의 전략공천을 반대한다.
- 진정한 지역대표성을 실현하기 위해 무늬만 지역인인 '선거.정치철새' 공천을 반대한다.
- 공천심사위원회에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외부 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 3월 24일 참여자치연구소 전북현안토론회/『4.29 재선거의 의미와 지방정치 과제』

▶ 4월 23일 <기자회견> 4·29재선거 후보자,정책공약 비교 분석!
민생 및 개혁입법과제 질의 답변 현황! 발표
① 4월 16일 : 선거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질의서 전달(완산갑-8명, 덕진-4명)
② 분석대상 후보 : 12명 중 사퇴한 후보 외 5명의 후보가 답변

2. 성명 및 논평

- 4월 8일 <성명> 유권자를 기만하는 낙하산공천으로 전주를 오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김근식교수의 전략공천 내정을 철회함이 마땅하다.
- 4월 17일 <성명>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후보토론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언론사 토론회 불참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4월 20일 <성명> 무소속연합은 보스정치의 부활이다
- 4월 23일 <기자회견> 4·29재선거 후보자,정책공약 비교 분석!
민생 및 개혁입법과제 질의 답변 현황! 발표
- 4월 27일 <4.29재선거에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4.29재선거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합니다

- 4월 30일 <논평> 4.29재선거 평가 논평
  민주당은 전주시민의 변화의 바람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당선자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 토론회

1. 취지 및 목적

- 이명박정부의 민주주의훼손과 민생파탄의 원인을 알아보고 국정기조 전환의 방향과 정부과제를 살펴보며 시민사회와 민주진보개혁세력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계획하여 7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2. 개최방향

- 단체에서 앞장서 논의를 확산하고 자체계획을 갖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정치,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개인과 단체, 지역을 망라하여 추진하고 민주주의회복을 위한 연대체(가칭 시국회의)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감

3. 민주회복의 위한 시국토론회 개최

1) 1차 시국토론회

①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토론회 7월3일 저녁7시 30분부터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함

② 과거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인사와 주최단체 회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등 최근 보기 드문 관심과 열의를 확인함. 시국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와 이후 전개될 토론 과제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음

③ 이후 대상과 주제를 달리하여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감
※ 토론요약문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바람(회원통신 게재 글)

④ 앞으로 시국토론회를 대상과 주체를 확대하면서 진행할 계획

⑤ 평가 : 시의적절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이 지적됨
민주주의 위기와 내용, 무엇을 할 것인가, 주체 등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
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체와 역량은 어떠한 가 등의 핵심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단체 운영위원회에서도 시국관련 토론을 전개할 것을 협의함

2) 2차 시국토론회

- 2009년 8월 14일(금) 저녁 7시 30분, 최명희문학관에서 두 번째 시국토론회 개최
- 패널 및 형식 :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 후 참석자와 토론자의 종합토론 진행

- 사　회 :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토론자 : 송병주(전북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순삼(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40여 명이 참석하여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함

3) 3차 시국토론회

- 2009년 9월 11일(금) 저녁7시 30분, 5층 회의실에서 세 번째 시국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 종교, 환경, 복지 분야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토론 진행
- 사　회 : 윤찬영 (열린전북 발행인, 전주대 교수)
- 토론자 : 이종진(전 민예총전북지회 사무처장), 양진규(새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정현(전주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이용준(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 7시 35분에 시작하여 토론자 발표 후 질의답변, 청중토론이 열띠게 진행됨.

※ 4차 시국토론을 학계인사로 조직하여 진행키로 하였으나 내용의 중복과 향후 실천적 활동 및 조직체 건설을 위한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4. 평가

-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충격과 애도의 물결은 민주주의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표출되었으며 강희남 목사님의 자결은 민주화운동세력의 진지한 성찰과 민주회복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부여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의 국민장 기간 동안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참여를 이루었고 강희남 목사님의 서거에 따른 장례위원회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6.10대회를 악조건에서 개최하였다. 범 민주세력의 민주회복을 위한 활동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국토론회를 개최하여 연대와 소통이 가능한 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시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공동 모색하였으며 행동조직인 (가칭)시국회의 구성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단체 10주년 기념사업을 9월부터 집중하면서 3차 시국회의 이후 활동은 미비하였다. 향후 지역 내 민주세력의 소통과 연대, 행동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용산참사 전북대책위원회

용산참사가 발생하고 1월 20일 성명-국민의 생명까지 빼앗는 이명박정부의 폭력살인집압을 규탄한다!-을 발표하고, 1월 22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용산참사 추모 촛불 집회를 개최하였다. 전북연대회의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용산참사 전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산참사 희생자 추모촛불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강제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전북대책위원회 소속 일부 단체의 집회에서의 돌발 행동에 따른 책임공방으로 인해 전북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전북대책위원회를 일괄 탈퇴하였다.(2월 말), 하지만 전국시민사회연대회의를 통해 장례비용 모금 등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책 활동을 지속 하고 있다.

▶ 기타 주요 활동

- 6.10 6월 민주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도민대회
- 노무현, 김대중대통령 서거 도민추모위원회 활동
- 미디어 공공성연대 활동(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원천 무효 집회 및 시위 등)

2 행정·지방의회 관련 사업

▶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실질적 운영 촉구 사업

- 전주시 도심미관지구지정 조례와 관련 정우성 의원 등 뇌물수수 사태 발생
- 전주시의회 윤리특위구성을 촉구(6/3)
-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구성(6/8 강영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
- 현재 윤리특위 활동 모니터링 중

▶ 전주시장·부시장 국외공무여행 및 전주시의회 해외연수 자료 조사

- 5/7 정보공개청구
- 6/10 정보공개 자료 도착
- 자료취합 후 검토 중

▶ 기타 자료 취합

1. 2009년도 공직자재산변동 현황 조사 및 DB화

   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등 공개된 자료 출력하여 3권으로 책철

   ② DB화

   - 국회의원의 경우 모든 자료 엑셀에 입력완료
   -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는 토지 부분 모두 DB화(부동산투기 및 직불금관련)
   - 기초의원 중 고창군, 김제군, 부안군, 순창군 모든 의원, 완주군 일부 의원에 대한 모든 자

료 DB화

2.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의사일정 등

3 민생사업 관련 분야

▶ 도내 소재 4년제 대학 등록금관련 예•결산현황 조사

▷ 조사 배경 및 목적

1. 2009학년도 전북지역 대학교 대부분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였지만 오를대로 오른 대학등록금은 여전히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천문학적인 금액의 등록금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중퇴생과 학부모의 자살까지 이어짐.
2. '천만원등록금'이란 유행어는 전북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열악한 수준인 전북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등록금문제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민생에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11개 4년제 대학교에 대하여 등록금과 관련한 예 결산 자료를 조사하여 결과 발표.

▷ 조사 개요

1. 전라북도 소재 4년제 사립대학 교비회계 예결산서 중 운영수입·지출 예결산
   -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열람
2. 전라북도 소재 4년제 대학 등록금인상 추이
   - 각 대학 정보공개청구(2009. 3. 3),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열람
3. 전라북도 소재 4년제 대학 등록금납부방법
   - 각 대학 정보공개청구(2009. 3. 3)

▷ 조사 결과

1. 조사 결과 교비회계 중 운영수입대비 재단전입금비율은 1~2%에 불과하여 사학재단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재정수입 역시 운영수입대비 1%대에 불과해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가히 살인적이라고 불리 울 만큼 높은 등록금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대부분의 도내 사립대학들은 법정부담금마저 법인이 아예 부담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부담금을 내고 있어,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대신 충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도내 대학들의 등록금 환원율이 매우 낮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이외에는 교육에 환원되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수입예산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예산은 과다 편성하는 등 뻥튀기예산편성으로 예결산 차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등록금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각 대학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의심할 수 있음.
4. 도내 대학들은 지난 기간 동안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요이유로 물가인상을 들었지만 물가인상률(평균2.77%)의 두 세 배가 넘는 등록금인상률(5~7%)을 보임.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매년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임.
5. 대학생들의 등록금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등록금 분할납부제'가 도내 대학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 특히 재학생보다 등록금 부담이 무거운 신입생은 규정 미비 등으로 아예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음. 고액의 등록금 부담에 대해 작은 서비스를 통한 편의제공이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제도 운용마저도 많은 대학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등록금관련 예결산 현황 분석을 위해 도내 소재 각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남대학교는 등록금납부제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과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를 거부. 930여 만 원의 등록금으로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서남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학생과 학부모, 전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퇴행적 행태를 보임.

▶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사업

1. 사업 기획 배경

- 극심한 경제-민생위기가 계속 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민생고를 호소. 전북지역 경기침체와 민생고는 더욱 가혹한 상황.
- 전국적으로 600여만 명에 이르던 자영업자의 숫자가 몇 달 사이에 50여만 명이 줄어드는 등 격변이 벌어지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음. 그만둔 분들은 그만둔 분들대로 생계대책이 막막하고, 남아있는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경기침체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 (통계청 발표 자영업자 수 - 2008년 11월 : 600만 3천명, 2009년 1월 : 558만 7천명)
- 서민상인들에게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SSM 규제 등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 폐업 중소상인 실업급여 지급 등을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이런 상황에서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중소상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

활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중요.

2. 사업 목적

- 시민사회가 민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전개
-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몰락하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 중소상인조직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및 신용카드사, 대형마트 업체, 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상권 부여(중소상인 차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3. 사업 진행과정

- 6월 수퍼마켓협동조합, 주유소협회 네트워크 사업제안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 사업제안
- 7월 전라북도재래시장연합회, 전주시전통시장협의회 네트워크 사업제안
- 7월 22일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첫 준비모임(수퍼마켓협동조합 회의실, 오후3시)
  8/11 네트워크 출범 목표로 사업 진행하기로 결정
  8/6 최종 준비모임 갖기로 결정
- 7월 23일 전북YWCA협의회,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네트워크 사업제안
- 7월 24일 중앙로상가연합회 네트워크 사업제안
- 7월 28일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네트워크 사업제안
- 8월 6일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최종 준비모임
- 8월 11일 오전11시 전주시청강당
  건강한 지역경제 발전과 풀뿌리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출범식 및
  3대과제 실현을 위한 가두행진 진행(전주시청광장~오거리문화광장)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3대과제>
  ▸ 대형마트·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중소상인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중소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률 제·개정 운동
- 8월 12일 GS마트 전주시 호성동 입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전조사신청
- 8월 17일 이마트군산점 주유소사업확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심의 신청

- 9월 7일 대한미용사회전북지회, 전북자동차전문정비조합 네트워크 참여
- 9월 8일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9월 집행위 개최
  9/15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관련 토론회 개최하기로 결정
  9/17 중소상인살리기 법률개정 도민결의대회 및 서명운동선포식 결정
- 9월 15일 지역풀뿌리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상인살리기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9년 9월 15일(화) 오후2시30분
  - 장소 : 전라북도청 3층 중회의실
  - 주제 : 지역민생경제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 발제 및 토론
    사회 - 이경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발제 - 김일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치사회연구센터장)
    토론 - 심갑용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재호 (기자, 전북일보 정경부장)
    김종기 (전북마트협의회 감사)
    김용배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 9월 23일 지역경제파탄 대형마트·SSM입점저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중소상인살리기 법률개정을 위한 전북도민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 선포식 진행 및 가두 행진
  9월23일 오후2시 오거리문화광장, 행진(오거리문화광장~객사)
- 9월 23일 중소상인살리기 법률개정 촉구 전북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
- 9월 24일 중소상인 보호 관련법안 입법정향조사 결과 발표
  도내 국회의원 모두 대형마트·SSM허가제 찬성,
  영업시간·품목 제한하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산정내역 공개해야
- 9월 27일 전주시기린로전자상가상인회 네트워크 참여
- 10월 7일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10월집행위 개최
  법률개정 서명운동에 집중(23일 1차마감)
  10/14~16 집중서명켐페인 진행하기로
  10월말 또는 11월초 국회방문 일정 및 규모 실무위에서 계획
- 10월 14일 중소상인살리기법률개정을 위한 지역 경제단체장 릴레이 호소대회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3시
  - 장소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호소 발언

장길호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진대권 이사장(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배 사무총장(사,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총장)

임승기 회장(전라북도상인연합회 회장)

최진원 이사장(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명자 사무총장(전북YWCA협의회 사무총장)

박종훈 고문(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11월 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 설명과 중소상인살리기 벌률개정 촉구 전북도민 서명부 전달을 위한 이강래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신청

- 11월 1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 설명과 중소상인살리기 벌률개정 촉구 전북도민 서명부 전달을 위한 국회방문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12일 오후3시, 민주당 원내대표실

참석자 : 최명희 이사(전북YWCA협의회)

조미영 실장(전북YWCA협의회)

김용배 사무총장(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최진원 이사장(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오교명 회장(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오병균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김효근 국장(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이수금 공동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국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배석자 : 이강래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우제창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장선 의원(지식경제위 간사)

김태균 의원(지식경제위 위원)

/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품목제한을 골자로 법률개정 방향 설명 3만5천명 서명부 전달

/ 세종시, 4대강사업, 언론악법 문제대응 외에도 민생과 관련한 법률개정이 민심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시민과 상인단체의 민심을 전달

/ 민주당은 지식경제위에서 법안 마련과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

속,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압박을 부탁함

/ 이날 2시 부산네트워크는 이종혁 의원(지식경제위, 한나라당) 면담

- 11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전국상인대회

/ 주유소협회 참석, 여의도 산업은행 앞

- 12월 08일 현재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참여 단체(45개 단체)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정읍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주유소협회전북지회 ▸대한미용사회전북도지회 ▸전라북도상인연합회(26개 단체) 전주모래내시장상인회, 전주중앙상가상인회, 전주남부시장상인회, 전주풍남문상인회, 군산명산시장상인회, 군산문화시장상인회, 익산남부시장상인회, 익산중앙시장상인회, 익산북부시장상인회, 익산북부장상인회, 정읍1시장상인회, 남원공설시장상인회, 남원용남시장상인회, 김제시장상인회, 고창시장상인회, 부안읍시장상인회, 임실시장상인회, 무주반딧불시장상인회, 장수시장상인회, 전주버드나무상가상인회, 전주동문상가상인회, 진안시장상인회, 무주안성시장상인회, 전주기린로전자상가상인회, 완주봉동시장상인회, 익산매일시장상인회, **▸전주시전통시장협의회 ▸전주시중앙로상가연합회 ▸전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전북YWCA협의회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전주소비자정보센터 ▸익산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순서없음)**

▶ 전라북도 및 14개 지자체 민생관련 예산 분석

1. 추진배경

-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민생관련 예산을 분석하여 민생살리기 정책검증과 실질적인 민생살리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개함

2. 추진경과 및 결과

- 2월 23일과 25일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후 공개가 완료된 상태이며 미흡한 부분(부분공개)에 대해 추가 요구하여 보완함
- 공개된 자료를 원본과 비교분석 가능한 형식을 마련하여 정리함
- 민생안정예산 : 200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서와 공개된 자료를 비교하여 민생안정예산 관련 항목을 예시하고 일회성, 선심성, 홍보성, 부풀리기 사업 등을 정리 비교함
- 선심성 예산 감시 : 2008년, 2009년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변화 추이를 2007년도 민간지원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

의록을 검토하여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에 대한 기준으로 비교함

- 자료를 취합 비교 정리하여 데이터화 하였으나 민생관련예산의 기준설정과 비교분석틀의 모호함으로 자료취합 정리, 비교하는 선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별도의 보고서 제작과 대외 발표를 하지 않음

4 시민교육·문화사업

▶ 제 5기 시민경제 아카데미

1. 개요

1) 기간 : 2009년 5월 12일~ 6월 4일, 4주간

2) 장소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교육실

3) 진행 : 8강좌(견학탐방 1회 포함)

2. 강좌내용

구 분		주 제	강 사
제1강 5/12(화)	열린강좌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	홍세화 /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학벌없는 사회 공동대표
제2강 5/14(목)	생활법률	법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	남준희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강 5/20(수)	지역경제	지역경제 활로를 찾아라	최규성 / 민주당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제4강 5/26(화)	지역경제	꽃보다 치즈	송기봉 /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5강 5/28(목)	생활경제이야기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보험의 진실	김미숙 /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제6강 5/30(토)	견학탐방	치즈만들기 체험	임실치즈마을
제7강 6/2(화)	기업인이야기	지역경제 숨쉬기-IT산업	정순곤 / 휴먼미디어테크 대표
제8강 6/4(목)	생활경제이야기	가정경제 불씨 찾기	제윤경 / 에듀머니 대표

3. 홍보 및 모집

1) 홍보

- 신문광고 : 전북일보 사고란, 교차로
- 인터넷 게시판 : 파발, 새천년전주, 얼쑤전북, 문화의집,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홈페이지, 전북대.전주대 홈페이지, 방송국
- 전단지부착 : 문화의집, 단체회원의 가게, 각 시민단체, 평생학습센터, 전주시 열린강좌 전단지배부, 각아파트(아파트관리사무소 공문 및 전단지 우편발송)
-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 jtv좋은일 궂긴일 녹화, kbs정보큐,전북은지금, cbs사람과사람인터뷰, 티브로드 행사안내 등

2) 모집(신청자 41명)

매체	회원 및 운영위원	기수강자	전북일보	교차로	티브로드 및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대학게시판)	소개	기타
인원(명)	7	3	2	4	4	2	11	8

4. 수강현황

- 31명 등록(신규등록 28명) / 15명 수료(6강좌이상 수강자)
- 5강좌수강자(5명), 4강좌수강자(4명),3강좌수강자(3명)
- 수강신청 41명 등록 30명 (등록비 미납 7명, 수강신청 후 불참석 4명, 자료집비용 1명)
- 아름다운 참여 상(개근) : 김숙경, 신영주, 이계순
- 원장상 : 김동수, 참여하는 시민의 힘 상 : 김숙경, 김인수

5. 평가 및 제언

1) 홍보 및 모집

- 6주전부터 홍보가 이루어져 안정적 홍보를 할 수 있었음.
- 전북일보 사고란 : 공동주최로 지상중계를 맡고 있지만 강의 후 지상으로 홍보되는 측면은 있으나 모집에 있어서는 기대한 만큼의 홍보 효과 없음.(사고란 2주 동안 6회 광고 - 접수 2명) 다만 강의를 지상중계하고 있어 잠재적 홍보효과 있을 수 있음.
- 이번 아카데미의 경우 많은 등록자는 아니지만 신규 등록자가 많았으며 등록의 경우도 자발적 수강신청이 이루어져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짐.(전체 41명중 38명)

- 이 밖의 각종 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나 모집에 있어서의 가장 큰 효과는 주제와 강사선정이 중요.

2) 강의주제 선정 및 강사섭외

- 주제선정에 있어 토론이 불필요한 주제가 많아 분반이 이루어졌음에도 토론 거리가 없었음.
-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 시 유명강사 혹은 전문강사(검증된 강의 잘하는 강사)의 배치 필요(유인효과 및 강의에 대한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음)

3) 아카데미 운영

- 실무 운영자 추가 배치 필요(분반구성 운영보조 및 접수 안내 진행 등을 원활하게 운영)
- 운영과 관련한 좀더 세심한 프로그램 준비필요(분반활동을 이끌 인원 투입 및 토론주제 선정, 탐방 및 소풍의 친목 프로그램준비, 강사진 의전의 세심한 배려 등)
- 진행과 관련한 필요 기자재 준비(빔프로젝터, 노트북, 냉난방기)
- 견학탐방이 수강생과 단체와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동창회 구성이 잘 이루어짐.

4) 분반활동

- 1강 후 분반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의 후기를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분반모임 이후에도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리도록 함.(5건의 글 게시)
- 2강 이후 분반모임을 갖고 1,2강에 대한 토론을 갖고 식사 후 해산
- 3강 이후 강의주제가 토론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분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5) 동창회 구성 : 회장-김동수, 총무-김숙정

6) 강의내용 및 취재

- 첫강의는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에 기사게재.
- 전북cbs 사람과 세상에 녹음된 강의 방송

7) 개선점

① 주제선정 시 경제인식 전환이나 시민의식 전환 등의 메시지를 담은 주제를 선정
② 너무 쉬운 강의주제나 내용보다는 깊이 있는 강의 내용 선정
③ 유명강사 배치로 모집기대효과 향상
④ 아카데미 운영 시 회원가입 또는 조직 확대 등을 위한 활동가 고정 배치(3인 이상)
⑤ 기자재 확보-빔프로젝터, 노트북, 냉난방기, 정수기, 보드마커, 무선마이크, 핀마이크

▶ 제 3기 참여자치 아카데미

1. 개요

1) 기간 : 2009년 10월 12일~ 11월 10일, 5주간

2) 장소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교육실

2. 강좌내용 : 총 8강좌

일정	강사	주제	강사약력
10월 13일(화)	개원식	인사말, 소개, 안내	
	재 연	화엄, 더불어 사는 세상	실상사 주지스님
10월16일(금)	우석훈	토건대한민국이라는 괴물탄생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10월21일(수)	구성은	여성의원이 말하는 지방의회, 지방자치	전주시의회 의원
10월22일(목)	이경찬	시민이 만드는 도시	원광대 도시공학부 교수
10월27일(화)	염경형	지자체의 투명성, 정보공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
11월 3일(화)	강수돌	주민자치의 실험 Ⅰ-마을만들기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1월 5일(목)	고유기	주민자치의 실험 Ⅱ-주민소환	제주참여환경연대사무처장
11월10일(화)	임성진	지방자치의 희망만들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수료식	수료증 수여, 시상	

3. 홍보 및 모집

1) 홍보

- 신문광고 : 전북일보 사고란, 교차로
- 인터넷 게시판 : 천년전주, 얼쑤전북, 문화의집,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홈페이지, 전북대.전주대 홈페이지, 방송국
- 전단지부착 : 문화의집, 단체회원의 가게, 각 시민단체, 평생학습센터, 전주시 열린강좌 전단지배부, 일부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일부지역 전단지 부착
-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 kbs정보큐, 티브로드 행사안내 등

2) 모집(신청자 30명)

매체	회원 및 운영위원	기수강자	전북일보	교차로	티브로드 및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대학게시판)	소개	기타
인원(명)	20	2	2	2	0	2	2	0

4. 수강현황

- 24명 등록(신규등록 7명) / 7명 수료(5강좌이상 수강자)
- 수강신청 30명 등록 18명 (등록비 미납 2명, 수강 신청 후 불참석 6명, 자료집비용 2명, 수강료할인 2명-다온학교)
- 아름다운 참여 상(우수상) : 박영진

5. 참여자치아카데미 평가

① 사업담당주체의 사업에 대한 준비부족과 충분한 사업목적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기존의 실패한 틀에 대한 변화감이 없었다.
③ 주제와 강사선정이 늦어져 홍보기간이 짧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어지지 않아 수강생 모집에 실패하였다.
④ 하반기에 몰려있는 시민단체들의 강좌중복으로 인한 수강생 분산이 있었다.
⑤ 사업주체 입장에서 강사섭외의 요령을 터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⑥ 첫 강좌 배치가 참여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첫 강좌 선정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역사문화시민기행

1. 일　　시 : 2009년 4월 11일(둘째주 토요일)
2. 장　　소 : 문경새재(생태공원→제1관문→kbs셋트장)→석탄박물관
3. 참석인원 : 성인 47명, 학생 59명, 유아 13명 **총 119명**
4. 개선사항 : 종전에 일요일에 시행했던 기행을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토요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토요일로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어린이들이 대거 참여하여 가족 나들이 형식이 됨으로써 역사문화기행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 향후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행의 성격과 내용을 보완 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1. 회원 현황

- 09년 신입회원 : 3명 가입, 현재 활동회원 총 15명

연령별 / 명	30대	40대	50대	60대
	2명	9명	1명	3명
직업별 / 명	주부	사업	단체활동가	기타
	6명	2명	3명	4명

2. 조사활동

1) 공산품 가격조사 활동

가) 개요 : 대형마트 입점과 SSM의 진출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가격이 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실제 가격조사의 필요성 인식.

나) 조사대상

- 전주시내 5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전주시내 2개 지역마트 (전주마트, 유명마트)

① 전주마트-매장면적이 3,000㎡이상으로 대형마트에 속함.

② 유명마트-2개 이상의 체인점식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마트

③ 조사기간 : 1차 : 2009년 6월 5일, 2차 : 2009년 7월 29일(보완조사)

④ 조사대상 품목

- 공산품 및 일반생활필수품 총 63개 품목조사
- 결과 : 지역마트가 전주시내 5개의 외지 법인 대형마트와 판매품목이 일치하는 30여개 품목에서 한 품목당 평균 53원 정도가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형마트의 저가 마케팅에서 지역마트가 결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있음이 확인.

⑤ 결과발표 : 8월 13일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방송인터뷰(kbs,mbc,cbs), 지방일간지 기사화(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2) PB상품 알아보기

가) 개요 :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실제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함.

나) 조사기간 : 1차 예비조사 - 9월 중, 2차 예비조사 - 10월 중

다) 결과 : 처음 기획했던 의도의 큰 문제점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PB상품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몇 가지 소비자 재인식의 필요성을 발견. PB상품 몇 가지를 직접 구매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기로 함.

3. **홍보활동** : 시내 5개소 정도에 플랑을 게첩하기로 하였음.

- 오거리 광장에 "엄마, 동네수퍼로 가요!" 플랑 게첩
- 기타 홍보활동 미진하였음.

6 사이버사업

▶ 주요 사업

1. 홈페이지 개편

2. 뉴스레터 정기 발송

3. 온라인 회원 관리 및 신규 회원 확보

4. 사이버기부(네이버 해피빈) 정착

1. 세부적 운영 내용

1) 홈페이지

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메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의 글이 메인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시켰고 인트라넷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의 글을 로그인 없이도 읽기나 댓글 작성이 가능 하다.
- 회원정보에 닉네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글의 익명성을 부여함으로써 글 작성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회비납부의사가 있는 홈페이지 가입 회원을 실제 후원회원으로 전환시켰다.
-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게시판은 숨기고 필요한 게시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고 배너를 행사나 시기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나. 홈페이지 운영 현황 (2009년 12월 23일 현재)

일일 평균 방문자 수		2009년 게시글 총 건수		2009년 회원가입 수		게시글의 조회수
평균방문자수	평균 pageview	사무처	회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원회원 전환	
130명	17쪽	478건	245건	56명	13명	49건 ~ 1700건

* 홈페이지 방문자 중 1/3은 리퍼러(웹 브라우저로 월드와이드웹(WWW)할 때,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각각의 사이트로 방문시 남는 흔적을 말함.)로 방문한 방문자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 파란 등 이었다.

2) 해피로그(해피빈 기부현황 - 6월 22일부터 시행)

총 기부인원	총 기부회수	총 기부금액 (12월22일기준)	월평균기부금액
38명	235회	322,400원	53,733원

* 총 기부인원 중 사무처 관련 기부자 12명, 그 외 26명임

3) 뉴스레터 제작/ 발송

- 월 1~2회 정기 발송(3월 이후)
- 단체 성명/논평, 행사 안내, 기고 등 수록
- 발송메일에 대한 수신확인 비율은 40% 정도.

7 참여자치연구소

▶ 약평

참여자치연구소는 2009년 운동과 연구기능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현안토론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사회운동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참여자치아카데미를 개최키로 하였다. 하지만 4.29 재•보궐선거를 맞이하여 개최한 『4.29 재선거의 의미와 지방정치 과제』를 주제로 현안토론회외에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 이후 7월부터는 시국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가 현안토론회로 대체하여 추진되었으며 단체간 연대를 위하여 단체명의로 3차례 전개되었다.

회원확대 및 운영위원회 안정화를 위한 사업은 전개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자치연구소의 활동이 미비하였다.

하반기는 10주년 기념사업 일환인 편찬사업을 위해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활동백서 '10년의 기록'과 단행본 '참여와 자치로 여는 세상'발간사업을 진행하였다. 단행본 발간과정에서 전개된 성찰과 전망 토론(내부), 10년 활동평가와 전망(외부) 토론을 전개하였다.

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동과 연구가 연계되는 의제발굴과 이에 따른 교육, 토론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연구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업무조정이 요구된다.

▶ 추진사업

1. 전북현안토론회『4·29 재선거의 의미와 지방정치 과제』

□ 일 시 : 2009. 3. 24. 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1층)

□ 주 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설 참여자치연구소

□ 주 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CBS전북방송

□ 사회 및 토론자

- 사 회 백종만 (참여자치연구소 소장, 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 1 임성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 2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위원)
- 토론 3 김명성 (KBS전주방송총국)
- 토론 4 최두현 (전주환경운동연합 녹색도시국장)
- 토론 5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주제 ① 4.29 재선거의 정치적, 지역사회에서의 의미
② 정당공천기준과 방안 ③ 유권자의 선택과 지방정치개혁 등

2. 시국토론회 1. 2. 3(전북현안토론회를 대체함, 시국대응사업 참조)

3. 10주년 기념 평가와 전망 좌담회

1) 10년의 성찰과 전망 좌담회

- 2009년 11월 7일 오전 10시, 이경한 대표의 사회로 박종훈 고문, 김영기 집행위원장, 김남규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진행하고 10주년 기념 단행본에 수록함

2) 10년 활동의 평가와 전망을 위한 좌담회

- 2009년 11월 10일 오후 4시, 이경한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정태석교수, 전준형 (인권교육센

타대표), 유재임(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정현(전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참석하여 진행하고 10주년 기념 단행본에 수록함

4. 10주년 기념 편찬사업

1) 활동백서 '10년의 기록' : 발행부수 : 300부(379쪽)

<목 차>

화보/ 발간사 / 일러두기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연혁

제1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시작

제2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활동

제3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운영

제4장 회원과 회원활동

<부 록>

10년활동연보 / 주요회의 / 성명.논평 / 토론회.기자회견.교육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총회/ 결산

2) 단행본 '참여와 자치로 여는 세상 : 발행부수-1500부(182쪽)

<목 차>

- 창립선언문 / 사진으로 보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10년 / 발간사 / 축 시
- **축하합니다 / 연대의 글**
- **희망보고서**(10년의 성찰과 전망, 10년 스토리)
- **참여의 기억**(단소리 쓴소리, 야단법석 - 惹端法席, 회원통신 - 회원의글)
  비전과 공유 (장기활동전망, 회원설문조사 결과, 기대와 설렘, 좌담회)
  참여자치를 빛낸 사람들 : 창립회원, 함께하는 사람들, 역대 시상자, 10주년기념 시상자, 임원명단, 연혁, 창립1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편집후기

8 회원•재정 사업

▶ 회원 현황

1. 월별 회원 현황 (단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00	604	618	639	671	685	684	698	735	747	761	763

2. 신규 회원 가입 현황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8년	21	5	19	17	12	7	10	3	10	7	24	6	141
09년	12	7	16	20	32	17	2	15	39	14	21	5	200

3. 10주년 회원배가운동

10주년을 맞아 천명 회원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상반기 시국관련 대응 사업과 하반기 10주년 기념식, 후원의 밤 준비로 인한 실무 부담으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09년 신규 회원은 총200명이 증가했으며, 회원 배가운동에 운영위원들의 참여가 높아진 점,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13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회원 확대를 통해 1천 회원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 재정/ 회원 회비

1. 회비 납부율 및 월별 정기 회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납부율(%)	80%	78%	78.5%	75%	74%	81%	77%
정기회비	11,959	9,273	9,269	9,779	8,962	10,485	11,122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평균**
납부율(%)	74%	76%	75%	72%	77%		76.5%
정기회비	9,864	10,564	10,430	9,919	10,604	122,230	10,186

※ 정기회비(후원금을 제외한 회원 정기 회비) = c.m.s 회비 +자동이체 +직접납부
※ 월 평균 1천 만 원 정기 회비 달성

2. 이틀 주막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전년 대비
2008년	38,560	4,041천원 증(110.5%)
2009년	42,601	

3. 후원의 밤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전년 대비
2008년	39,160	30,560천원 증(178%)
2009년	69,720	

4. 명절 재정 사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전년 대비
2008년	8,714	21천원 증(100%)
2009년	8,735	

▶ 소식지(회원 통신)

1. 발송 현황

2008년 12월	2009년 12월	증감
822부	971부	149부(증)

2. 연간 비용(총 13,145,440원)

- 제작 비용 : 9,810,000원
- 발송 비용 : 3,335,440원

3. 기고자 (굵은 글씨-09년 신규기고자 13명)

월	마음시	칼럼 기고	이야기						회원 의글	기타
			건강	교육	문화	복지	세무	여자		
1월(100호)		강주영	김영광		김명희			정수미	김선태, 박진화 양병준, 김영붕	이상민
2월(101호)	이형월	이종진 안진걸			김명희				이경한, 심영옥 김진왕	
3월(102호)	이형월	임남수		정우식	김민수		김성수			이선조 김경숙 김용택 허연숙 송정옥
4월(103호)	이형월	홍주형	**김순정**	최선호	김영붕				박은주	박려균 여형수
5월(104호)	이형월		김순정						**박찬서**	송경민 최민정
6월(105호)	이형월	김환표	김순정	이경한			김성수			이윤영 최우영 김경숙
7월(106호)	이형월	이경한 **김영면**	김영광					**김소연**	김진왕, **심훈**	
8월(107호)	이형월	임성진		최선호					**김분호, 송정호 나상균**	**박병설**
9월(108호)	이형월	이경한	김순정		최우영 김용택				**신재윤**	
10월(109호)	이형월								이흥수, **조중길** 박은주, **송정아 송일섭**	
11월(110호)	이형월	임성진	이상권		이상민				이선조, 이윤영	
12월(111호)	이형월	이경한			김선태				김경숙	

9 창립 10주년 조직위원회

1. 1차 회의

- 3월 3일 7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 이경한, 박종훈, 백종만, 김영기, 김남규, 염경형, 김종균 위원이 참석하여 조직위 구성 및 사업계획에 대해 토의함
- 안건토의 내용

1) 조직위 구성 및 확대 : 워크숍에 제출된

- 본부장 - 공동본부장 (공동대표-이경한, 고문-박종훈)
- 자문위원회 - 윤찬영, 김영붕, 홍성덕, 박호석
- 장기발전위원장 : 백종만 소장
- 실행위원장 : 김영기(집행위원장)위원(홍성덕, 이형월, 김경숙, 박호석, 한정문, 이선희, 서양렬, 김정희, 김종균, 김남규, 염경형)
- 실행팀 - 기획.홍보팀장 : 김남규 사무처장 - 편찬팀장 : 염경형 정책실장 안과 더불어

<이후> 고문 : 전 대표단(이선조 교무, 여태권 목사)와 고문단 중 일부 고문으로 추대 (이영호 후원회장 등), 자문 및 위원 확대 : 필요시 확대해 나감

2) 사업계획 토론

2-1) 장기발전계획 수립

① 목적 : 10년 활동을 정리하고 조직진단 및 평가를 전개하며 향후 발전전략을 마련함

② 내용(연구과제)

- 10년 활동을 진단 평가(조직구성, 운영, 재정, 사업 등)과 평가(정체성확립, 기여도, 조직성과 등)
- 장기발전계획 수립 : 시민사회의 변화와 지역시민운동의 현실에서 단체의 발전전략을 마련

③ 방법

- 기획회의 → 연구과제 수행팀 구성(이경한, 박종훈) → 연구수행 → 검토회의 → 승인 → 포럼 → 수정보완 → 채택 → 보고서 발행

④ 시기 :

※ 회원과 지역시민사회(단체, 리더, 언론 등) 대상 설문과 연속 토론회 또는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개함

2-2) 기념식

① 목적 : 창립 10년을 맞아 단체와 함께한 인사와 회원가족이 자축하고 기념하며, 단체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감사의 장 마련

② 형식과 내용

- 기념식 : 축하 및 감사, 활동 감상, 시상, 축하공연
- 기념사, 축사, 격려사, 10년활동사, 시상식, 축하공연

③ 방법

- 기획회의(형식, 내용, 규모 등) → 사업추진(2009희망릴레이, 대상, 시상자 선정위구성 등) → 초대 → 기념식 → 감사장

④ 시기 : 2009년 10월 29일(목) - 창립기념일 1월전

※ 기념식과 후원의 밤 공동개최가 논의 되었으나 원활한 진행과 효과적인 후원 사업을 위해 분리해 나가기로 함

2-3) 편찬사업

① 목적 : 10년 역사를 총화하는 기록정리와 기록물에 대한 분류, 보존사업

② 형식과 내용

- 자료 분류 및 보존 방법
- 사업, 운영, 생산 기록물(회의자료, 발간물, 영상 등)의 취합 정리
- 인쇄(언론에 비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원통신, 연표, 발간물 목록)
- 영상 및 기록물 전시, CD제작 등

③ 방법

- 기획회의(의의, 대상선정, 형식, 내용, 규모 등) → 사업추진 → 발간 → 전시 → 배포

④ 시기 : 2009년 9월 - 창립기념식 1월전

※ 연표와 생산 기록물에 대한 목록 및 구체적인 편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키로 함

2-4) 기타

① 회원확대사업 : 2009희망릴레이

② 홍보물 제작 : 단체홍보물, 회원가입원서(배포용), 동영상 등

③ 재정

※ 회원 1000명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회원확대 사업을 전개하되 10주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하며 10주년을 맞아 단체 홍보물 및 2009년 희망릴레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함

2. 2차회의

1) 3월 24일 7시, 이경한, 박종훈, 김영붕, 김영기, 김남규, 염경형, 김경숙, 이선희, 김정희
2) 회의진행 : 1차회의결과 공유, 기초자료 목록에 대한 설명 및 편찬사업등을 협의함
3) 위원별 역할 조정
- 장기발전계획수립 : 백종만 소장, 이경한, 박종훈, 김영기, 한정문, 서양렬
- 기획.홍보 : 김남규, 이선희, 김정희, 박호석,
- 편찬사업 : 염경형, 김영붕, 김경숙, 이형월, 홍성덕

4) 기획홍보팀 : 회원확대 홍보 책자 발간 중(8쪽, 2000부, 1백만원 소요),
각계각층(학계-전북,전주,우석 / 기업-금융, 공기업 / 의사(의료인), 교사, 공무원, 중소상공인, 문화예술, 법조인 등)
5) 편찬팀 : 3월 31일 간담회(백서발간-부록CD, 10주년책자, 회원통신발간, 발간물목록)
4월 14일 2차회의 진행(발간물 발행부수 및 예산, 컨텐츠, 추진일정등 협의)

※ 기획홍보 및 편찬팀 회의를 자체적으로 가짐

3. 3차 회의

1) 2009년 9월 9일 저녁 7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에서 진행함
2) 참석자 : 공동본부장 이경한, 자문위원 김영붕, 실행위원장 김영기, 실행위원(서양렬, 김남규, 염경형, 김정희, 김경숙)
3) 진행 : 2차 조직위 회의결과 보고와 기획.홍보팀 및 편찬팀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됨

4) 토의결과

가. 기획.홍보관련

① 홍보 : 기념식과 후원행사 전후 홍보를 전개하며 회원확보사업과 병행함.
② 회원확대 : 1000명 회원 목표로 운영위원(100), 사무처(100), 시민사업(100)확보함
거리홍보(주1회, 4회 개최)
③ 10주년 기념식 : 10월 29일 저녁 7시,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250석)에서 진행하며 대외 초청하여 진행함, 축하공연을 비롯한 세부사항은 팀에 위임
④ 10주년 기념 월간행사 : 10월29일~11월19일까지 진행하며 10주년기념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10주년 기념토론회는 조직진단과 평가등과 연계해 추진여부 결정키로 함
⑤ 기타 : 회원설문조사를 전개하여 조직진단과 평가에 반영함

나. 편찬사업

- 9월 23일까지 세부 추진계획 및 목차 등을 제출키로 하며 활동백서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발간하되 언론에 비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원통신제본, 활동사진 및 발간물, 기록물 관리 등은 차기 정기총회 전까지 추진함

① 활동백서 및 CD(부록): 10월 29일 기념식까지 발행키로 함(장기발전계획은 삭제함)

② 단행본 : 11월 19일 후원의 밤 까지 발간

※ 짧은 일정관계로 집중해서 추진하여 기간에 발행하는 데 집중키로 함

4. 4차 회의

- 2009년 9월 22일 저녁 7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에서 진행함
- 참석자 : 공동본부장- 이경한, 자문위원- 김영붕, 실행위원장- 김영기, 실행위원- 김남규, 염경형, 김정희, 이선희)
- 진 행 : 3차 조직위 회의결과 보고와 회원대상설문지 점검과 단행본 및 백서발간 준비현황 보고와 점검진행

5. 5차 회의

- 2009년 10월 6일 저녁 7시30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에서 진행함
- 참석자 : 공동본부장 이경한, 자문위원 김영붕, 실행위원장 김영기, 실행위원(김남규, 염경형, 김정희, 이선희) 김경숙, 김진왕, 송정옥, 이강주, 이숙,

가. 진행 : 기념식 및 편찬팀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이 이루어짐

나. 기념식

- 사회자 : 김남규, 김정희(여성)
- 기념품 제작에 대해 : 제작여부와 상품, 배포대상을 사무처에서 고려하도록 함(수건+감사편지, 행사참가자에게 전달 또는 전체대상)
- 감사패 : 정철희 추가
- 설문조사 안 : 검토 후 진행키로 함

다. 편찬 : 단행본 및 백서발간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함

- 발행부수 결정 : 백서 발간 부수(200부), 단행본 발간부수 (1000부)-소요예산문제로 조정함
- 판매여부 : 백서-후원금형식으로, 단행본 권당 1만원으로 판매 함
- 단행본 및 백서 발간 시간이 촉박함으로 집중하여 전개하도록 촉구함

6. 6차 회의

- 2009년 10월 13일 저녁 9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에서 진행함
- 참석자 : 공동본부장 이경한, 박종훈, 김남규, 염경형
- 진행 : 10주년 기념사업과 백서 및 단행본 점검이 이루어짐
- 결정사항 : 백서 협의 후 목차 결정(20일 조정안 포함)

[활동백서 및 단행본 발간과 배포 현황, 09년 12월 현재]

활동 백서		단 행 본	
발간부수	300권	발간부수	1500권
회원	77권	회원(발송)	60권
비회원(단체포함)	48권	회원통신발송대상	643권
미파악	60권	비회원(단체포함)	73권
		미파악	68권
잔여	115권	잔여	676권

7. 기념식

- 일 시 : 10월 29일, 오후 7시
- 장 소 : 전주시 전통문화센터(한벽극장)
- 참석인원 : 200여명
- 시 상 :

가. 공로패 (24명)

- 고 문 최 형, 오경숙, 이영호, 조성용, 조찬배
- 고문-역대 대표 김문철, 박종훈, 박창신, 백종만, 서지영, 여태권, 이석영, 이선조
- 지도위원 김영붕, 이동수, 이윤영, 이흥수
- 집행위장 김영기
- 감 사 강요현, 김윤수, 박은주, 조정곤, 배선수

나. 감사패(23명)

- 단체 로고 제작 : 박홍규
- 장기 대출자 : 김정희, 김명희, 임초연 ,권윤아, 이형월, 황규순, 유혜원, 김대용, 고승주,

이경이, 이민주

- 정보공개 소송 대리 : 최낙준, 유충권
- 장기 후원자 : 유창희, 서알안
- 경전철 관련 사업 : 장태연
- 대형마트 대응 : 유대근
- 창립 기여 : 정철희
- 정보공개사업 : 한일장신대 동아리 연합회
- 보금자리 : 기업은행 전주지점
- 문화 협력 : 도립국악원 노조
- 컴퓨터/ 홈페이지 : 박찬서
- 광고/ 행사 후원 : 심병훈

다. 10년 회원 (105명)

- 강요현 고승주 권윤아 김 영 김경숙 김남규 김남직 김대용 김명희 김문철 김성미
  김성수 김애숙 김영기 김영붕 김영준 김영훈 김용택 김운주 김윤수 김종호 김주진
  김진섭 김현덕 나인경 노병구 문병학 박은경 박은주 박인숙 박일범 박재원 박정미
  박종훈 박창수 박창신 박현숙 박 희 배선수 배은기 백종만 서동진 서양열 서지영
  서진현 선태원 소준섭 손정숙 송민자 송정옥 심회무 여태권 오경숙 오도영 유충권
  유혜원 윤지용 윤찬영 이경이 이경한 이난숙 이동수 이미영 이민주 이병도 이병호
  이석영 이선조 이수금 이승희 이영호 이윤애 이윤영 이일섭 이일순 이종명 이창민
  이형월 이혜경 임남수 임초연 장수진 정성경 정세량 정애자 정은숙 정재욱 정철희
  정태선 조 금 조기현 조성용 조영범 조정곤 조중길 조지훈 조찬배 조혜경 최민수
  최병흔 최재훈 최 형 한규채 황규순 황현선

10 회의

▶ 운영위원회

1. 10차례 회의(2회 워크숍 포함) 진행
2. 운영위원 확대(08년 47명 => 09년 64명, 17명 증가)
   회원 확대 추세에 맞게 회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확대 함

■ 운영위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짐(각종 행사, 회원 배가 운동 등)

■ 2번의 워크숍과 시국 토론회 등을 통해 당면 사업에 대한 토론을 강화함

[회의 안건]

◈ **1차 회의** : 상반기 workshop와 함께 진행됨.

1) 10기 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

‣ 19명의 운영위원을 선임(고남규, 권영구, 김기수, 김미아, 김철민, 유정주, 이현준, 박용호, 배은기, 이용석, 진두영, 조관석, 최우영, 허헌회, 박창환, 박현신, 한창희, 백승기, 박찬서)

2) 10기 집행위원 선임의 건(총 13명)

‣ 위원장 : 김영기

‣ 위 원 : 김남규, 김 숙, 김정희, 김진왕, 서양렬, 송정옥 염경형, 윤병삼, 이 숙, 이상민, 이선희, 한정문

3) 2009년 10기 세부 사업 확정의 건

4) 창립 1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 공동본부장(이경한 공동대표, 박종훈 고문)

‣ 자문위원회(윤찬영, 김영붕, 홍성덕, 박호석)

‣ 장기발전위원장 : 백종만 소장

‣ 실행위원장(김영기 집행위원장)

‣ 실행위원(홍성덕, 이형월, 김경숙, 박호석, 한정문, 이선희,김정희,서양렬,김남규,염경형)

‣ 실행팀 - 기획·홍보팀장 : 김남규사무처장, - 편찬팀장 : 염경형 정책실장

◈ **2차 회의** : 1) 17회 역사문화시민기행
2) 후원사업-이틀주막 추진의 건
3) 제5기 시민경제아카데미 추진의 건
4) 4·29 재선거의 의미와 지방정치 과제
5) 시민교육문화센터 개설의 건

◈ **3차 회의** : 1) 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김분호 회원)
기타 토의 : 2006 시민 후원 모집 사업 계획

◈ **4차 회의** : 집행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강주 회원)
기타 토의 : 이틀 주막 추진 보고 및 점검

◈ **5차 회의** : 시국토론회 개최의 건, 주제 :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과제

◈ **6차 회의** : 1) 제 10기 2차 Workshop 개최의 건
2) 제 2차 시국 토론회

◈ **7차 회의** : 하반기 workshop, 상반기 사업 평가 및 하반기 사업 계획

◈ **8차 회의** : 1) 집행위원 추가 선임의 건(조중길 회원)
2) 창립 10주년! 기념식 추진의 건
기타 토의 : 아름다운인연 맺기(회원확대사업)

◈ **9차 회의** :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추진의 건

◈ **10차회의** : 1) 11기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2) 2009년 회원 송년의 밤
기타토의 : 시국회의 구성의 건

▶ 집행위원회

- 10차례 회의, 1회 워크숍 진행
- 집행위원들의 적극성을 기반으로 단체 운영에 크게 기여 함.
- 집행위원회 본래 위상에 맞게 활동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 활성화 필요

[회의 안건]

◈ **1차 회의** : 1) 집행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후원사업-이틀주막 추진의 건 3) 회원확대 및 재정확충의 건
◈ **2차 회의** : 1) 후원사업-이틀주막 추진의 건(별지참조) 2) 집행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계획
◈ **3차 회의** : 1) 집행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강주위원 2) 후원사업-이틀주막 추진 상황점검
◈ **4차 회의** : 1) 후원사업 - 이틀주막 추진 결과 보고 및 평가 2) 집행위원회 강화방안
◈ **5차 회의** : 1)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토론회 개최 평가 및 향후계획
2) 집행위원회 강화방안-조중길 위원 추가 선임
◈ **6차 회의** : 1)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토론회 개최 평가 및 향후계획
2) 집행위원회 강화방안
3) 상반기 사업 평가 및 하반기 사업 공유
◈ **7차 회의** : 1) 참여자치아카데미 계획안 검토 2) 10주년 기념사업
3) 전주완주(완주전주)통합에 관한 기초토론
기타 안건 : 1) 회원확대 관련 2) 추석재정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

◈ **8차 회의** : 10주년 기념식 추진 점검의 건

◈ **9차 회의** :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추진 점검의 건

◈ **10차회의** : 1) 2009년 송년의 밤 추진의 건

2)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중간보고

3) 총회 준비위원회 활동 계획

11 연대사업 / 기타사업

■ 주요 연대 기구 :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용산참사전북대책위원회 활동

■ 고 노무현대통령 도민추모위원회 활동

■ 고 김대중대통령 도민 추모위원회 활동

■ 고 강희남목사님 장례위원회 활동

■ 미디어 공공성위원회 활동(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활동)

■ 전주시 청렴계약시민감시관 활동

-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대표감시관:박종훈) 활동 지속 전개
- 전주시 자원리사이클링 사업 시행 방법(민간제안 사업, 고시 사업)에 대한 검토, 부패 요소를 차단 할 수 있는 고시사업으로 변경 권고

■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참여

■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 활동(3대 과제)

-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운동)
- 카드수수료 인하(금융여신업법 개정 운동)
- 중·소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전라북도 경영평가위원회 참여(도 산하기관,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참여

■ 전라북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 참여

■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참여

■ 전라북도 중·소기업 사전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2010년(제11기) 사업 평가

◈ 사업 기조(2010년)

민생사업 확대! 활동구조 확대! 연대 확대!
1. 지역 경제•지방 재정 악화에 따른 민생사업 강화 2. 민주 파탄, 민생 파탄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 연대 3. 이명박 정부 심판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대응 4. 활동구조 구축, 회원 사업 다각화

◈ 사업 총평

■ 2010년은 이명박정부가 초래한 '민주주의 후퇴' '민생위기' '남북관계위기'등 3대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고착화되었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바뀌는 듯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여 정국이 경색됨으로써 6·2 지방선거의 결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예산 날치기를 감행하였다.

■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았다. 조사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의 지방 교부금이 7천억 가량 줄어듦으로써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영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포기, 지역경제의 수도권 종속화가 가속됨으로써 지역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잇따른 입점은 그나마 지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지역중소상인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책 없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급기야 중·소 자영자들의 분노를 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

■ 지방선거를 전국적 범주에서 보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교육과 복지 의제를 중심으로 여·야의 정책적 대립 구도가 형성 되었고,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여 후보단일화 운동 등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해 나갔다. 그 결과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와 자치단체장이 대거 당선되고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

건으로 인한 정국 경색으로 이명박정권의 주도권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정권심판이라는 지방선거 결과를 정치적 공세로 이어가지 못했다.

- 전북지역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일당독주라는 구도를 뛰어넘지 못했으나 그나마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들의 일부 선전, 젊은 후보들의 당선 등으로 분위기기 쇄신이 기대된다. 전북지역은 민주당의 일당독주를 견제 할 만한 정치세력의 부재로 인해 후보 단일화 운동 등 선거연합이 어려운 조건이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선거에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책제안운동(좋은정책만들기)과 '지방선거정책토론회',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를 여는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단체의 활동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교육감후보자 초청토론회와 선거방송 토론회, 전북일보 메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하였다.

- 지방 토호세력의 유착과 이권개입을 통로였던 지방의원의 겸업·겸직 문제는 지방정치 개혁의 중요한 과제였다.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원의 실제 직업과 겸직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제척하기위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활동구조를 다각화하는 사업은 회원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한해 동안 편집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독서 모임이 구성되었고, 기존에 활동구조였던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은 꾸준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새롭게 시도되었던 대학생 모임과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 이명박 정부 이후 '민주주의 위기' 국면이 말해 주 듯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중앙권력의 문제(국회, 사법,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되는 문제 혹은 법률개정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 중앙권력의 대결구도)로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제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지역 중심의 의제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은 단체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형성될 정치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단체 내적으로는 회원과 회원참여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단체의 활력을 도모하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분야별 사업 보고

1 정치·정세·시국 관련 사업

정치·정세·시국관련 사업은 6.2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의제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당 독점구조라는 지역 정치적 구도의 한계로 전국적인 의제와 긴밀히 결합되지 못했다.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실시 등을 매개로 정치연합, 후보단일화 운동 등 활발한 정치활동이 전개되고 지방선거 이후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등 지방선거 연장선에서 지역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민주당의 일당 독주라는 정치 구도에 갇힘으로써 정치연합, 후보단일화 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 개입방식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정책제안운동(좋은정책만들기)과 '지방선거정책토론회',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우리 단체의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고 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와 선거방송 토론회, 전북일보 메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하였다.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지방재정 등의 전국적인 현안은 지역 의제화라는 총괄적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세종시 문제는 지역의 혁신도시와 새만금 내부 개발 문제와 연결하여 접근하고, 4대강 사업은 전북연대회의 단체들과 함께 금강을 방문하는 한편 새만금 수질문제와 연결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지방재정문제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전북지역 자치단체 결산 현황 조사를 통해 정부 교부금 감소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LH공사 이전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종에 따른 중앙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연계해 진행하였다.

■ 6.2 지방선거 사업

▶ 성명·논평·보도자료

2월 16일 <성명> 전라북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시도를 중단해야한다

3월 11일 <성명> 민주당은 시민참여배심원제를 확대하고 지방의원 줄세우기식 공천을 중단해야 한다.

3월 19일 <논평>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선관위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3월 24일 <논평> 정동영의원은 줄 세우기식 정치행보를 멈추어야 한다.

5월 11일 <논평> 전주KBS는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선거 방송토론회를 진보신당을 비롯한 후보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5월 18일 <성명> 민주당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한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철회 하라.

5월 25일 <논평>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5월 28일 <보도자료> '좋은 정책 만들기' 6·2지방선거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 결과보고서

6월 1일 <논평>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하려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일,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6월 9일 <논평> 불법 선거 철저한 수사로 당선이 면죄부라는 인식 바로 잡아야 한다.

▶ 토론회

<6.2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과제>

- 일 시 : 3월 18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경원동 기업은행 5층)
- 주 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주 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일보, 전북CBS, 티브로드 전주방송

주 제	발표자
6.2 지방선거의 의미	박동천(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북지역 정치세력 구도와 전망	임성진(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과제	김지성 교사(전주한일고, 전교조 전 정책실장)
사회/백종만(전북대사회복지학과)	패널 / 박 민 실장(전북민언련 정책실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무상교육 확대 어떻게 가능한가?' - 무상급식, 중학교운영지원비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0년 4월 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1층 회의실
- 주 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일보, 전북CBS, 티브로드 전주방송

주 제	사회	발표자
교육분야	이경한 공동대표	최순삼(전북청소년교육문화연구원장)
		박세훈(전북대학교사범대학 교육학과교수)
시민·사회 단체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소병돈(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사무국장)

<교육감후보 예비후보 초청토론회>

- 일 시 : 2010년 5월 15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덕진구청 강당
- 주 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북일보사

구 분	참여자
예비후보	오근량, 박규선, 고영호, 김승환, 신국중
패 널	김영기집행위원장, 정우식(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부원장)
사 회	이경한 공동대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제안하는 6·2 지방선거 '좋은 정책 만들기'

▷ 4대 분야 27개 정책 과제 (발표: 2010년 5월 2일)

1. 무상·의무교육 실질화	1)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2)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
	3) 초·중등학교 학습준비물의 무상화 추진
	4) 중·고등학교 동계 및 하계 교복구입 무상추진
	5) 학교 내 복지관련 전문 인력 배치
	6)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기구 상설화
	7) 중학교 운영지원비 전면 폐지
2. 사람을 위한 지방자치, 따뜻한 복지의 실현	1)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대
	2) 아동과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지원
	3) 0세 영아를 대상, 가정 내 육아도우미 지원
	4) 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형 일자리로 확충
	5)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유인 및 교육훈련 강화 및 경과적, 시장형 일자리 제공
	6)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적, 즉 고용안정과 함께 고용형태가 유연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7) 지방복지재정 비중 10%p 상향 조정
	8)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실적 배치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강화
	10) 일반 행정직의 복지업무담당으로의 전환 등으로 공공복지인력 확대
	11) 전라북도 복지수요 및 공급에 대한 현실성 강화
	12) 전라북도 복지관련 전문연구기관 설치 제안

3. 청렴하고 투명한 자치·교육 행정 구현	1)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운영=>청렴시민위원회 구성
	2)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장 인사위원회 실질화
	3)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 및 총액 규모 공개
4. 지역 중·소상인 보호	1) 지방정부의'유통산업 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노력.
	2)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여 신규 유통점의 입점을 규제.
	3) 교통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고, 차명 입점 방지.
	4) 지역민 고용과 지역 산품 매입을 위한 노력을 전개.
	5) 지역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경·관 협력 체제를 구축.

▶ '좋은 정책 만들기' 6·2지방선거 후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보고

• 발표 : 2010년 5월 28일(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6·2지방선거 평가토론회

• 일 시 : 2010년 6월 8일(화) 오후 7시30분

• 장 소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회의실

구 분	발 표 자
사 회	이경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국중심의 선거 결과 평가와 전망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지역중심의 선거 결과 평가와 전망	임성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교육감선거 결과 평가와 전망	정우식(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원장)
정책제안운동의 성과 및 평가와 향후전망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방재정 관련 사업

▶ 지역경제위기와 지방재정위기 해결 방안 모색

• 일 시 : 2010년 3월 25일, 15시, 회의실

• 강 사 : 홍헌호(시민경제연구소 연구원)/ • 주 최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방재정위기 진단 토론회

• 일 시 : 2010년 4월 1일, 15시, 서울 참여연대/ • 주 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2009년 수익 결산 분석 보고 발표

• 일 시 : 2009년 9월 8일(홈페이지 차료실 참조)

2 행정·지방의회 관련 사업

행정·지방의회 관련 사업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하였던 지방의원의 이해관계 충동 방지 사업(겸업·겸직의 회피)울 중심으로 지방의회 교황선거방식 개선과 의장단 선거 금픔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 활동, 전라북도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활동, 전라북도경영평가위원회 활동 등이 전개 되었다. 이중 지방의원의 이해관계 충동 방지 사업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토대로 전북지역 지방의원의 겸업 겸직 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냈다.

■ 지방의원 이해관계 충돌 방지 사업

▶ 성명·논평·보도자료

06월 28일 <보도자료>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 이해관계(겸업,겸직) 회피를 위한 방안 모색 조사

07월 12일 <논평> 지방의원 이해관계 회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08월 9일 <성명> 전북도의회 이현주의원 본인의 결단을 촉구한다

11월 11일 <성명> 동규도의원이발의한시대착오적인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은철회되어야한다.

▶ 조사 발표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구성관련 이해관계 회피를 위한 방안 모색 발표

• 일 시 : 2010년 6월 28일(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 활동

▶ 구 성

직 위	성 명	소속 및 직책
대표감시관	박 종 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고문
감 시 관	배 승 기	건축사
감 시 관	박 경 기	공인회계·세무사

감 시 관	오 항 록	기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감 시 관	최 낙 준	변호사

▶ 활동 사항

-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제방 안전펜스 설치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사업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 작성, 사업 재검토 요청
- 전주천 덕진보 철거로 인한 상류 피해 구간 원인 규명
  · 설계 또는 시공의 문제 원인 규명 요청, 책임 소재 및 재방 방지책 요청
- 노송천복원 프로젝트 추진상황
  · 노송천 복원이 완공된 1구간에 대한 현장 실사 및 공사진행 상황 점검

▶ 기 타

-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 사무실 구축 및 운영예산 확보
  · 2010년 8월, 구중앙동사무소 2층 · 2011년 사업 및 운영(간사 1인 포함) 예산 확보

3 민생사업 관련 분야

1.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재정 사례조사

1) 청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운동 현황 조사

- 09‘ 중반부터 사회인권위원회 출범 준비
-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채택 :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사업 구체적으로 논의
- 09‘ 11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지역복지관 공동으로 내부토론회 개최
- 청주시 지원내용, 토지주택공사 지원내용, 입주주민 요청사항 등을 조사
- (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 개최(청주시의회)

2)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현황 조사

► **평화동 1,4단지 입주현황(2009. 12월말 현재)** (단위 : 가구)

구 분	계	수급자	모♦부자	국가유공자	탈북자	일반인	비 고
계	2,873	2,110	15	19	33	696	대기자 2,331
1단지	1,650	1,089	9	9	10	533	대기자 1,127
4단지	1,223	967	9	9	17	221	대기자 1,204

- 전주시에서 공동전기료 지원
- 토지주택공사 수급자에게 관리비10% 지원
- 지역내 종합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 입주세대 중 19.3%(573세대)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체납 상태
- 주거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지원 방안 연구 필요

2. SSM관련 대응사업

- 롯데수퍼, GS수퍼 지역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성명 및 논평 발표 사업진행
- SSM진입과 관련 규탄기자회견 개최 및 차량시위 진행
- SSM개점 관련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롯데수퍼 본사, GS수퍼 본사의 사전실무조정회의 참여

3.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국회개정 이후 전라북도조례제정사업 진행

1) '전라북도 SSM규제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0년 11월 30일 오후3시
- 장소 : 전라북도의회 1층 회의실
- 진행 : 임성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제 : ■ SSM관련 법률개정의 의미와 한계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생사업국장)
  ■ SSM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및 지역상인 현장 상황
  (최진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 SSM규제 관련 타지역 사례 검토
  (유창희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법률개정 이후 조례제정 방향
  (최진호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토론 :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진왕(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운영위원장)

2) '전라북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발의 접수 및 기자회견 개최

- 유창희의원, 최진호의원,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은 11/30 관련 토론회 개최 이후 4차례 실무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

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안(공동대표발의 : 유창희의원, 최진호의원)을 12월 22일 발의 접수

- SSM관련 쌍둥이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 진입하는 SSM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이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
- 이로써 대형유통기업들의 무분별한 지역내 진입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상인들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경제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게 됨
- 주요내용은 첫째, 실질적인 SSM입점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유통법에서 지정한 등록대상지역 외에서 SSM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상권조사결과 입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권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포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SSM입점으로 인한 지역내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SSM의 신규입점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기입점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단축 및 조정, 영업품목 조정에 관한 기능 등을 담당하게 하여 실질적인 상생과 지역경제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각 시,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대부분의 등록과 심의, 고시 등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등록심의위원회를 두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행정과 권한쟁의를 피하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현을 고무하고자 하는 것임.
- 넷째,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규모점포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와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규정을 둠. 조례에는 벌칙사항을 둘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에 기초하고 이를 보완하여 지역내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각 시,군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제한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발표
- 각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임.

4 시민교육·문화사업

시민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 속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이슈를 개발하여 신규참여자의 수가 대폭 늘었으며, 시민들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강사들을 섭외하여 단체의 외연을 넓히는 성과를 내었다. 담당 간사의 퇴직으로 발생한 사업의 공백기를 센터운영위원과 사무처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리 없이 극복하였으나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위해 담당실무자의 배치가 중요하게 요구된다.

1. 시민교육사업

올해 제6기, 제7기 시민경제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공개강좌로 영화배우 권해효를 초청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희망에 대해 강연을 개최하였으며, 제7기 시민경제아카데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을 초청하여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입장을 공개강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시민경제아카데미와 참여자치아카데미를 통합하여 시민경제아카데미를 각각 봄, 여름 두차례 진행하였으며 다양하고 쉬운 주제들을 선택하여 강좌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정치와 경제 등에 집중했던 지난 아카데미와 달리 문화강좌와 문학과 미학 등 인문학강좌를 적절히 배치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다만,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강사정보수집과 섭외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사업 기획이 늦어져 강좌에 대한 시민홍보 기간이 줄어들어 많은 시민들에게 강좌 참여의 기회를 늘리지 못한 문제점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 시민경제아카데미

구분	강좌 수	등록인원(신규)	연인원
6기	6	37(35)	135
7기	6	38(27)	157
공개강좌	권해효		150
	문성근(7기공개강좌)		230
계	13		672

■ **제6기 시민경제아카데미**

구분	주 제	강 사	참석인원
4/8	“ㅏ”다르고 “ㅓ”다른 세상	강준만 / 전북대신문방송학과 교수	15
4/13	안도현의 시적인 세상을 찾아서	안도현 / 시인,우석대 교수	30
4/15	부자들의 행복한 가계부	제윤경 / 에듀머니 이사	22
4/19	입학사정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 / 교육평론가	25
4/20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	손석춘/새사연 연구원장	26
4/27	기업인이야기 (기업인, 문학인으로 삶의 여정)	국중하 / 우신산업대표, 수필가	17

■ **제7기 시민경제아카데미**

구 분	주제	강사	참석인원
10/15	남자들이여, 가정의 주춧돌인가, 영혼의 노숙자인가 - 여성들도 알아야 할 비아그라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 -	채수홍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40
10/18	우리아이 공부, 얼만큼 잘해야 할까 -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간 큰 아빠의 희망교육 분투기 -	이광구 (사)밝은마을 이사장	36
10/20	에로스, 낭만적 사랑의 이중성과 허구성 - 사랑과 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 그리고 유쾌한 상상 -	김융희 서울예술대학교 미학	25
10/22 공개강좌	민주주의의 바다, 시민의 바다 - 영화배우 문성근이 꿈꾸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한 유쾌한 백만 민란 -	문성근 영화배우	230
10/25	책은 고통을 주지만 맥주는 즐거움을 준다 -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는 맥주의 300년 역사 이야기 -	임범 대중문화평론가	26
10/27	도시 전주의 숨겨진 아름다운 속살 벗기기 - 선비 글읽는 소리와 술익는 향기가 어우러진 한옥마을 옛골목이야기-	이홍재 전라북도립미술관장	30

2. 역사문화시민기행

역사문화시민기행은 올해 18, 19회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서산 일대를 ‘천년의 미소, 백제의 숨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진도 일대를 ‘들녘 가을 향기는 아리랑길에 잠시 머물고’라는 주제로 각각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지 문화 해설사들을 섭외하여 문화역사기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횟수가 거듭되면서 역사기행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있다. 기행과 관련한 경유지의 효율적인

시간배치, 식사와 편의 제공 등에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차량배치 등 기행과 관련된 사항을 문자 서비스와 전자우편 등 사전연락을 통해 참여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 기행 현황

구분		장소	참석인원
제18회	4월 4일(일)	서산마애삼존불-개심사-수덕사	105
제19회	10월 31일(일)	우수영관광단지-진도운림산방-남도석성	94
계			199

5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1. 사업 총평

지난 3/11 첫 정기모임을 개최한 후로 16차례 정기모임, 2차례 조사자료 발표, 4차례 저녁모임 등을 전개하면서 시민활동기구로서 안정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19명 회원들이 활동중이며, 2010년 신입회원 2명이 가입했다. 대형마트 모니터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SSM 기습인수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동네상권 진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널리 확산시켰으며 유통법,상생법 법률개정 이후 전라북도 조례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 운영위원장(김진왕), 대형마트 조사사업과 법 개정 운동 등 진행

2. 조사 활동

1) 대형마트내 우리지역농산물의 진열판매 및 용역업체 계약현황 조사결과 발표 (2010.6 10)
2) 동네수퍼와 SSM 생필품 가격비교 조사결과 발표(2010.8.23)

3. SSM관련 대응사업

1) 2010년 1월 6일 롯데수퍼 송천점 기습인수개점에 대한 규탄 시위 참여
2) 2010년 4월 20일 GS수퍼 서곡점 개점에 대한 규탄기자회견 이후 시위 참여
3) 2010년 11월 25일 GS수퍼 송천점 개점 관련 현장 중소상인 면담 및 조사 작업
4) 2010년 11월 3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 “유통법, 상생법 법률개정의 의미와 한계”

토론회 참석 - 김진왕 토론자 참여, 모니터단 회원 토론회 방청

5) '전라북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발의 접수 기자회견 참여

6 시민교육문화센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사회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7명을 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각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단체가 진행하여 온 시민경제아카데미, 참여자치아카데미, 역사문화시민기행을 시민교육문화센터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7 사회복지위원회

2010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적구성 확대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 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8 편집위원회

4월부터 이경한 대표를 위원장으로 이강주편집실장과 김경숙, 이형월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통신의 레이아웃을 정립하고 회원참여확대, 컨텐츠의 변화(사진, 교육, 건강 등)등이 이루어졌으며 회원통신의 기획과 평가 등을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9 회원•재정 사업

회원 사업은 활동구조를 확대하여 회원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각종 행사에서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 workshop을 '회원 마당'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회원캠프는 다수의 회원이 참여하였지만 상반기 회원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에 대해 2011년은 상반기는 회원 workshop으로, 하반기는 '회원마당'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0년 회원 확대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탈퇴회원 또한 증가하였다. 회원확대 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

이 요구된다.

재정사업은 기존의 명절 재정사업이 사업 일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을 고려하여 '설 재정사업'만을 진행하였으며, 당분간 명절 재정 사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틀주막과 후원의 밤은 2009년에 비해 수입이 모두 줄어들었다. 이틀 주막은 티켓 판매가 부진으로, 후원의 밤은 전년도에 진행된 10주년 사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매년 이틀주막과 후원의 밤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지만 역으로 회원들에게 상당부분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후원 사업을 연 1회로 줄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회원 소식지는 '편집위원회'를 구성(4월)하여 소식지의 기획과 편집을 담당하였고, 매월 회의를 개최하였다. 편집위원회 활동 결과 필자가 증가하였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식지를 보완하였다. 상반기는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반기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지면 구성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위한 노력이 있었다.

▶ 회원 현황

1. 월별 회원 현황(2010.1.1.~12.31)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회원 수	762	765	765	783	787	779	778	780	783	786	797	802	802
신규	3	6	8	20	8	2	11	4	9	3	13	8	95
탈퇴	5	3	8	2	4	10	12	2	6	0	2	3	57

2. 월별 정기 회비 납부율(C.M.S + 자동이체) 현황 (단위:천원)

정기회비 납부율은 회원수 대비 정기적인 회비 납부율을 표시한 것으로, 회비 납부의 안정성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집계에서 후원금은 제외하였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납부율(%)	75%	75%	72%	68.4	74.2%	74.5%	72%
정기회비	12,840	12,476	10,772	9,483	10,451	11,114	9,846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평균
납부율(%)	72.7%	72%	75%	70.5%	73%		73%
정기회비	11,706	11,020	11,016	10,343	11,170	132,237	11,020

3. 이틀주막 결산 (단위:천원)

구분	수입	전년 대비
2009년	42,601	8,525천원 감
2010년	34,076	

4. 후원의밤 결산 (단위:천원)

구분	수입	전년 대비
2009년	69,720	36,786천원 감
2010년	36,434	

※ 위 금액은 2010년 12월 31일 회계마감 기준으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며, 예상 후원금액 49,598천원에 13,164천원이 미수금 된 것으로 미수된 티켓 판매분과 약정 후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수금이 필요하다.

5. 명절 재정사업 (단위:천원)

구 분	수 입	비고	전년 대비
2009	8,735	설·추석 재정사업(2회)	6,270천원 감
2010	2,465	설 재정사업(1회)	

▶ 회원통신

1. 발송 현황

구분	내 용	비 고
발송현황	973부(1월)/ 996(12월)	23(증)
제작현황	제작비(1천만원)/발송비(3백3십만원)	총1천3백3십만원

2. 2010년 회원통신 기고자

월	마음시	칼럼 기고	특집	이야기							회원의글	기타
				건강	교단 일기	문화	복지	세무	책소개	사진		
1월	이형월	임성진		이강주			서양열	김성수			권윤아	
2월	이형월	이경한	지방 선거								나영신 정우식	김영기 이창엽/최성미

3월	이형월	김남규	지방 선거								송정호/박진희 최재흔	박종훈
4월	이형월	이경한		이강주	임수정	양진환					김병홍	
5월	이형월				김승환	조세훈				이경한	김진성/최우영 김분호/김상오	
6월	이형월	이창엽 이경한	김영기		임수정				김경숙		유두희/최갑표	
7월	이형월			이강주	김승환					이경한		이정현
8월	이형월	이경한	김남규	이강주	임수정	유대수			김경숙	최정우	김미아	
9월	이형월		김남규		김승환	조세훈			김남규	이경한	박영민/손정희	
10월	이형월	이경한	김남규	이강주	임수정	양진성				이경한	황만길/이창엽	
11월	이형월	김영기	김남규			이상훈			김경숙	이경한	김선경/황일상 이윤애	
12월 (123호)	이형월	이경한	김남규	이강주	임수정	조세훈				이경한	김용택/정수미	

10 회의

▶ **운영위원회** - 9차 회의(회원마당 2회) 진행

〈회의 안건〉

■ 1차 회의 : 상반기 회원마당과 함께 진행됨

- 정관 개정의 건(감사 임기 규정에 관한 건)
- 재경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정관 조항 수정의 건

■ 2차 회의

- 정관 개정의 건 수정 확정
- 2010 희망나눔 이틀주막 실시와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 6.2 지방선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기타토의: 지방선거 상황 공유, 운영위 간사(김 숙) 운영위 총무(김상현) 선임

■ 3차 회의 : 이틀주막준비위원회 구성

■ 4차 회의 :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개최의 건

■ 5차 회의 : 사업 보고

■ 6차 회의 : 회원마당 개최의 건, 기타토의: 치아캠프관련 토론

■ 7차 회의 :

- 제7기 시민경제아카데미 개최의 건

- 역사문화시민기행 (진도기행)
- 회원배가운동
  -. 희망나눔 119, 후원의 밤 준비의 건

■ 8차 회의 : 희망나눔 119, 후원의 밤 개최의 건

■ 9차 회의 : 제12기 정기총회 준비위 구성의 건

▶ **집행위원회** - 9차례 회의 진행

〈회의 안건〉

■ 1차 회의
- 집행위원회 안정화 방안
- 활동기구 활성화 방안
- 회원마당

■ 2차 회의
- 6.2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입장
- 지방선거 토론회 (안)
- 지방재정 진단 기획 토론회
- 제6기 시민경제아카데미
- 제18회 역사문화시민기행
- 이틀주막

■ 3차 회의 : 사업보고

■ 4차 회의 : 사업보고

■ 5차 회의 : 사업보고

■ 6차 회의 : 회원마당 주친의 건

■ 7차 회의 :
- 가칭) 지방자치센터 설립의 건
- 역사문화시민기행 시행의 건
- 시민경제아카데미 시행의 건
- 회원배가운동

■ 8차 회의 : 사업보고

■ 9차 회의 : 회원 송년의 밤 개최의 건

11 연대사업 / 기타사업

■ 주요 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 사안별 연대 : 4대강 사업 중단 전북협의회/ 국치100돌, 사업추진위원회/
통일 쌀 보내기 전북본부

■ 기타 :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전라북도경영평가위원회/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위원회/ 전주완주혁신도시추진위원회/
전라북도중·소기업사전조정협의회/ 전라북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전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완주군재정심의위원회

※ 2010년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www.pspa.or.kr)과 '2010 후원의 밤 희망나눔 119'에 수록된 사업보고서를 참조바랍니다.

'2010 후원의 밤 희망나눔 119' 사업보고서 목차

제 목	페이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제안하는 6·2 지방선거 '좋은 정책만들기'	13
■ '좋은정책만들기' 6·2 지방선거 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보고서	30
■ 대형마트내 우리지역 농산물의 진열 판매 및 용역업체 계약 현황 최근 자료 조사 결과	44
■ 식용유와 생활세제 등, 동네슈퍼보다 SSM(기업형수퍼)가 더 비싸다	49
■ SSM(기업형 수퍼) 동네수퍼 장바구니 생필품 가격 비교 조사 보고	51
■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2009년 수익 결산 분석보고서	55
■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구성관련 이해관계(겸업,겸직)회피를 위한 방안 모색	66
■ 성명·논평 자료	72~106

2011년(제12기) 사업 평가

◈ 사업 기조(2011년)

지방자치20년! 2012 민주개혁정부수립! 민생사업 확장!

1. 지방자치20년, 자치역량 강화!
2. 2012 총선·대선, 연대활동 강화!
3. 민생사업 확장!
4. 활동기구 활성화, 회원배가와 회원사업 확대!

◈ 사업 총평

- 201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만 20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한계를 비롯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국연대회의의 토론과 조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지역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였다.

- 특히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 '전북! 판을 바꾸자'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지역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 공론화하였다.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민주•진보 세력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정치 혁신하기 위해 '전북@혁신과 통합'을 만들고, 야권통합을 위한 '시민통합당'을 추진하였다.

- 2011년은 '무상급식' 문제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졌으며, 민생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복지국가를 전망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진화하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상반기 '대형마트 동전장보기' 운동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중.소상인 보호 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 현안으로 발생한 '전주시내버스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활동과 '공공요금 인상' 대책 활동 등 민생 현안에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 활동기구 활성화에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편집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은 상반기 '대형마트 동전 장보기' 사업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리더센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 지방정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강연회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혁신과 통합, 시민참여당 건설 등에 집중하면서 센터 중심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 2011년은 지방자치 20주년의 맞아 지방자치를 점검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리더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지방자치 역량강화'는 새롭게 시도된 사업으로서, 전북혁신과 통합-시민통합당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전북! 판을 바꾸자'는 주제로 지역의 문제, 지역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 공론화 하는 한편,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역 문제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 2012년은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시민운동 세력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 세력을 통합해 내는 일과, 시민들의 삶을 개선 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의미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중심화 되어 있는 의제를 어떻게 지역 의제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와 지역 민생의 해결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구축할 수 있는 세력으로 지역 정치를 바꿔내는 것 역시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 분야별 사업 보고

정치 · 정세 관련사업

1. 정치개혁, 혁신 사업

1) 전북@혁신과 통합 지역 활동에 참여

- 제 7차운영위원회(8월 27일)에서 혁신과 통합 지역 활동 참여 승인
- 전북@혁신과 통합 발족, 10월 5일, 전주전통문화센터

2) 지방자치리터센터 시민강연회

- 7월 6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이인영, 오후 7시 30분, 전주시청대강당
- 8월 24일/ 민주세력 재집권의 비전과 시민사회의 역할-이해찬,문성근, 오후 7시 30분, 전주시청 강당

3)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 지역운동연대와 공동사업 진행,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운동에 참여

4) 지역 혁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전북! 판을 바꾸자' 토론회 5회 개최

5) 전북도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 5월 31일, LH공사 유치 실패 교훈삼아 전북의 정치와 행정, 시민사회의 새 장을 열어가자!

2.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전북! 판을 바꾸자!

주 제	주 제	토론자
1차 (7.13)	**낡은 지도력 청산!** ■ 민주당 독점 폐해-사례, 진보정당 한계 ■ 지역정치 혁신과 대안 세력 마련 방안 ■ 관변화 탈정치화 되고 지역적 구도에 함몰된 시민사회운동의 한계, 보수·관변단체의 지역 고착화 문제와 시민사회 혁신 방안 ■ 지역의 낡은 리더십을 유지해온 지역 현안(새만금, 방폐장, LH등)을 통해서 본 지역의 • 리더십 문제와 지역 혁신 과제 ■ 지역의 낡은 리더쉽과 관변화된 언론의 공생관계가 불러온 폐해-사례	윤찬영(전주대교수) 송기도(전북대교수) 김영기(집행위원장) 박 민(민언련정책실장)
2차 (8.11)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력은 없는가?** ■ 민주당 일당 독점의 형태와 폐해, 대안은 없는가? ■ 민주당 일당 독점과 지역 토호세력의 카르텔 ■ 진보정당의 한계와 문제점 ■ 현재의 진보정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지역/ 지방정치는 살아 있는가? ■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 종속화를 탈피할 해법은 없는가? ■ 전북도민은 왜 민주당을 선택하는가? ■ 지역에서 야 4당의 통합이 필요한가? ■ 통합 논의의 조건 형성은 되었는가? ■ 시민정치, 주민정치 가능 한가?	오현철(전북대사범대교수) 임성진(공동대표, 전주대교수) 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김남규(사무처장)
3차 (9.7)	**지역 언론이 바뀌어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 ■ 지방언론, 지방신문의 실태와 문제점 ■ 지방신문의 난립 구조의 문제점 ■ 지역의제 없는 지역 언론 ■ 지방정치,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의 역할 ■ 지역언론, 지역신문 개혁 방안 ■ 타 지역 사례 등	박민(전북민언련정책실장) 염경형(정책실장) 김경섭(새전북신문 전편집국장) 김성주(전라북도의회의원)

4차 (10.10)	**전북을 바꾸는 시민의 힘!** ■ 전북 시민사회 판을 살펴본다.(관변화, 정치주변화와 전북의 현상) ■ 전북의 토호세력-보수단체와 전북의 현상 ■ 전북의 시민사회-성찰해야 할 문제는? ■ 전북의 발전-내재적(내생적)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새만금 밖에서 희망을 보다2.(기업형 모델, 지역순환형 모델, 주민참여형 모델을 중심으로)	윤찬영(전주대 교수) 박용근(경향신문기자) 함한이(전북대학교 교수) 김영기(집행위원장)
5차 (12.7)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사람 살기 좋은 지역'으로!** ■ 기업하기 좋은도시에서 사람살기 좋은 지역으로! ■ 새만금 밖에서 희망을 보다1.(내생적 발전전략과 사회적 경제) ■ 새만금 밖에서 희망을 보다2. (기업형 모델, 지역순환형 모델, 주민참여형 모델을 중심으로)	임성진(공동대표,전주대 교수) 원용찬(전북대 교수) 임경수(주)이장 대표

민생 관련 사업

1. 전주시내버스 파업 해결을 위한 활동(1월~5월)

■ 성명 및 논평 : 6회

- 1월25일 노•사 양측은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 2월 9일 버스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 2월25일 전주노동지청의 '불법파업'규정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재고되어야 한다.
- 3월 8일 버스 파업 사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한다.
- 4월20일 버스파업의 해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22일 대타협을 통한 버스파업 해결을 기대한다.
- 4월26일 버스파업의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를 환영한다.-성실한 합의 이행을 위한 성숙한 노사관계를 기대 한다.

■ 버스 회사 회계 투명성 확보 및 보조금 관련 성명 : 2회

- 6월29일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 버스요금 인상 기정사실화 절대 안 된다.
- 10월27일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 버스보조금 지급 있을 수 없다.

■ 토론회 : 5회

■ 촛불문화제 : 1회

2. 대형마트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행동 '동전장보기 운동'

■ 총 6차례 ■ 연인원 630명 ■ 10원짜리 동전 40만개

3. 기타 민생현안 대응 사업

■ 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대책 활동
■ 전라북도 가스 요금 생색내기 인하 문제 제기
■ 전라북도 버스요금 인상 대책 활동
■ LH 공사 전북 이전 실패 관련 대응 활동

행정 · 의정 관련 사업

1. 성명·논평

- 민생을 저버린 김호서의장의 떳떳하지 못한 골프외유를 개탄 한다.
- 일제 만행 전범 행위를 찬양한 전주시의회 김윤철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 전주시의회 김윤철의원을 비호하는 의원들을 규탄한다-망언의 당사자는 즉각 사퇴하라
- 김윤철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2. 정보공개 사업

- 전라북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진행 현황

청구 : 1월 24일
청구 내용 : 2009~2010년 건설교통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 집행사업
공개 내용 : 2009년~2010년, 시군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현황

- 전주시장 공약사업 중 '우리밀 가공 유통 진흥사업 관련'

청구 : 2월 18일
청구 내용 : 사업개요, 연도별 추진계획, 보조금 지원 근거, 업체선정 기준
공개 내용 : 지원 내역, 연도별 지원 계획, 지원근거 및 심사 결과

- 전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계획 및 추진 실적

청구 : 3월 25일
공개 내용 : 2009~2011년 (총괄) 전주시 청렴도 향상 업무 계획

- **최근 3년간 전주시 관내 보도블럭 교체 현황**

  청구 : 4월 20일

  청구 내용 : 3년간(2008~2010년) 보도블럭 교체, 구간. 공사금액, 업체명, 사유

  공개 내용 : 보도블럭 교체 현황

- **최근 3년간(2008~2010년) 전북교육청 관내 급식사고 발생 현황**

  청구 : 4월 20일

  청구 내용 : 연도별 급식사고 건수, 환자 수, 발생 시기, 원인, 대책

  공개 내용 : 급식사고 현황 등

- **전라북도 LH 유치관련 행사 및 홍보비 집행 내역**

  청구 : 9월 29일

  청구 내용 : 2010년~2011년 9월 현재 집행내역(영수증 등)

  공개 내용 : 집행 현황(총괄 금액)

  추가 자료 요청(2010년 세부 집행내역 공개, 2011년분은 정산 보고 완료 후 공개)

-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 : 10월 11일

  청구 내용 : 2011년 1월~6월, 도지사 정무,행정부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내용 : 홈페이지 참조

  추가 자료 요청(일자별 집행현황-공개, 100만원 이상 지출 건 증빙자료-추가 공개 예정)

- **전라북도가 애향운동본부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

  청구 : 10월 11일

  청구 내용 : 2010년 1월~6월, 경상,시책,사회단체보조금,자본보조, 행사보조 등

  공개 내용 : 보조 내역 2건

  추가자료 요청 : 집행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정산 보고 완료 후 공개

부정 부패 방지 관련사업

1. 성명&논평

- 강봉균의원 보좌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 한다.
- 윤승호.강인형군수 확정판결에 대하여-유권자를 현혹하는 불법 선거행위는 뿌리뽑혀야 한다.

- 검찰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관여 여부 수사를 촉구 한다.
- 전주 시청의 부적절한 돈 봉투 제공,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전북연대회의)
- 재발방지 약속과 자율정화 의지가 선언적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전북연대회의)

2. 전주시청렴계약 감시관 활동

- 전주시청렴계약감시관협의회장 선임 : 김영기 집행위원장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대표 : 김남규, 위원 : 백승기, 강주영, 송일섭, 이존걸)
  사무처 간사 : 서진현
- 주요 대상 사업
  .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 센터 건립 관련 고시 내용 검토(계속사업)
  . 전주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안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검토
  . 35사단 이전 개발 사업 검토
  . 전주시 유수율 재고사업 진행 현황 검토

◈ 활동 기구별 사업 보고

1. 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경한)

■ 편집회의 정례화, 월별 결산보고 신설, 회원 기고 글 확대

총 제작부 수	총 발송 부수	제작 및 발송비용
12,800	12,347	12,996천원

사업 보고 성격의 글 수				회원참여·기고 성격의 글 수			
성명•논평	일정보고	월별 결산보고	특집	칼럼	회원 글	회원탐방	사진으로 보는 세상
31	12	11	21	7	73	11	11
75				102			

2. 시민교육문화센터(위원장 : 황선철)

■ **제 8기 시민경제아카데미** (등록 32명, 연인원 136명 참여, 공개강좌 400여명 참여)

구 분	주 제	강 사
6.2일(목) 오후 7시/ 전북은행 대강당, 시민공개강좌	MB정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세균 (국회의원)
제2강 6.7일(화)/ 오전 10시	시험성적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 경제교육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
제3강 6.9일(목)/ 오전 10시	지역경제 희망을 꿈꾼다.	유영배 (완주군 안덕파워빌리지 촌장)
현장탐방 6.11일(토)/ 오전 10시	완주군 안덕 파워빌리지 건강힐링 체험마을	
제4강 6.14일(화)/ 오전 10시	윤리적 생산과 윤리적 소비!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5강 6.16일(목)/ 오전 10시	코끼리를 쓰러트린 개미	김종기 (유명마트 대표)

■ **제 20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일 시	2011년 4월 17일(일)
장 소	보성 녹차밭, 화순 운주사,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참가 인원	139명 참여

■ **제 21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일 시	2011년 10월 23일
장 소	경상남도 창녕박물관, 우포늪
참가 인원	127명 참여

3.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서양열)

- 정기 모임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
- 6월 28일/ 시민복지아카데미(1강)-이태수, 오후 7시 30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6월 30일/ 시민복지아카데미(2강)-윤홍식, 오후 7시 30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4.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운영위원장 : 김진왕)

- 상반기는 '대형마트 동전장보기 운동'에 집중하여 활발한 활동을 진행 함.

- 하반기에 PB상품 조사 활동을 시도하였으나 조사의 한계를 느낌
- 정기 모임을 몇 차례 갖다가 휴지기에 들어 감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운동, 중소기업 보호법 등 개정운동,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 제도의 위기 등 현안 대응

5. 지방자치리더센터(센터장 : 황현선)

- 7월 6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이인영, 오후 7시 30분, 전주시청대강당
- 8월 24일/ 민주세력 재집권의 비전과 시민사회의 역할-이해찬,문성근, 오후 7시 30분, 전주시청강당
- 전북@혁신과 통합 사업으로 전환

◈ 조직운영 및 회의

■ 운영위원회

날 짜	안 건	비 고
1차(2월26) 상반기워크숍	• 정세 강연-2012년 총선·대선 정세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김기식)	임실 환경교육관
	• 2011년 세부사업 계획 수립	
2차(3월28일)	• 정관 개정의 건	회의실
	•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경과보고 및 참여 승인의 건	
	• 2011 희망나눔 이틀주막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3차(4월25일)	• (현안토론) 석패율 제도에 대한 제고-기타 토의	회의실
4차(5월23일)	• (현안토론) 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관련-기타토의	회의실
5차(6월27일)	•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업 모색(안) 검토의 건	회의실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계획 검토의 건	
6차(7월25일)	• 여름 회원마당 추진의 건	회의실
	• 안호영 공동대표 사임의 건	
	• '전북! 판을 바꾸자' 사업 관련 토론	
	• 5월 회계 수정 보고의 건	
7차(8월27일) 하반기워크숍	• (가칭) '혁신과 통합' 지역 활동 참여를 승인의 건	임실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북! 판을 바꾸자 세 번째 토론회 계획(안) 토의	

8차(9월26일)	• 제21회 '역사문화시민기행' 추진의 건	회의실
	• 창립 12주년 기념 '후원의 밤' 추진의 건	
9차(10월24일)	• 자문위원 추가 위촉의 건	회의실
10차 (10월24일)	• 제 13기 정기 총회 일정 확정 및 총회준비 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실
	• 2011년 회원 송년의 밤 개최의 건	
	• 시민통합당 창당 참여자 운영위원 사임의 건	

■ **집행위원회**

날 짜	안 건	비 고
1차(2월8)	•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일자 검토의 건	회의실
	• 각 활동기구 사업 계획의 건	
	• 제 12기 1차 회원 Workshop 개최의 건	
2차(3월14일)	• 희망 나눔 이틀 주막 추진의 건	회의실
3차(4월11일)	• 안건 없음, 현안 사업 보고 중심 토의	회의실
4차(6월13일)	• 박우성 간사 채용 승인의 건	회의실
	• 〈도민에게 드리는 글〉 성명 이후 상황 공유-기타 토의	
5차(7월11일)	• 여름 회원마당 추진의 건	회의실
	• '전북! 판을 바꾸자' 기획(안) 토론-기타토의	
6차(10월10일)	• 창립 12주년 기념 '후원의 밤' 추진의 건	회의실

■ **정책위원회**

1) 구성 : 김영기집행위원장(위원장), 이경한공동대표, 황현선센터장,
김남규사무처장, 염경형정책실장

2) 정기 회의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사무실

3) 주요 내용 : 현안 사업 검토 및 정책 토의

◈ 회원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 입	14	6	22	25	5	10	0	5	2	5	2	1	96
탈 퇴	1	0	3	2	3	7	5	2	2	0	1	4	26
총회원	815	821	840	863	865	868	863	866	866	871	872	869	+70

◈ 연대 사업

- **주요 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내가꿈꾸는나라
- **기타** :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전라북도경영평가위원회/ 전라북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전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완주군재정심의위원회

2012년(제13기) 사업 평가

◈ 사업 기조(2012년)

1. 민주·진보 세력으로 정권교체
2. 지역 정치 혁신-지방자치 역량 강화
3. 대학생, 청년 활동 구축

◈ 사업 총평

- 2012년은 정치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정치혁신은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생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생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 할 정치세력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민생의제를 최대한 부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치혁신과 민생문제 해결은 총선 패배에 이은 정권교체 실패로 좌절 되었다. 18대 대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여전히 정치혁신과 민생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해 주었다.

- 지역에서는 '전북! 판을 바꾸자!' 기획 토론회와 무능정치인 심판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혁신세력으로의 교체를 이루지 못했다. 2012년은 민생과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형마트의무휴업일 조례제정' '대형식자재유통업체 입점 저지' '롯데쇼핑입점반대 운동'등의 민생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동네빵집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도의원 예식장 불법 영업' '교육의원 해외여행 돈 봉투 사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전주시근로자복지관 부실운영'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업체 수의계약 연장 반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재고'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 2013년은 시민사회에 더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정치.언론환경 역시 더욱 보수화됨으로써 파산 지경에 이른 국민들의 삶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분출된 정치.경제.복지 영역 등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화된 시민의식, 이해관계의 충돌 등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계층별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 **사업 총평**

선거 관련 대응 사업

1. 총선 대응 사업

- 총선 대책 회의 운영
- 정치혁신, 무능 정치인 낙천 성명 발표
- 지역가치 실현을 위한 2012 전북총선 정책과제 발표

2. 대선 대응 사업

-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 '정권교체실현을 위한 전북도민 호소문' 발표
- 투표참여 캠페인
  '나는 투표하는 시민!'-회원 캠페인,
  (성명) 미래를 여는 소중한 선택, 도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행정·의정 관련 사업

1.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대응 사업

- 지역상권 영향 조사 실시 요구
- 전주.완주 통합 논의 이후로 사업 진행 재고
- 전라북도 양여 조건 변경요구
- 중소상인 대책회의에 참여

2. 지방의회 관련

- '도의원 예식장 불법 영업'-> 민주당 징계와 책임, 사퇴 요구
- '교육의원 해외여행 돈봉투 사건'-> 진상규명, 도의회 윤리위 징계 요구
-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대응 ->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모두 동결

3. 지방행정 관련

-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대응 사업(토론, 성명, 문화제 등 개최)

-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수의 계약 연장 관련 -> 공개 입찰로 조정
- 전주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 행정심판 진행 중
- '전주시근로자복지관 부실 운영' 관련-> 감사요구, 추가 조치(고발)예정
- 전라북도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분석 결과 발표

4. 정보공개 실태 점검

- 전라북도 공공기관(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청) 정보공개 실태 조사 -> 진행 중

민생 관련 사업

1. 대형마트 SSM 일요휴무제 도입 및 유통법 개정 운동

- 성명

• 원안에서 후퇴한 유통법 개정은 국회의 민생외면 대기업 밀어주기이다
• 전주시 '대형마트 SSM 월2회 일요휴무지정'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 개혁 대상 재벌기업의 후안무치한 '대형마트 휴무관련 헌법소원'을 규탄한다.
• 전주지방법원의 대형마트 관련 판결에 대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의 입장
• 대형마트 일요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결정은 당연하다

- 대형마트 영업제한조례 헌법소원 규탄대회 등

2. 대기업 대상베스트코 식자재도소매업 진입 저지 활동

- 성명

• 지역경제 파괴하고 중소상인 생존권을 유린하는 대상베스트코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탄한다.
• (주)대상의 파렴치한 식자재소매업 꼼수 진출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청은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 대상 베스트코 입점저지 기자회견 및 중•소상인 연대를 위한 회의 등

3.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롯데쇼핑 입점 반대 중소상인 연대 활동

- 성명

• 종합 경기장 이전 개발 사업이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개획 백지화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문화공원 조성방안 등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 전라북도는 전주종합경기장 양여 조건 변경하고, 전주시는 전주•완주 통합 결정 이후로 사업을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과제점검 토론회 등

시민교육, 문화사업- 시민교육문화센터

▶ 역사 기행

구분	날짜	기행지	참석인원
제 22회	4월 29일	삼년산성→ 정이품송→속리산법주사→서원리 소나무→선병국 가옥	82명
제 23회	10월 21일	창덕궁→창덕궁후원→창경궁	92명

▶ 풀뿌리 시민강좌

- 기　　간 : 2012년 10월 18일 ~ 2012년 11월 29일(매주 목요일)
- 장　　소 : 전주시 삼천도서관 3층 교양실
- 참석인원 : 연인원 214명-강의 당 26명 참석

일 시	주 제	강사
10월18일	당신의 의료비 지출은 안녕하십니까?	김종명/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료팀장
10월25일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야구 인생	박노준/우석대학교 교수
11월1일	행복한 도시마을 성미산마을 사람들 이야기	위성남/(사)사람과마을 운영위원장
11월8일	나의샤갈 당신의 피카소	이흥재/전북도립미술관 관장
11월10일	세계미술거장전 관람	이흥재/전북도립미술관 관장
11월15일	왜 트로트가 좋을까요?	이영미/대중평론가
11월22일	숨쉬는 생명밥상가이드	최재숙/에코생협상무이사
11월29일	'40대 한국남자로'사는법	김찬호/ 성공회대교수

활동위원회

■ 편집위원회

- 매월 첫주 월요일 정례회의(10차)

- 소식지 기획 회의, 특집 및 회의의 글 확대

■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 '동네 빵집 살리기' 사업 조사 사업
- 동네빵집 탕방(5회), 전주.완주 제과협회 방문
- 토론회 개최 및 언론 홍보

■ **시민교육문화센터**

-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정례회의(10차)
- 역사기행 2회 진행
- 풀뿌리시민강좌 진행

■ **사회복지위원회**

- 복지 강연회 '희망' 개최
. 북부유럽 복지국가에서 배우는 미래 - 최낙관교수
. 사회서비스와 보편적 복지국가 - 김성진 교수
. 권리로서의 복지 - 윤찬영 교수
. 사회 보장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백종만 교수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김동주 교수
. 사람을 살리는 보편 복지의 실제 모습 - 최원규 교수
. 복지국가의 조건과 복지 정치 - 윤찬영 교수
. 전북복지정책의 현 주소와 당면 과제 " - 이상록 교수
- 사회복지위원회 월례회의 및 워크숍 개최

회원현황

2012	전년도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신 입		5	3	2	5	17	2	9	6	13	8	3	-	70
탈 퇴		7	20	8	2	0	2	1	-	6	3	2	-	49
복 귀		-	-	-	-	-	2	-	-	-	-	-	6	8
계	868	866	849	843	846	863	865	869	875	882	887	888	894	

조직운영

■ **운영위원회**

- 회원 워크숍 2차
- 월례회의 10차 진행

■ **집행위원회**

- 월례회의 8차(1회는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 진행

■ **정책위원회**

- 20차 진행, 현안 사업 검토 및 정책 과제 발굴 토론

연대사업

■ **주요 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내가 꿈꾸는 나라

■ **기타**

-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전라북도경영평가위원회/ 전라북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전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완주군재정심의위원회

2013년(제14기) 사업 평가

◈ 사업 기조(2013년)

1. 민생현안 적극 대응
2. 지방자치, 지역정치 역량 강화
3. 회원배가, 재정의 안정화, 활동위원회 역량 배가

◈ 사업 총평

■ 2013년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1년 동안 정국을 관통하며 모든 것을 마비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포기하고 오히려 대선불복, 종북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불통과 공안 몰이로 일관하였다. 대선에서 국민들의 열망이 확인되었던 정치개혁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함몰되었고, 이석기-통진당 사건을 시작으로 종북프레임이 강타하면서 시민사회는 정국 개입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촛불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박근혜정권의 대선불복, 종북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의 무능한 대응력의 틈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바람 역시 호남지역에 갇히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되었던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얼마나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 정국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 년 초 남양유업으로 상징되는 '갑의 횡포'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지만 '을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채 수많은 정치적 이슈에 묻혀 버렸다. 수많은 민생의제가 묻히고 오히려 정부의 KTX 민영화 시도를 비롯한 공기업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노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탄압하는 고강도 전략이 정국을 흔들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마트 증축 반대,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 반대를 중심으로 지역 민생 현안사업을 진행하였고, 동네 빵집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 • 소상인들이 동네빵집 살리기 캠페인에 나서는 등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3년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복지재정을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되어 지방의 위기가 더욱 심화

되었다. 완주의 로컬푸드와 서울시의 거버넌스 사례 등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사례는 그나마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혁신 토론회'와 '지방자치혁신사례 강연회'를 통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단체 재정은 서민경제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회비 납부율이 계속 떨어졌고 회원배가운동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밑도는 회원가입으로 단체 재정이 더욱 힘들어졌다.
한편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면서 회원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중•소 상인 등 사업을 통한 시민들과의 연대감이 높아짐으로써 회원활동이 그나마 활기를 되찾고 있다.

◈ 분야별 사업보고

정치개혁 및 민주주의 회복사업

1. 국정원 및 국가기관 18대 대선 불법 개입 대응 사업

-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구성
- 국정원 및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 30여 차례 진행
-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 국정원 셀프개혁 박근혜정부 규탄 성명 발표
- 국정원 규탄 시민 퍼포먼스 및 거리 선전 활동
- 국정원 및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실시 요구 시민서명운동

2. 정치 개혁 및 박근혜정부 반민주 반민생 정책 대응사업

-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결정 관련 정치개혁과 민생회복 성명
-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 중단 성명
- 철도민영화 철회 및 철도노조 탄압 중단 성명
- 교학사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반역사적 검정승인 대응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악 전국시민사회 순회 연금 설명회 개최

행정 · 의정 관련 사업

1. 정보공개사업

① 전북도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정보공개 실태 조사 발표

▸ 전북도/시군자치단체(16개), 도교육청/시군교육지청(15개), 도경찰청/시군경찰서(16개)

② 전주시 쓰레기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등) 민간위탁 협약서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 청구 - 공개 결정

③ 종합경기장 개발관련

▸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보고서

▸ 롯데쇼핑 입점방식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상권 영향 조사 실시 요구

④ 고위공직자 은퇴 후 관련기업 재취업 문제 관련

▸ 전라북도 MOU 체결현황

▸ 전북 6개 시·군 (주)엔비텍 협약서

⑤ 최근 2년간 전국 21개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세부현황

⑥ 최근 3년간 고용노동청 진정접수 현황 및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⑦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개발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2. 지방의회 관련 대응사업

① 전라북도의회에 '도교육청 로비 의혹 및 품앗이 서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② 전주시의회에 '종합경기장 개발과제 토론회' 개최 요구

③ 시의회 공개토론회 참여

3. 지방행정 관련 대응사업

① 근로자종합복지관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한왕협 전 한국노총 지회장 검찰고발

②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여부 조사요구

③ 전라북도 교육청 '맞춤형 정책고객(PCRM)' 모집 관련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중단 요구

④ 전주문화재단 횡령사건 책임규명과 공무원 회전식 인사 규탄 성명 발표

지방자치 혁신 · 지방자치역량 강화 사업

1. 지방자치 혁신 토론회

▸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

▸ 사 회 : 이경한 공동대표

▸ 발 제 : 임성진 고문

▸ 토론자 : 김영기(공동대표), 정진숙(도의원), 하대성(전북도민일보), 김재호(전북일보)

▸ 주요내용 : ○ 지방자치 제도 혁신 과제

- 전북 민선5기에 대한 개괄 평가 및 문제 의식
- 중앙통제 방식의 지방자치의 한계획일적 제도, 예산 통제 문제 등)
-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의 혁신

○ 지방정치 혁신

- 관료형 리더십의 특징과 사례(개발, 동원중심의 지역발전 전략 평가)
- 소통형 리더십의 특징과 사례(생활형, 참여형 주민자치 사례)
- 풀뿌리 지역생활경제를 통한 지역 생활정치 형성 과제

2. 지방자치 혁신 강연회

▸ 일 시 : 2013년 10월 30일(수) 오후 7시

▸ 장 소 : 전주시의회 세미나실

▸ 강 사 :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 주 제 : 지방자치 혁신 사례와 지역 혁신 과제

▸ 주요내용 : ○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사례 소개

○ 지역의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인식 확대

민생 관련 사업

1. 이마트 증축 및 대형마트 영업 확대 저지

▸ 이마트 주차장 부지 영업시설 증축 계획

→ 해당 사실 확인 후 즉각 대응 통해 이마트 증축계획 철회를 이끌어냄.

2.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롯데쇼핑 입점 반대 중소상인 연대활동

① '롯데쇼핑 입점저지 및 지역경제살리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위 활동

② 범시민대책위 공동기자회견 (2013.03.06, 전주시청 브리핑룸)

③ '롯데쇼핑 입점 방식에 의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전주시의회 의원 의향 조사' (2013.03.12, 설문지 발송)

④ '롯데쇼핑 입점저지와 전북·전주경제살리기 호소를 위한 범시민대회' 개최 (2013.04.10, 오거리→시청 행진)

⑤ 롯데쇼핑 입점방식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점에 대한 영상제작 및 배포(mbc 전국 방영)

⑥ 롯데쇼핑 입점반대 호소 '전주시민의 손편지 전달식' 개최
(2013.06.13, 전주시의회)

⑦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컨벤션, 롯데쇼핑)에 따른 시의회 공개토론회'
(2013.08.21,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강당)

▸ 롯데입점방식 경기장 개발 잠정적 중단, 이후 후속 대응사업 지속

3. 동네빵집 살리기 사업

① 동네빵집, 프렌차이즈 제과점, 양산빵의 상온에서 부패 정도를 육안 실험

▸ 1차 실험(04/16), 2차 실험(06/03)을 진행

▸ 육안으로 비교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얻지 못함.

② 중·고등학생 빵집 이용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 조사 대상 : 전주지역 6개 중·고등학교 393명

▸ 조사 기간 : 2013.10.14~25

▸ 조사 기관 :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 유효설문지 : 243건(회수설문지 중 중복/오기 제외)

▸ 주요 결과 : - 구매장소: 프렌차이즈 제과점 80%, 동네빵집 12%
- 구매자: 어머니 40.9%, 아버지 16.9%, 학생본인 28.6%
- 프렌차이즈 선택이유: 접근성 31.3%, 부모님 30.8%, 맛 23.1%
- 동네빵집 선택이유: 맛 39%, 접근성 18%, 신뢰 18%

▸ 향후 과제 :- 동네빵집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대상으로 부모(특히 어머니)가 중요
-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계획 수립할 필요
- 자치단체는 동네빵집 보호와 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할 필요

③ 지역상점과 동네빵집간 지역경제살리기 공동캠페인 연대활동

▸ 의류패션잡화 상가(220개 업소 참여) - 성탄절케익 동네빵집 이용 캠페인

▸ 동네빵집(25개 업소 참여) - 연말·연시 선물 지역상점 이용 캠페인

4. 기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활동

▸ 현대자동차연구소 수도권 이전계획에 대해 전북도 지자체 및 정치권 공동대응 요구

시민교육, 문화사업 - 시민교육문화센터

▶ 역사 기행

구분	날짜	기행지	참석인원
제 24회	4월 20일	전남 해남 녹우당(고산 윤선도)→ 두륜산 대흥사 →해남 땅끝마을	85명
제 25회	10월 20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 → 하회마을 → 부용대	91명

▶ 풀뿌리 시민강좌

- 기　　간 : 2013년 5월 16일 ~ 2013년 7월 4일(매주 목요일)
- 장　　소 : 전주시 삼천도서관 3층 교양실
- 참석인원 : 연인원 244명 참석

일 시	주 제	강사
5월 16일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좋아	윤구병/보리출판사 대표
5월 23일	가요로 보는 우리문화, 그 복잡다단함	이영미/대중문화평론가
5월 30일	속담으로 이해하는 세계의 대중문화	박대우/한일장신대 교수
6월 5일	우리는 꿈꾸며 산다	이승미/남부시장 청년몰사업운영팀장
6월 13일	변상욱의 기자수첩 뒷 이야기	변상욱/CBS 대기자
6월 20일	빚을 권하지 마세요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6월 27일	건강한 빵의 비밀	최세호/좋은아침 대표
7월 4일	로컬푸드 이야기	안대성/완주로컬푸드 대표

활동기구 · 회원 소모임 활동

■ 편집위원회

- 매월 첫주 월요일 정례회의(11차)
- 소식지 기획 회의, 특집 및 회원의 글 확대

■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 동네 빵집 실태조사 및 '동네 빵집 살리기' 사업

- 동네빵집, 프랜차이즈빵집, 양산빵 방부제 등 첨가물 비교를 위한 부패속도 실험
- 중,고교생 빵집 이용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발표
- 지역중소상인 동네빵집살리기 연대활동 조직

■ **시민교육문화센터**

- 매월 세째주 월요일 정례회의(10차)
- 역사기행 2회 진행
- 풀뿌리시민강좌 진행
- 회원모임 '나눔지기' 결성, 하모니카 배우기 취미활동 및 봉사활동 전개

■ **사회복지위원회**

- 매월 둘째주 정기모임 개최(10차)
- 복지 강연회 '희망' 개최 (2012년에 이어 7차례 진행)
  . 사회복지 본질과 사회복지운동 - 최옥채 교수
  . 사회복지사의 고충과 현실 - 박은주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현실 개선의 방향 모색 - 문학모 사회복지사
  . 사회적 기업의 뿌리 내리기 - 황의성 사랑의손길새소망 대표
  . 아동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 윤성호 교수
  . 사회복지사로 살아간다는 것 - 서양렬 전주금암노인복지관 관장
  . 도-농을 잇는 협동경제모델, 로컬푸드 - 임정엽 완주군수
- 사회복지위원회 워크숍 개최

■ **시민자치기구(시민활동기구)**

- 시민정책제안 연구모임 '좌우지간' 결성
  2차례 준비 모임 이후 11월 결성
- 회원동아리 '소란'(소심한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결성
  후원의밤 회원중창단 활동 이후 취미모임 동아리 11월 결성

회원 배가 사업

▶ **상반기 회원 배가 사업**

- 기간 : 2013년3월1일~4월19일, 50일간

- 회원배가 100인 멘토단 선정 및 운영
- 리플릿 제작, 회원통신 미리 보내기, 회원가입 릴레이 상황중계 등
- 회원 배가 운동기간 51명 신입회원 배가(2013년 총 90명 신입회원 증가)

▶ 상반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신입회원 단체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기존회원 및 사무처 상근자와의 만남의 장
- 신입회원 환영과 축하를 위한 사무처 노래공연
- 단체 소개와 각 활동기구별 소개 및 단체 활동 길라잡이
- 회원 16명 참석

회원 현황

2013	전년도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신 입		7	3	40	12	10	3	1	6	-	3	5	1	91
탈 퇴		5	5	-	1	-	5	1	-	-	2	12	1	21
복 귀		2	1	3	1	-	-	2	-	-	-	-		9
계	894	898	897	938	950	960	958	960	966	966	967	971	971	

조직 운영

■ 운영위원회

- 회원 워크숍 2차
- 월례회의 8차 진행

■ 집행위원회

- 월례회의 8차(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 2차례 포함) 진행

■ 정책위원회

- 부정기 개최, 현안 사업 검토 및 정책 과제 발굴 토론

연대 사업

■ 주요 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국정원대선개입정치공작진상규명및민주주의수호를위한전북시국회의
  롯데쇼핑입점저지및전북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 기타

-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전라북도경영평가위원회/ 전라북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전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완주군재정심의위원회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전라북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위원회
  전라북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2013 전라북도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정보공개 실태 조사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

〈 취지 및 개요 〉

-. 행정정보공개 실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공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 한다.

-. 조사대상 : 도내 15개 자치단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도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정보공개 청구)

-. 조사 대상 기간 : 최근 3년(2009년~2011년)

〈 행정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 〉

1. 청구 현황 비교

-. 도내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9년에 11,575건, 2010년에 13,031건, 2011년에 12,615건이며 연평균 12,407건으로 나타났다.

-. 교육청과 경찰청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각각 연평균 937건과 1,385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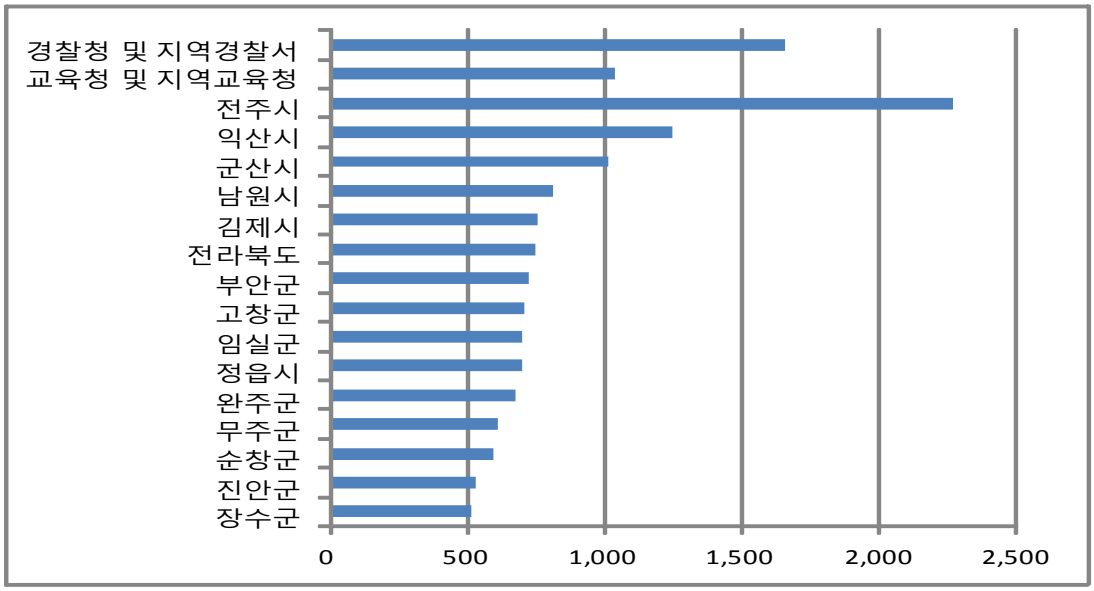
-. 자치단체별 청구건수는 2011년 기준 전주시가 2,269건으로 가장 높고, 익산시 1,250건, 군산시 1,016건 순이였으며,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장수군 512건으로 나타났다.

[표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합계	연평균
전주시	본청	613	1,408	759	2,780	927
	완산구	752	803	790	2,345	782
	덕진구	619	690	720	2,029	676
전주시 소계		1,984	2,901	2,269	7,154	2,385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합계	연평균
군산시	850	989	1,016	2,855	952
익산시	979	1,125	1,250	3,354	1,118
정읍시	643	660	697	2,000	667
남원시	796	793	814	2,403	801
김제시	732	777	757	2,266	755
완주군	686	695	678	2,059	686
진안군	552	563	534	1,649	550
무주군	529	685	612	1,826	609
장수군	542	533	512	1,587	529
임실군	654	652	697	2,003	668
순창군	576	578	597	1,751	584
고창군	662	687	710	2,059	686
부안군	641	650	725	2,016	672
전라북도	749	743	747	2,239	746
자치단체 소계	11,575	13,031	12,615	37,221	12,407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835	1,038	1,873	937
경찰청 및 지역경찰서	1,066	1,431	1,658	4,155	1,385
연간 총계	12,641	15,297	15,309	43,247	14,416

[표1-2] 2011년 도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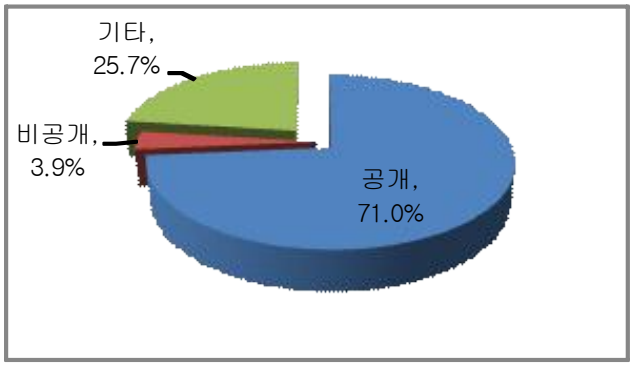


2. 공개 및 비공개 현황 비교

1) 2011년 기준 공개 및 비공개 현황 비교

-. 2011년 도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비율은 71.0%이며 비공개가 3.9%, 기타가 25.7%로 나타났다.

[표2-1] 2011년 도내 자치단체 공개 및 비공개 현황



* 기타 사항의 처리 기준은

- 취하 : 홈페이지 등 통해 이미 공개된 자료, 본인 의사로 정보공개청구 취하
- 이송불가/이송완료 : 타부서·기관으로 이송 또는 해당부서 없음.
- 종결처리 : 민원인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같은 정보를 두 번 이상 청구하는 경우
- 정보 부존재 : 관련 내용이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기타 처리사항의 비율이 높은 것은 비공개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처리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2) 2011년 기준 기관별 공개 및 비공개 현황 비교

-. 기관별 공개 비율은 15개 자치단체가 71.0%, 경찰청이 63.8%로 나타났으며 교육청이 5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비공개율은 경찰청이 11.7%로 가장 높고, 교육청이 9.8%, 자치단체가 3.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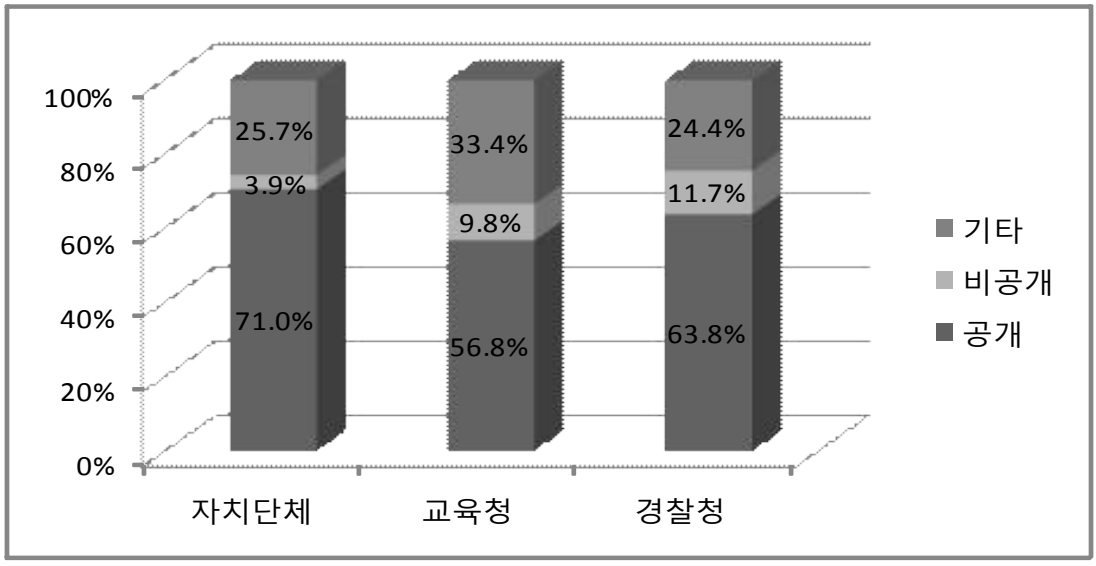
-. 자치단체별 공개율은 임실군이 86.9%로 가장 높고, 진안군이 86.3% 부안군이 80.6% 순으로 나타났으며

-. 자치단체별 비공개율은 완주군이 7.5%로 가장 높고, 군산시가 6.7%, 전주시가 6.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 2011년 도내 자치단체별 공개 및 비공개 현황 (단위 : %)

구분	공개	비공개	기타
완주군	69.9%	7.5%	22.6%
군산시	73.0%	6.7%	20.3%
전주시	54.3%	6.1%	39.6%
김제시	67.2%	4.4%	28.4%
익산시	75.2%	4.3%	20.5%
부안군	80.6%	4.3%	15.2%
전라북도	56.8%	3.6%	39.6%
순창군	77.4%	3.5%	19.1%
고창군	71.5%	3.0%	25.5%
무주군	78.1%	2.3%	19.6%
임실군	86.9%	1.7%	11.3%
남원시	78.7%	1.2%	20.0%
정읍시	78.5%	1.1%	20.4%
진안군	86.3%	0.6%	13.1%
장수군	68.9%	0.2%	30.9%

[표. 2-3] 2011년 기관별 공개 및 비공개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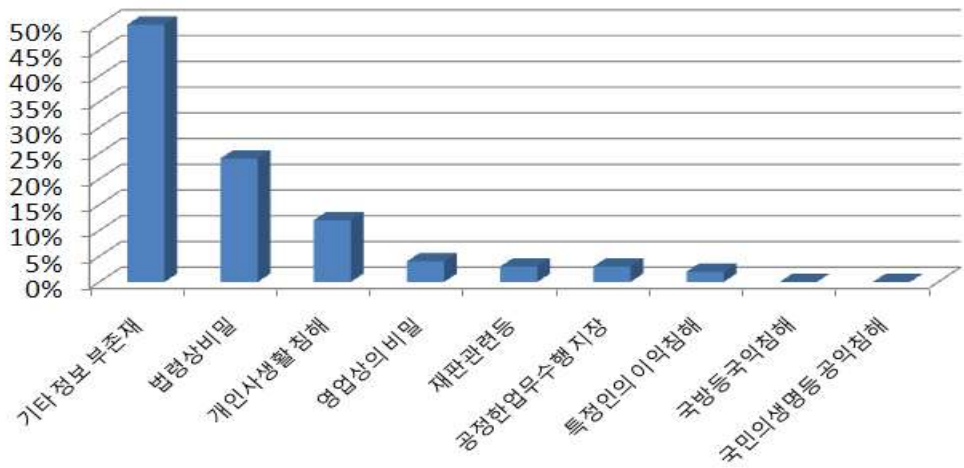


3) 최근 3년간 기관별 비공개 결정 사유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비공개 사유별 현황**

-. 도내 15개 지자체의 비공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 정보부존재'로 평균 50%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 중 순창군이 73%로 가장 높고, 부안군이 63%, 군산시가 61%로 비공개결정 사유로 기타 정보부존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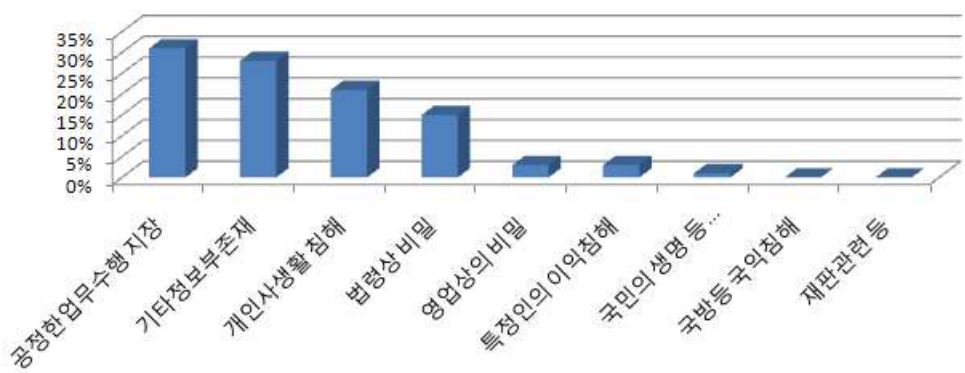
[표2-4] 지방자치단체 비공개 사유별 현황



▸ **교육청 및 지역청 비공개 사유별 현황**

-. 교육청 및 지역청의 비공개 결정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업무수행지장'으로 31%를 차지하였고, '기타정보부존재'가 28%, '개인사생활침해' 2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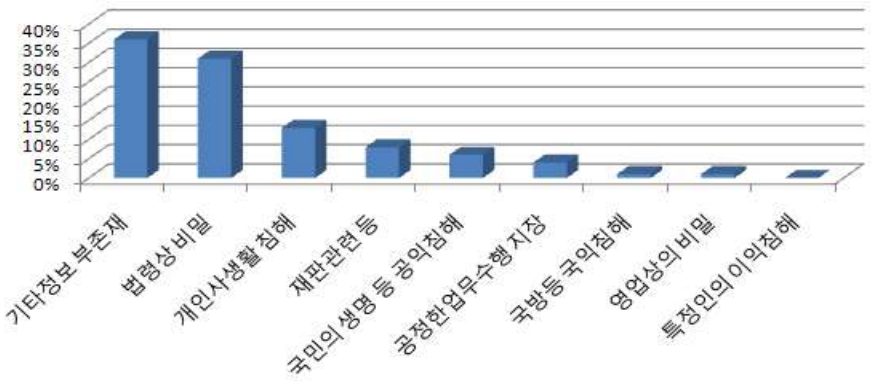
[표2-5] 교육청 및 지역청 비공개 사유별 현황



▸ **경찰청 및 지역서 비공개 사유별 현황**

-. 경찰청 및 지역서의 비공개 결정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타정보부존재'가 36%를 차지하였고, '법령상비밀' 31%, '재판관련 등' 8% 순으로 나타났다.

[표2-6] 경찰청 및 지역서 비공개 사유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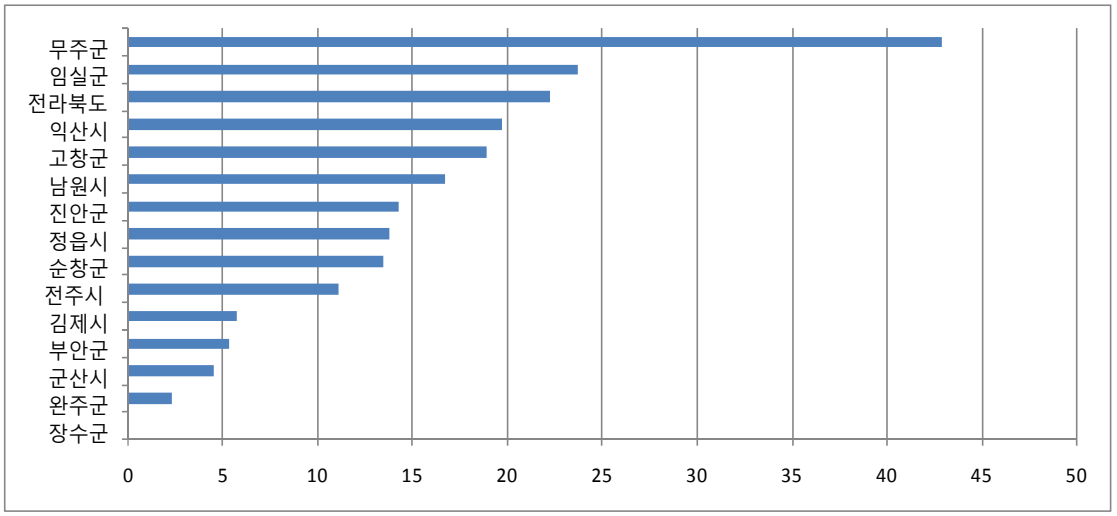


3.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이의 신청 및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1)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

-. 지난 3년간(2009~2011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건 중 비공개로 결정한 총 건수는 1,457건으로 이중 이의 신청은 169건(11.6%)에 그치고 있다.

[표3-1] 최근 3년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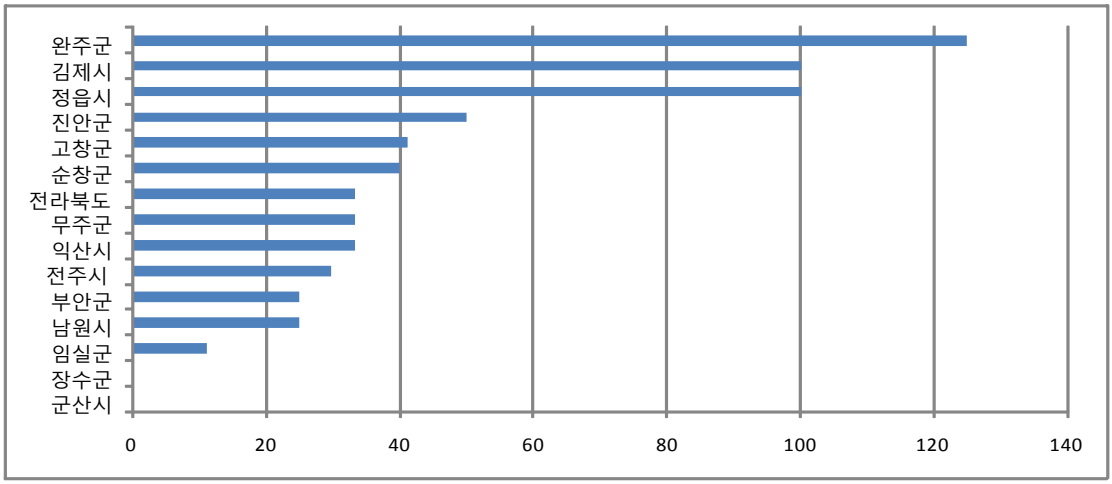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은 무주군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실군이 23.7%였으며 완주군이 2.3%로 낮게 나타났다. 장수군은 3년간 19건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음에도 단 한건의 이의 신청도 없었다.
-. 교육청과 경찰청은 최근 3년간 비공개 결정이 각각 158건과 494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33건(20.9%)과 29건(5.9%)으로 나타났다.
-.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등 3개 기관의 최근 3년간 비공개 결정은 2,10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이의 신청은 237건(11.0%)에 그쳤다.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율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율은 완주군이 이의신청 4건에 대해 5회의 심의위를 개최(125%)했으며 정읍시와 김제시가 각각 4건, 5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100%를 기록하였다.
-. 임실군은 9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한차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산시는 최근 3년간 모두 1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단 한차례의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표3-2] 최근 3년간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율 (단위 :%)



4.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유형 및 처리 결과

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유형

-. 도내 15개 지자체에서 진행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61건으로 이중 대면회의가 31건(51%)이고 서면회의는 30건(49%)로 나타났다.

-. 지자체별로는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모두 대면회의를 진행한 반면 전주시는 지난 3년간 총 11건의 회의를 모두 서면회의를 함으로써 단 한 차례도 심의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청은 대면회의 14건(61%)과 서면회의 9건(39%)를 진행하였고 경찰청은 대면회의 4건(40%)과 서면회의 6건(60%)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표. 4-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유형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계				
		개최 회수	대면 회의	서면 회의	개최 회수	대면 회의	서면 회의	개최 회수	대면 회의	서면 회의	개최 회수	대면 회의	백분율 (%)	서면 회의	백분율 (%)
전주시	전주시본청	2	0	2	2	0	2	3	0	3	7	0	0	7	100
	완산구	0	0	0	2	0	2	1	0	1	3	0	0	3	100
	덕진구	0	0	0	0	0	0	1	0	1	1	0	0	1	100
전주시 소계		2	0	2	4	0	4	5	0	5	11	0	0	11	100
군산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수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완주군		0	0	0	2	0	2	3	1	2	5	1	20	4	80
익산시		3	2	1	1	0	1	5	0	5	9	2	22	7	78
정읍시		2	1	1	1	0	1	1	0	1	4	1	25	3	75
김제시		1	1	0	1	1	0	3	0	3	5	2	40	3	60
전라북도		5	5	0	3	1	2	0	0	0	8	6	75	2	25
남원시		0	0	0	0	0	0	1	1	0	1	1	100	0	0
진안군		0	0	0	0	0	0	1	1	0	1	1	100	0	0
무주군		1	1	0	2	2	0	1	1	0	4	4	100	0	0
임실군		0	0	0	0	0	0	1	1	0	1	1	100	0	0
순창군		1	1	0	0	0	0	3	3	0	4	4	100	0	0
고창군		6	6	0	0	0	0	1	1	0	7	7	100	0	0
부안군		1	1	0	0	0	0	0	0	0	1	1	100	0	0
자치단체 소계		22	18	4	14	4	10	25	9	16	61	31	51	30	49
교육청·지역청		3	3	0	7	2	5	13	9	4	23	14	61	9	39
경찰청·지역서		3	0	3	4	1	3	3	3	0	10	4	40	6	60
연간 총계		28	21	7	25	7	18	41	21	20	94	49	52	45	48

-. 도내 자치단체는 지난 3년간 이의신청 총 169건 중 공개(인용+부분인용) 결정은 69건(41%)를 하였고 비공개 결정은 60건(36%), 기타는 40건(24%)을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김제시와 완주군은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100% 비공개 처리했으며, 남원시만 4건 중 3건은 공개하였고, 1건은 부분 공개함으로써 100% 공개 처분하였다.

-. 교육청은 공개(48%), 비공개(24%), 기타(27%)로 나타났고, 경찰청은 공개(24%), 비공개(31%), 기타(45%)로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전주시내 중·고등학생들의 제빵·제과점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

1. 개 요

- 취　　지 : 대기업프랜차이즈 빵집과 동네 빵집에 대한 지역 중•고등학생의 선호도, 구매성향 및 구매 결정 요인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전개할 '동네빵집 살리기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 한다.
- 조사대상 : 전주시내 중•고등학생(총 설문 393명 중 유효설문 건수 243건)
- 조사기간 : 2013년 10월 14일~25일
- 조사기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2. 주요 결과

1) 빵집 선호도 관련

- '빵을 주로 구입하는 곳은?'에 대한 답변으로
  대기업프랜차이즈(195건, 80%), 동네 빵집(30건, 12%), 기타 마트•슈퍼등(18건, 7%)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빵을 구입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대기업프랜차이즈에 대한 선호도는 여학생이 91%, 남학생이 72%로 여학생이 높았다.

2) 구매결정 관련

- '가족 중 빵을 주로 사오는 사람은?'(복수 응답)에 대한 답변으로
  1순위 : 어머니(132건, 54%), 본인(91건, 37%), 아버지(15건, 6%), 기타(5건, 2%)이고
  2순위 : 어머니(67건, 28%) 아버지(67건, 28%), 본인(48건, 20%), 기타 및 무응답(61건, 24%)
- 구매결정자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 보면
  가족 중 빵을 사오는 사람이 어머니(40.9%)로 가장 높고 본인(28.6), 아버지(16.9%)로
  어머니의 선택에 의해 빵집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기업프랜차이즈 빵집을 선호하는 이유

- '대기업프랜차이즈에서 빵을 주로 구입하는 경우 그 이유는?'(복수 응답)에 대한 답변으로
  1순위 : 맛(78건, 40%), 접근성(78건, 40%), 신뢰성(24건, 12%), 부모의 선택,기타(15건, 8%)
  2순위 : 부모의선택(106건,54%), 접근성(44건,23%), 신뢰성(18건,9%), 기타및무응답(15건,8%)
- 대기업프랜차이즈 빵집을 선호하는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 보면
  접근성(31.3%), 부모의 선택(30.8%), 맛(23.1%), 신뢰성(10.8%), 기타(4.0%)로 나타남으로써
  접근성과 부모의 선택이 결정 요인으로 맛과 신뢰성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4) 동네 빵집을 선호하는 이유

- '동네 빵을 주로 구입하는 경우 그 이유는?'(복수 응답)에 대한 답변으로
  1순위 : 맛(23건, 77%), 접근성(6건, 20%), 부모님의 선택(1건, 3%)
  2순위 : 신뢰성(11건, 37%), 부모님의 선택(11건, 37%), 접근성(6건 20%), 기타(2건, 7%)
- 동네 빵집을 선호하는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 보면
  맛(38.5%), 접근성(20.0%), 부모님의 선택(20.0%), 신뢰성(18.5%), 기타(3.0%)로
  동네빵집을 이용하는 경우 맛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식품첨가물에 대한 이해

- '빵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다?'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본 적이 있다(86건, 35%)와 들어본 적이 없다.(157건, 65%)로 나타나
  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빵을 먹고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적이 있다?'에 대한 답변으로
  없다(194건, 80%)는 응답이 있다(49건, 20%)는 응답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경험을 한 49명의 학생 중
  프랜차이즈 빵집을 선호하는 경우(43건, 87.7%)가 동네 빵집을 선호하는 학생(6건, 12.3%)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결 론

이번 설문 조사 결과

1) 대기업프랜차이 빵집의 구매율이 80%로 동네 빵집 구매율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자리를 내준 동네 빵집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2) 가족 중 대기업프랜차이즈에서 빵을 구입하는 사람이 주로 부모(57.8%)로 나타났으며 이중 어머니가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건강한 빵에 대한 정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3) 빵의 구매 결정은 남성 보다는 여성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빵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 대기업프랜차이즈 빵집을 선호하는 이유로

- 접근성이 31.3%로 차지함으로써 대기업프랜차이즈점이 동네 골목상권을 장악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며, 접근성 문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결정지워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또한 대부분 학생들은 부모들이 사온 빵을 먹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 적다는 사실이다.
- 대기업프랜차이즈 빵에 대한 신뢰성이 10.8%로 나타난 것은 의외의 답변으로 학생들은 부모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빵을 구입하는 이유가 제품(빵)에 대한 선호도 보다 접근성이 좋은 대기업 프랜차이점에서 빵을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동네 빵집에서 주로 빵을 구입한다고 답한 학생들은 맛(38.5%)과 접근성(20%)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의 동네빵집에 대한 신뢰성이 18.5%로 프랜차이점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네 빵집의 제품이 맛있다는 인식을 갖고 선택적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접근성이 선택적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라지고 있는 동네 빵집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4. 향후 과제

1) 가족 단위의 빵 소비 구조로 볼 때 부모(특히 어머니)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동네빵집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2) 미래에 전북경제를 지켜갈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착한 소비' 교육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각 학교별 특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동네 빵집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됨으로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들어났다. 자치단체는 동네 빵집을 재입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제15기) 사업 평가

◈ 사업 기조(2014년)

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사업
2. 지방자치 혁신과 주민참여 강화
3. 지역 민생 현안 적극 대응
4. 재정 안정과 회원활동 강화

■ 2014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극의 한 해였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촛불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문제해결을 위한 촛불까지 단체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활동을 벌였다. 연이은 참사와 국정문란 등 중앙의제로 인해 지역의제와 시민의 생활.경제 의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비록 정국개입 능력의 한계가 있었지만 촛불문화제, 서명운동, 현안토론회, 시민강좌 등 쉼 없이 사업을 전개하였다.

■ 올해 계속된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2014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참패하였다. 야권은 안철수 신당-민주당 합당, 무공천·공천 논란 등으로 스스로 선거 패배를 자초하였다. 전북 지역에서는 14곳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7곳에서 당선됨으로써 일당독점 체제에 대한 민심을 확인해 주었다. 단체는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각 후보 선거정책 검증과 좋은 정책공약 제안을 통해 지방선거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주시장 선거에서는 후보들 모두가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 반대'를 공약하였다. 이는 우리의 실천으로 공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등 2014지방선거에서 단체가 제시한 좋은 정책들을 민선6기지자체가 수용하도록 후속활동을 진행하였다.

■ 민생분야에서는 재벌기업의 '대형마트 · SSM 일요휴무제' 흔들기에 대응하여 중소상인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재벌기업 주도방식 폐기'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전주시내버스 정책 검토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체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갔다.

■ '지자체 학술용역결과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풀뿌리시민강좌와 역사문화기행 등 시민참여사업과 회원모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갔다. 올

해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회원가입과 회비납부총액은 완만한 성장을 이어 나갔으나 재정사업 축소(후원의 밤을 개최하지 않음)로 인해 실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회원 배가와 후원 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 분야별 사업 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 연대사업

국정원.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극적인 참사로 촛불의 방향을 바꾸었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항하여 단체는 각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1. 국정원 및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 대응 사업

-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활동 지속
- 국정원 및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 10여 차례 진행
- 국정원 규탄 시민 퍼포먼스 및 거리 선전 활동 / 특검 실시 요구 시민서명운동

2.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원회 연대 사업

- 세월호 참사 대응 전북지역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구성·참여
- 4/18 풍남문광장,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촛불문화제 참여
-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 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일일 농성, 노란 리본 달기, 거리 행진 등 활동
- 8/19 운영위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집단 토론회 개최

3.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발언 수사 대응 등

- 시국미사발언으로 박창신신부의 전북지방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
- 9/1 전북경찰청 앞, 각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종북의 칼을 들이대는 검찰·경찰 규탄 공동기자회견, 성명과 언론 대응 진행

4. '그들만의 민주주의' 가을별강 개최

- 민주주의 후퇴에 낙담한 시민들에게 다시 민주주의라는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주제로 가을별강 진행
- 10/22부터 총 4강(강준만, 홍헌호, 김만권, 정동영) 진행

지방자치 혁신 및 지방선거 대응 사업

1.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6.4지방선거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지방선거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지방선거특별위 구성'
- 지방선거를 '지방자치의 혁신'을 쟁점으로 의제를 형성하려고 했으나 새정연의 기초선거 공천과 무공천 방침 번복, 조직적인 전화 착신, 세월호 참사로 인해 모든 의제가 상실됨.
- 새정연의 새정치 상실, 전화착신, 지역실종 정책 등에 대한 성명 발표
- 사회.노동단체들의 김승환 교육감 범민주 단일후보 재추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지적
- 전북연대회의 단체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좋은 정책 제안 운동'을 진행함.
- 단체장 14곳 중 무소속 7곳이 당선됨으로써 일당독점에 대한 도민들의 심판 의지가 확인되었으나 무소속연대나 제 3의 정당 결성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만큼의 돌풍으로 작용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정치의 한계와 과제를 동시에 보여줌.

2.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공약 제안사업

- 일　시 : 2014년 5월 8일(목) 오전11시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
- 주요내용 :

〈서민 경제 분야〉

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롯데유통 우선협약지정 철회 및 원점 재검토
- 시민의 공공부지 전주종합경기장을 수도권 재벌기업에게 개발권을 넘기는 것을 철회
- 시민들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

②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 정책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기구 설치
-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보호·육성과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보호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형 전담기구 설치
- 각 지자체에 상인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로 구성되는 전담기구 설치로,

지역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③ 대기업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설

-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설치
-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기업 납품, 비정규직, 청년층을 대상
- 피해자 법률상담,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태 파악, 필요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시행

〈반부패 행정개혁 분야〉

④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

-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내 전담기구 설치
- 조사를 체계화하여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여 청렴·투명 지역사회 실현

〈노동 복지 분야〉

⑤ 공공영역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생활임금 보장

- 지자체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생활임금을 보장

3. 6.4지방선거 기타 대응 사업

① 2/17 6.4지방선거에서 전주시 4인선거구가 포함된 중대선거구제를 마련한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 가결을 전라북도의회에 촉구

② 4/1 새정연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전화착신 배제 촉구

③ 4/10 무공천·공천 논란이 보여준 안철수공동대표의 정치개혁의 한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을 비판.

- 특정정당의 독식구조와 지역 분할 정치를 방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신설과
- 지역정치 혁신과 지역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역정당제'를 만들어야 함을 주장.

④ 4/15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의 공천개입 구태 반복 중지를 촉구.

⑤ 5/28 후보초청 방송토론회마저 거부한 송하진 도지사후보 비판 및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의 희생물로 만드는 지역국회의원의 지분싸움을 중단 촉구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행·의정 관련 사업

1. 전라북도 지자체(시·도) 학술연구용역 공개실태 조사분석 사업

1) 개요

- 조사대상 : 도내 7개 지자체(전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조사기간 : 2014.08.22 (정보공개청구 접수) ~ 2014.09.17 (전주시 수정자료 제출)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취합,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각 지자체 조례 수집
- 조사내용 : 2010.1.01 ~ 2014.7.31(계약일 기준) 추진된 학술연구용역 현황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 발주부서, 결과보고서 페이지공개여부 등
  지자체 조례의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규정 점검

2) 학술연구용역 일반현황

계약연도	7개 지자체 합계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59	35억1,754	23	16억7,700	5	1억3,751	31	17억0,300
2011	90	70억5,229	36	41억4,015	9	3억2,814	45	25억8,400
2012	90	40억7,390	34	19억8,128	11	3억7,416	45	17억1,845
2013	92	45억1,020	36	19억9,346	12	5억4,995	44	19억6,680
~2014.7	46	29억1,973	15	11억6,900	11	5억2,368	20	12억2,705
합계	377	220억7,366	144	109억6,092	48	19억1,344	185	91억9,930

3) 실태조사 결과

① 전라북도 지자체(시·도) 학술용역 공개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 2014년 7월 31일까지 도내 7개 지자체가 발주한 학술용역은 총 377건, 220억 7,366만원으로 나타났다.

② 이중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총 285건(75.6%), 117억 3,358만원(53.2%) 였으며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서 전북도는 123건(85.4%), 69억 3,790만원(63.3%), 전주시는 38건(79.2%), 12억 9,240만원(67.5%)로 나타났다.

③ 학술용역 결과보고서의 인터넷 공개현황은 전체 377건 가운데 42건(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학술용역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술용역의 계획안 제출 및 사전심사 규정이 미흡하고 전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i)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가운데 이해관

계자 제척·회피 규정이 없고, ii) 중간점검, 사후평가, 사후관리 및 활용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며 iii) 홈페이지 공개규정이 없는 등 학술용역의 추진, 점검, 평가 등 전반에 걸친 관리규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선과제

① 민선 5기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진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학술용역 건수가 2010년에 비해 각각 30여건 증가한 것은 공약추진을 위한 용역남발을 의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나 활용도 점검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해당 학술용역이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② 예를 들어 전주시는 '전주혈맥잇기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2011년 도로과, 1억 1,800만원)'이나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되어 진행된 용역사업들-'대규모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2012년 도시과(?), 1억 3,000만원)', '도시개발사업(주택, 아파트단지 개발 및 분양)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2012년 신도시사업과, 1억원)',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이전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012년 친환경농업과, 계약금액 4,500만원)' 등-을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서 누락시켰다. 담당부서가 원치 않으면 해당 학술용역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 따라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용역심사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사전검증,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체계를 정비해서 학술용역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연구결과의 평가, 공개 등을 시행해야 한다.

④ 시민의 세금을 들여 진행되는 연구조사사업의 결과물은 시민의 공적재산이며 시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투명한 행정과 적극적인 정보공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는 정부3.0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의 인터넷 공개율은 1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이것은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비공개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서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담당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일괄적인 공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인식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⑥ 학술용역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 업체의 한계와 개별용역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에 의한 계약을 늘리고 수의계약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용역의 부실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라북도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10시30분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
- 사 회 : 이경한 공동대표
- 발 제 :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 토론자 : 김남규(정책위원장), 김현승(민변 전북지회), 박기홍(전북도민일보)
- 주요내용 : -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 조례 사례 연구
  - 공익제보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실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규정에 대한 법률적 연구
  - 발전된 공익제보지원 표준조례 예시

3. 지방행정 및 의회 관련 대응사업

1) 전라북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① 2/14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시 4인 선거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② 2/17 조례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역정치 독점을 해소하고, 소수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개정안을 훼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③ 2/19 전북연대회의와 공동기자회견 및 전라북도의회 최진호 의장 면담 전라북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원안을 도의회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

2)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덕진구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대응

① 덕진보건소 신축 관련 '덕진구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행정위 부결

②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구태와 행정위원회 무능·무책임을 규탄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함.

3) 도내 지자체의 가동보 설치공사 수주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간 뇌물비리 대응 사업

① 가동보 설치공사 수주비리 관련 수사대상자의 연이은 자살은 관련 비리의 규모와 심각성을 역으로 보여줌

② 관련 비리로 공사비 축소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
③ 3/12 경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관련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성명발표로 촉구함.

민생 관련 사업

1.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쇼핑 입점방식 개발 저지 사업

① '롯데쇼핑 입점저지 및 지역경제살리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지속
② 2014지방선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재벌기업 주도 방식 철회'를 정책공약으로 제시
전주시후보 모두 재벌기업 입점 방식 철회를 공약으로 채택함
③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 시의회 제출 대응
2014. 7. 16 전주시의회 의장실,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장 면담
전라북도중소상인연합회(이하길, 박기수)
참여자치연대(이경한, 김영기, 김남규, 이창엽) 참석, 사무처 배석
롯데쇼핑 우선협약대상 지정 해소를 위한 절차를 먼저 처리한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로 시의회 의장 약속
④ 11월 20일 전주시장, 전주시의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롯데쇼핑 입점방식 철회할 것을 확인
⑤ 12월 10일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시정질의 롯데쇼핑을 대변하는 발언에 대하여
규탄 성명 발표
⑥ 전북중소상인연합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연석 간담회 4차례 진행

2. 재벌기업의 '대형마트 SSM 일요휴무제' 흔들기에 대한 대응 사업

-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
2014. 12. 12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줌.
- 2014. 12. 15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라북도전통시장연합회, 전북마트연합회, 대한제빵제과협회전북지회,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연대 즉각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
- 2014. 12. 16 전주시청 브리핑룸
'헌법정신과 법률취지를 무시하고 중소상인을 나락으로 떠미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발표 및 전라북도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2014. 12. 18 참여연대2층 대강당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고법 위법 판결 강력 규탄 및 공동대응 선포 공동 기자회견 개최

3.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분별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폐지 대응

▸ 공정거래위, '빵집 신규출점 거리제한' 등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프랜차이즈 분야)과
가이드라인 25개 가운데 18개를 전면 또는 부분적 폐지 발표.

▸ 사회 공공의 이익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장치들이 지켜져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역경제 보호가 가능함을 강조하고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와 연대하여 맞설 것을 내용으로 5/22 성명 발표.

시민교육, 문화사업

▶ 역사 기행

구분	날짜	주 제 기행지	참석인원
제 26회	4월 13일	백제의 숨결을 따라 떠나는 부여기행 정림사지 5층 석탑 → 백제 왕릉원 →부소산(고란사·낙화암) → 백마강 유람 →궁남지 →신동엽 문학관	81명
제 27회	10월 26일	백제의 미소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 서산 마애삼존불 → 개심사 → 수덕사	65명

▶ 제14회 풀뿌리시민강좌

- 기　　간 : 2014년 5월 22일 ~ 2014년 7월 5일(매주 목요일)
- 장　　소 :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3층 세미나실
- 참석인원 : 연인원 213명 참석

일 시	주 제	강사	참석인원
5월 22일	전주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전주 탐험'	김진돈/전주문화원	33명

5월 29일	기생충학자 서민의 '건강의 허와 실'	서 민/기생충학자	40명
6월 05일	공공의 안전에 있어서 법의학의 역할	이 호/법의학자	38명
6월 12일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	문병학/시인	19명
6월 17일	파랑새는 산을 넘어, 동학혁명과 전주	이이화/민족문제연구소	34명
6월 26일	도시 전주, 건축가의 눈으로 바라보다	강미현/건축가	22명
7월 03일	행복한 집짓기 '나를 닮은 건축'	김석균/생태건축가	27명

▶ 2014 가을별강 - 그들만의 민주주의

- 기　　간 : 2014년 10월 23일 ~ 2014년 11월 13일(매주 목요일)
- 장　　소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강당
- 참석인원 : 연인원 119명 참석

일 시	주 제	강사	참석인원
10월 22일	싸가지없는 진보	강준만/전북대 교수	27명
10월 30일	누구를 위하여 담뱃값을 올리나	홍헌호/시민경제연구소	16명
11월 05일	참여, 그 끝나지 않은 시작	김만권/정치학자	22명
11월 13일	국정원/세월호 끝나지 않은 기억과의 투쟁	전동영/전 통일부장관	54명

▶ 2014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신입회원의 단체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기존회원 및 사무처 상근자와의 만남의 장
○ 일　시 : 2014년 3월 25일(화) 오후7시
○ 장　소 : 커피갤러리 송(구, 산타로사)
○ 참석자 : 16명(신입회원 7명, 기존회원 5명, 사무처 4명)
○ 내　용 : 환영 인사 및 단체 소개
　　활동기구 소개(기존회원 참석자)
　　친해지기 프로그램 진행
　　신입회원 한 마디

활동기구 · 회원 소모임 활동

■ 편집위원회

○ 소식지 편집회의
-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정례회의(11차례)
- 섹션 신설 : 한 발짝 더(강미현), 오래지 않은 옛날이야기(김창주)

○ 2014년 사람책읽기 3회 개최
- 02/03 : 30대, 02/10 : 20대, 02/17 : 10대

○ 2기 사람책읽기 (홈 커밍데이)
- 3차례 (03/17, 07/14, 11/25)
- 사람책읽기 참여자 만남의 자리
- PMI 자기소개, 고민해결 댓글의 벽, 손으로 그리는 소셜 네트워크

■ 시민경제위원회

○ 기존 '대형마트 시민모니터단'에서 다양한 민생·시민경제 주제를 다루기 위해 명칭 변경

○ 대형마트 조사, 동네마트·전통시장 탐방, 가격비교조사, 지역농산물 판매분포조사, 동네빵집 살리기 등 기존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위원회 활동 계획 논의

○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추대 선임과 다양한 활동분야 수립에 대한 과제를 남김

■ 시민교육문화센터

○ 신임 센터장 위촉 : 국순화 변호사

○ 활동경과
- 매월 셋째주 정례모임
- 역사문화시민기행 진행 (봄가을 2차례)
- 풀뿌리시민강좌 진행(봄가을 2차례)
- 전주 탐방 (2월과 3월 각 1번씩 2차례)
- 하모니카 배우기 등 회원활동 모색

■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재정 확대 요구 등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축으로 2014년 활동

■ **회원모임 '소란'**

○ 2013 후원의밤 회원중창단 활동 이후 동아리 취미모임으로 활동 시작

○ 회원 노래 취미모임 매월 정기적인 활동 지속(매월 셋째주 월요일)

○ 노래 선곡과 연습, 회원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부정기적 모임도 함께 진행

○ 이틀주막, 회원여름캠프, 회원송년의 밤 등 회원 행사에서 자원봉사활동 전개

■ **회원모임 '좌우지간'**

○ 30대 젊은회원 또래모임으로 출발(2013 가을)

○ 매월 셋째 목요일 정기모임 진행

○ 04/05 - 봄산행, 06/19 - 이틀주막 자원봉사 참여, 12/29 - 송년모임(정기모임 외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친밀도가 높아졌음)

○ 공동 공연관람(연극, 콘서트 등) 후 생각나누기 등 활동 계획

회 원 현 황

2014	전년도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신 입		5	11	7	5	2	9	1	2	1		5		48
탈퇴 및 정리		2	9	2	6	1	4	4	4	3	7	2	133	177
계	971	974	976	981	980	981	986	983	981	979	972	975	842	

※ 회비장기미납 및 활동정지 회원 12월 정리함.

조 직 운 영

■ **운영위원회**

- 회원 워크숍 1차
- 월례회의 10차 진행
- 시기별 의제 토론, 위원회 활동 및 사무처 보고 등으로 진행
- 제7차 운영위(8/19)에서 주제별 회전테이블 방식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집단 토론' 전개

■ **집행위원회**

- 운영위 연석 7차례, 집행위 단독 3차례 진행

■ **정책위원회**

- 매주 목요일을 원칙으로 부정기 개최, 현안 사업 검토 및 정책 과제 발굴 토론 진행

연 대 사 업

■ **주요 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국정원대선개입정치공작진상규명및민주주의수호를위한전북시국회의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롯데쇼핑입점저지및전북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 **기타(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

-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전라북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 완주군재정심의위원회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전라북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
  전라북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전주시내버스대타협위원회

2015년(제16기) 사업 평가

◈ 총괄 평가

■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 침탈과 인권 유린의 역사는 2015년에도 계속 되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커녕 특위 활동마저도 방해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종군 위안부 협상으로 국민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회원 제안으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을 400명 기명 전주시민선언으로 확대하였고,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공동 제출하였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촛불문화제, 거리 서명운동,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과 연대하며 시민과 함께 활동을 전개했다.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영·호남을 분할 독점하여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조정(2:1) 판결로 대도시의 의석수는 늘어나고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이와 더불어 핵심 정치개혁사업으로 '지역분할 정치독점 청산을 위한 비례대표 도입 운동'을 전개했다. '영호남 시민단체 선언'을 이끌어 냈고, '비례대표제 확대 도입'를 골자로 하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지역에서도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발족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비례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야권의 분당 등 정치적 쟁점만 난무함으로써 정치개혁 과제가 부각되지 못했다.

■ 민생분야를 살펴보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민간자본 투자에서 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대체시설 건립에 대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으로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이 중단되었고 롯데쇼핑과의 계약파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재벌기업의 '대형마트・SSM 일요휴무제'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일요휴무제 인정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전주시내버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생활임금 도입,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사업은 기초조사 단계에 머물렀지만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임을 인식하게 된 한 해였다.

■ 풀뿌리시민강좌와 역사문화기행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회원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회원확대와 회원회비 증액을 위한 활동을 함께 전개했다. 성과는 크지

않았지만 회원참여 및 시민직접참여 사업이 확대되었고 회원가입과 회비납부총액은 완만한 성장을 이어 나갔다.

◈ 분야별 사업 보고

정치개혁 사업

2015년 정치개혁사업은 '정당법개정운동'과 '독점정치·지역분할정치청산을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1) '정당법개정운동'은 헌법소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조정(2:1) 판결로 선거구획정문제가 민감한 문제가 됨으로써 정당법 개정 문제가 정치적인 집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연기하였다.

2) '독점정치·지역분할정치 청산을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 사업은 3월 '영·호남 시민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원선거, 권역별비례대표제 논의와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정치개혁 핵심사업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전북연대회의에 권역별비례제 도입 정책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지역에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2015년 정치개혁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제도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논의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여론형성 시기를 놓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비례제 확대도입'을 정치개혁과제로 합의하고 제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 형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긴 호흡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국회의원선거, 권역별비례대표제 논의와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3월 18일 오후 2시,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
- 주제발표 :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사무관
- 토　　론 : 김영근 의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박동천 교수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기 대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심회무 기자 (뉴시스 취재국장)

○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청산을 위한 영·호남 시민단체 공동성명

- 일　　시 : 2015년 3월 31일
- 성　　명 :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 참여단체 : 영호남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08.25.(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 참여(2015.08.24 기준)
-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확대 및 시민홍보 캠페인 등 활동계획 발표

○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모임

- 일시·장소 : 2015.09.15.(화) 오전 10시, 전북민언련 사무실
- 참여단체 : 전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 지역독점·승자독식 정치 청산을 위한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5.09.16.(수)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 9월 24일 정치개혁 시민홍보 캠페인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 전주지역: 오후 2~3:30, 경기전 앞길 ~ 남부시장 일대, 피켓 행진 및 홍보전단 배포
- 익산지역: 오전 7:30~8:30, 시내 주요교차로 3곳, 1인 피켓시위 진행

○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연대사업 준비모임

- 일시·장소: 2015.10.02.(금) 오후 2시, 창원
- 김남규 정책위원장 회의 참석

○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극복을 위한 영호남시민사회단체 2차 선언

- 일시·장소: 2015.10.08.(목) 오전 11:30, 부산 시의회 브리핑룸
- 영호남지역 119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행동

- 기 간: 2015.12.22~24.
- 내 용: 국회의장 및 양당 지도부에 정치개혁 촉구 항의공문 발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 연대사업

1. 세월호 참사 1주기

1) 풍남문 세월호 농성천막 일일지킴이 참여

○ 2015.02.27(금) 오전 9시부터 24시간

○ 참여자: 이창엽, 김 숙, 박우성

2)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5.03.30(월) 오전 11시, 풍남문 광장

○ 4·16 세월호 참사 추모 1주기 전북대책위 계획 발표

3)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사업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도민 추모제: 2015.04.16(목) 6:30 pm, 풍남문 광장

○ 추모월간 지정: 4월 약속의 달

① 4·16 알람맞추기 (오후 4:16, 1분 묵념)

② 기억리본 패용, 차량스티커 부착

③ 개인실명 거리현수막 걸기

④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저서「금요일엔 돌아오렴」나눔 캠페인

○ 집중추모기간 (04.13~04.19)

① 풍남문 광장 분향소 설치

② 팽목항 위령제 참석: 2015.04.15(화) 1 pm

③ 세월호 인양촉구 집중행동 및 범국민 추모대회: 2015.04.18(토), 서울 집중

4)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15.04.06(월) 11 am, 새누리당사

5)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 2015.05.06(수) 10 am, 새누리당사

2.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캠페인

1) 관련 성명 및 논평

10.14(수) [전북연대회의 성명]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한다.”
10.26(월) [참여자치연대 논평]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한국사 교과서...”
10.28(수) [전북연대회의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제출 거리캠페인”
10.29(목)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민선언 기자회견”
10.29(목) [전북연대회의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공동제출 기자회견”
11.03(화) [참여자치연대 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적 폭거이며 역사를...”

2)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견서 작성 거리캠페인 및 우편제출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견서 작성 거리캠페인

10.27 (화) - 장소: 구도심 금강제화 사거리
참가단체: 참여자치, 전북민언련, 전북민예총

10.28 (수) - 장소 1: 구도심 중앙교회 살림광장, 참여자치 대학생모임
장소 2: 한일장신대 교내, 참여자치 대학생모임

10.29 (목) - 장소: 전북대 구정문
참여자치 대학생모임, 전북민언련

○ 국정화반대의견서 공동제출 우편접수 기자회견

일시 : 10.30(금) 오전 10:30 경원동 우체국 앞
참석 : 연대회의 소속 4개 단체(YWCA, 민언련, 환경련, 참여자치)
수집된 800여장 의견서 가운데 연락처, 주소 빠진 것 등 제외하고 총 689부 우편발송

3)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주시민선언 (2015.10.29)

- 이강주 운영위원 제안
- 27일 문자발송 후 문자회신으로 연명자 모집
- 28일 회원 중심의 홍보활동
- 29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진행
(선언문에 연명한 최종 시민선언 참가자 363명)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행·의정 모니터링 사업

1. 2010 ~ 2015년 지방교부세 현황 조사

1) 정보공개청구 개요

- 내용 : 지방교부세 세부내역 및 세입결산, 주민등록인구통계
- 접수기관 :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및 38개 기초자치단체
- 대상기간 : 2010년 ~ 2015년 (2014년은 가결산, 2015년은 예산 기준)
- 청구일 : 2015년 5월 20일

2) 주요 비교내용: 지방세 수입, 1인당 지방교부세 교부액 등

3) 성과 및 과제

-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배분 현황 수집
- 내국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변화추이 및 지역 간 교부액 격차 파악
- 지방교부세 내국세비율 상향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2.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조사

1) 개요

- 입지선정일: 2008.09.30
- 위치: 삼천동 장동·안산·삼산마을
- 부지면적: 56,796㎡ (폐기물처리시설: 44,160㎡, 도로: 12,636㎡)

2) 총사업비: 937억원

- 기재부 제출 심의요청 공문(2013.09.25, 2010.03.01 불변가격 기준)
- 재원: 건설보조금 330억원, 민간사업비 607억원(64.7%)
- 공사비: 815억원 (주민편의시설 60억 포함)

3) 주요쟁점

- 주민갈등: 주민지원금, 진입로 등 놓고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와 '정상추진위'간 마찰
- 2개 조직이 각각 사업추진 중단 요구, 공무원 투기의혹 제기 → 소송
- 사업규모 확대 및 사업운영기간 늘려 특혜 의혹
- 쓰레기 반입량/처리량 예측 잘못으로 기존 위탁업체 시설 사용 지속해야할 우려

- 타 지자체 대비 처리비용 높고 음식물 처리량이 300t 안 될 경우 비용 증가 단점
- 같은 업체에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기는 턴키방식 문제점 제기됨
- 공사지연이 계속되다가 새 시장 취임 직전 착공, 동절기 공사 강행

4) 과제

- 시설 운영비와 처리량 등 사업계획서와 비교점검 필요
-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폐촉법 기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및 주민지원기금 운영 조사 분석 필요

지역경제·중소상인살리기 민생 사업

1.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재벌기업 주도방식 폐기를 위한 사업

- 2015/07/23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발표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자체재정 투입' 방식으로 변경
- 2015/07/27 '시민의 땅 전주종합경기장을 재벌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제출한 변경동의안 전주시의회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 2015/07/28 전주시의회 변경동의안 가결
  중소상인연합회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의회 본회의 참관 및 환영 논평 발표

2.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 롯데쇼핑 입점 반대 사업

- 현장 방문 및 군산지역 상인들과의 간담회 진행으로 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연대함
- 2015.07.16 공동명의 호소문 발표 "전북정치권이 나서서 대형유통점 입점을 막아야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착한 규제' 폐지 요구 대응사업

-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니터링,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 활동 제한 등을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로 구분함
-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조례 개정 요구는 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선순환적 지역경제구조를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적극적 대응할 것을 결정
- 공정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착한 규제' 폐기 요구에 대해 전국 연대 공동 대응 제안
- 2015/06/08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명의로 기자회견 진행
지방자치단체 '착한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한 폐지요구 규탄 기자회견

시민교육, 문화사업

1. 역사문화시민기행

- 사찰중심의 기행에서 도시역사 기행으로 등 기행지와 주제를 다변화 하였으며
- 역사문화시민기행에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단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

구분	날짜	주 제 기행지	참석인원
제28회	4월 14일	"팔만대장경 따라가는 가야산 봄길" 합천해인사	56명
제29회	10월 25일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 목포 근현대사 따라 골목길 걷기 목포 (북교동 골목-유달산-목포근대역사관-목포선창)	40명

2. 2015 가을 집짓기 인문학 강좌

-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 기 간 : 2015.10.07 ~ 10.28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장 소 : 옥성문화센터 까페 옥성반 2층

일 시	주 제	강 사	참석인원
10월 07일	풍수지리와 마을 신앙으로 배우는 인문풍수지리학	이상훈 (진안 마령고 교사)	21명
10월 14일	집짓기 개론: 우리의 집짓기는 안녕한가요?	강미현 (건축사무소 예감)	20명
10월 21일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강미현 (건축사무소 예감)	21명
10월 28일	자연에게 인사하는 예의를 차리다	김선태 (문화연구소 '창')	12명

- 단체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민교육사업과 별개로 시민교육문화센터 자체역량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내용과 규모의 소강좌를 기획함.
- 강의 주제를 회원과 시민들의 관심사에 맞추어서 선정하고자 함. 작은 규모와 순발력 있는

주제의 기획 가능성을 확인함.

- 시민교육문화센터 인원의 실무 참여 기회를 늘려 시민교육문화센터 조직 활성화를 이끌어내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기대됨.

3. 2015 회원주간

-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2015 여름 회원 주간' 마련

1) "반갑다 친구야 여름 가맥"

○ 초창기 활동했던 원년 멤버들의 만남
○ 일 시 : 7월 6일(월) 저녁 7시
○ 장 소 : 소금인형
○ 참 석 : 회원 8명 사무처 4명

2)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신입회원의 단체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기존회원 및 사무처 상근자와의 만남의 장
○ 일 시 : 2015년 7월 13일(화) 오후7시
○ 장 소 : 참여자치연대 사무실
○ 참 석 : 10명(신입회원 6명, 일반회원 4명)
○ 프로그램 : 상근자 환영공연, '3.3.3 소개팅', 단체소개 및 활동기구 소개,

3) 여름회원캠프

○ 일 시 : 7월18~19일,
○ 장 소 :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 참 석 : 53명(회원 및 회원가족)
○ 프로그램 : 금강래프팅, '추억의 음악다방', 바베큐파티 등

4. 회원 참여 사업

1) 릴레이 회원배가 캠페인 "새친소 이어달리기"

○ 48시간 내 신규 회원가입신청서 접수 및 다음 이어달리기 주자 지목
○ 릴레이 선발주자 3인 : 공동대표 2인 + 운영위원 1인
○ 진행기간: 4월 15일 ~ 6월 18일

○ 참여회원: 15명
○ 회원가입: 13명

2) 우리 같이 점심먹게요

○ 회원소통을 위해 상근활동가와 회원이 함께하는 점심시간
○ 진행기간: 2015년 3~6월
○ 참여회원: 17명

5. 자원봉사·학생실습 프로그램

1) 9기 NGO 인턴십

○ 기 간 : 2014.12.22 ~ 2015.02.13 (8주)
○ 업 무 : 일과업무 보조, 정기감사/정기총회 준비 보조,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
회원연락처/언론사연락처 업데이트, 인턴/실습생 참여자를 위한 '홈커밍데이'
○ 평 가 : 사전운영방안 마련, 인턴교육프로그램 제공, 활동 만족도와 업무 성과 높았음

2) 우석대학교 사회봉사활동

○ 상반기 : 12명, 이틀주막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봉사활동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하반기 : 04명, 사무처 업무 보조, 일정조율 후 하반기 동안 진행

활동기구·소모임 등 회원 자치 활동

1. 편집위원회

1) 월간 소식지 기획회의(매월 2번째 화요일)

- 기고 : 건강이야기(이강주), 자리의 지리학(이경한), 책속으로(이영숙), 옛날이야기(김창주)
- 기타 고정 기고 : 마음시(이형월), 교단일기(이주희), 한발짝 더(강미현)

2) 독서토론회

- 주례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30

2. 시민교육문화센터

- 05월까지 정기 월례모임을 개최하며 참여 위원 확대 방안 마련
- 07월 신입위원 영입 및 가을 집짓기 인문학 강좌 기획

- 10월 집짓기 인문학강좌 개최
- 센터 운영위원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해 활동역량을 강화함.

3. 시민경제위원회

- 4월까지 월례모임 진행
- 6월부터 점심모임을 진행하며 현안 공유와 토론 이어나가고 있음
- 대형마트, 대형아울렛, 재벌유통기업 현황 등을 공부

4. 회원자치모임

1) 회원모임 '소란'

- 정기모임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전주기행 및 영화 공동관람 등 진행
- 하반기 소란 모임 활동멤버 재구성 하였음

2) 회원모임 '좌우지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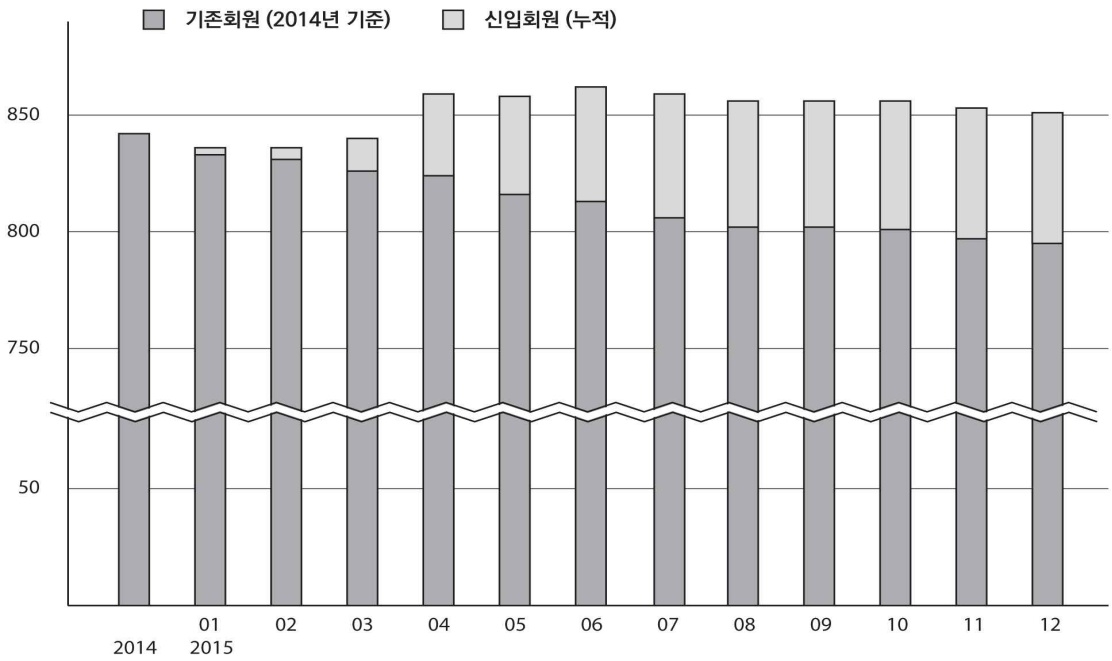
- 정기 월례모임(넷째 목요일) 정례화 이후 참석인원 7~8명
- 회원확대 위한 '내친소(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이틀주막 참여 5명
- 1박 야유회(2015.07.17~18, 장수), 참석인원 22명
- 모임 내용, 참여 인원 관련 변화 모색 중

3) 학생·청년회원 모임

- 7월부터 준비 모임 진행, 9월부터 월례모임 진행
- 향후 지속적인 활동 예정

회원현황 (단위: 명)

	2014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신입		3	2	9	21	7	7	4	1	0	1	1	0	56
탈퇴및 정리		9	2	5	2	8	3	7	4	0	1	4	2	47
회원수	842	836	836	840	859	858	862	859	856	856	856	853	851	851



조직 운영

■ 운영위원회

- 격월로 6차례 개최, 사무처 보고 / 위원회 활동 보고 및 사안별 의제 토론 진행
  1차: 02.26(화), 2차: 04.15(수), 3차: 06.18(목), 4차: 08.19(수),
  5차: 10.15(목), 6차: 12.03(목)

■ 집행위원회

- 총 8차례 개최(매월 첫 번째 목요일), 안건 토의 및 현안 공유 진행
  1차: 02.05(목), 2차: 03.05(목), 3차: 04.02(목) [집행위원회 & 이틀주막준비위원회 연석회의]
  4차: 05.07(목), 5차: 06.04(목), 6차: 07.02(목), 7차: 09.03(목), 8차: 10.01(목)

■ 정책위원회

- 현안 사업 검토 및 정책 과제 수립 중심으로 목요일마다 개최 (부정기)

연대사업

1.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1) 14기(2015년) 공동대표단 회의(총회)

- 일시/장소: 2015.04.21(화) 11 am,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
- 참석단체: 8개 단체, 14명
- 회의내용:
  ① 14기 임원 및 사무국 선임 (간사단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② 14기 사업계획 수립 (역량강화하계워크샵 개최, 운영위원회 활성화, 회원단체 추가가입)
  ③ 정관 개정 및 연대회의 단체 회비 조정/미납액 처리

2) 연대회의 운영위원회 정례화

- 매월 3째주 화요일 오전
- 5~12월까지 6차례 개최, 7월 수련회 대체, 8월 순연

3) 역량강화 하계워크샵

- 2015.07.10, 무주 금강 일원
- 참석: 7개 단체, 22명(YWCA,군산참치,익산참여연대,민언련,민예총,환경련,전북참치)

4) 연대사업

- 군산전북대병원 백석제 부지 변경 요구
-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및 정치개혁 시민캠페인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민캠페인
- 전북경찰청장 성희롱 사건 규탄 및 해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5) 가입단체 확대

- 가입요건 확정 (가입신청서, 추천서 등 문서양식 제작)
- 시민행동 21,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희망나눔재단 등 가입의사 확인
- 연초 단체별 정기총회 후 회의록 등 가입요건 갖춘 가입신청서 접수하기로 함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 월례 집행위원회 12차례 개최

- 단체별 주요 현황 공유
- 공동대응사업 기획 및 진행 논의

2) 2015년 대표자회의(총회)

- 일시·장소: 2015년 1월 30일(금) 오후 2시, 세종시 동림권역 체험관 아람달
- 신임 공동 집행위원장 2인(서울 박근용 사무처장, 대전 문창기 사무처장) 선임
- 기타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3)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대응

- 지방자치단체 '착한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한 폐지요구 규탄 기자회견
  (2015.06.18(목), 오전 11:30, 서울 참여연대)

4) 정치 및 선거제도개혁

-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위한 공동입장 수립을 위한 논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주최 '시민사회 정치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국회의'
  (2015.06.17(수),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 정치개혁관련 공동행동
  ; 각 지역단체 주관 토론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
  ; 지역별로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원탁토론회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하계워크샵

- 일시: 2015년 8월 20~22일, 2박 3일
- 장소: 무주 레저바이크텔
- 주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참석: 21개 참여단체 가운데 12개 단체, 43명 참가
- 프로그램: 국민연금관련 특강, 미니운동회, 금강레프팅, 레크리에이션 등 진행

6) 회원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제주여행

- 일시: 2015년 11월 4~7일, 3박 4일
- 참가: 각 단체 활동가 9명 (김희진 부장 참가)

3. 주요 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롯데쇼핑입점저지및전북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4. 기타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전라북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
  전라북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전주시내버스대타협위원회/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

2016년(제17기) 사업 평가

◈ 총괄 평가(2016년)

2016년 상반기에는 20대 총선 대응사업, 하반기에는 국정농단 시민촛불이 주요한 사업이었다. 총선에서 정치개혁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 공약 제안 사업에 집중하였고, 현안 사업으로 떠오른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개정(안)에 지역과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2016년 하반기에는 박근혜 헌법유린 사태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천만 촛불로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 우리는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도도한 역사의 과정 한 가운데 서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 무리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헌정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은 천만이 넘는 촛불로 저항하였고, 국회 탄핵 가결이라는 승리를 얻어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박근혜의 헌정질서 파괴가 드러나면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즉각적인 성명 발표와 시민사회 선언 등에 이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민들과 함께 전개하였다. 단체는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토론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단체와 연대하여 '박근혜 퇴진'을 목표로 1인 시위, 시민홍보 피케팅, 시민공동시국선언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응하였다.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이후 촛불의 원인과 성격, 촛불 이후 시민사회의 방향에 대해 시민집담회와 활동가토론회 등을 진행하였고,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방향과 활동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했다.
계속되었던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지역과 전국으로 연대하여 대응하였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완전한 폐기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국·검정 교과서 혼용이라는 후퇴를 이루어냈다.

■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신당 출현으로 인해 여소야대 의석으로 마무리 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16 총선 과정에서 정치제도 개혁 · 지방자치 강화와 경제민주화 · 민생살리기에 대한 정책을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수집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와 괴리되어 있는 현재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등록 요건 완화, 지방입법권 보장 등을 제안하여 후보자들의 정책 수용을 이끌어냈다.
또한 복합쇼핑몰 규제, 중소기업 보호,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고용 제한 강화, 최저임금 현

실화 등 단체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정책 역시 모든 후보가 수용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투표권 확대를 위해 전국과 연대하여 선거법 개정 청원 운동을 이어갔다.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역경제와 민생 살리기 분야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국인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응하여 시민공개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전북도당 당사 앞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 발의 서명 의원 공개 질의, 국토교통위원회 안건 폐기 요청 등 활동을 진행했다. 이 결과로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 처리 되었으며 완전한 폐기를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저지 등 민생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했다. 중단되어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갈등 해결을 요구하였고,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

■ 회원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와 방식으로 전환된 역사문화시민기행이 지난 해에 이어 도시 근현대사 골목기행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회원활동기구 강화, 회원 만남 활동 등 회원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여 신규회원 가입과 후원회비 총액은 정체했다. 회원 참여활동 사업과 시민 직접참여 사업을 다변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분야별 사업 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 연대사업

1. 박근혜-최순실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태 대응 활동

1) 박근혜-최순실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태관련 전북시민사회 긴급간담회

· 故백남기 전북투쟁본부 중심
· 2016.10.26.(수) 오후 4시, 풍남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 박근혜정권 퇴진 전북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결의
· 시국회의 상황실 결합
· 촛불집회 및 도민총궐기 대회 개최 및 홍보

2) 박근혜정권 퇴진 전북 비상시국회의 결성

· 2016.10.31.(월) 오후 6시, 전북 농업인회관

· 전북도민 총궐기대회 2016.11.05.(토) 개최 및 12일 민중총궐기 참여

· 11일까지 매일 시국촛불집회 개최

· 각계 시국선언 및 성명 발표 등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모든 행동 추진키로 함

3) 전북시민사회 시민공동시국선언 - 전북연대회의 공동진행

· 2016.11.03.(목) 오전 10:20, 풍남문광장

· 선언문 연명 참여자: 558명

4) 박근혜 하야 거리 선전전 - 전북연대회의 공동진행

· 2016.11.07.~11, 효자동 KT 사거리, 관통로 사거리 등

· 2016.11.17. 시내 주요 거리에 박근혜 하야 거리 현수막 13점 게시

5) 전북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① 2016.11.14.(월) 오후 4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 촛불집회는 17, 23, 30 수요일 집중, 평일 촛불집회 주관은 단체별로 순환 담당

· 제2차 도민총궐기 2016.11.19.(토) 개최, 관통사거리

· 이후 매주 한 차례씩 대표자회의를 통해 토요일 집회의 기조와 내용 협의

② 대표자회의 시국회의 공동대표로 김영기대표 등 추가 선임 (2016.11.28.)

6)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 촉구 및 새누리당 해체 요구 촛불집회

· 2016.12.06.~08 오후 6:30, 정운천 의원 사무실 촛불집회 및 시민행동

· 정운천 의원 탄핵안 찬성 요구 및 의원 사무실 항의 스티커 부착

7)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①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및 시국 집담회

· 2016.12.12.(월), 오후 4시, 민주노총전북본부

② 참여자치연대 시국번개 좌담회 '촛불 민심의 바다,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 2016.12.13.(화), 오후 7시, 참여자치연대 회의실

③ 전북연대회의 회원단체 집담회 '촛불시민과 시민사회'

· 2016.12.20.(화), 오전10시, YWCA회관 3층

2. 故백남기농민 사망 대응 및 추모 활동

· 2016.09.28. 오전 11시, 풍남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 기존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故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전북투쟁본부'로 전환
· 분향소 일일지킴이 참여 (10.12(수), 10.15(토), 10.19(수) - 전북연대회의)
· 분향소는 11월 민중총궐기대회까지는 운영, 이후는 상황전개에 따라 결정

3.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 연대 활동

· 2016.11.02.(수) 오전 10:30, 광화문 광장 -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효선언' 기자회견
· 2016.11.08~09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 동시다발 시민선언 동참
· 2016.11.09. - 성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발표
· 2016.12.16. -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정치·교육·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 결성
(국정화저지넷(485개 시민사회단체), 야3당, 13개 시·도 교육청)
· 2016.12.23.(금) 정오, 광화문 광장- '국정교과서 폐기 대정부 국민의견 전달' 기자회견

정치개혁 및 2016 총선대응사업

1. 2016 총선 대응사업

1) 전북 2016총선 시민네트워크 결성

① 활동 일지

· 2016.01.19 - 전북연대회의 운영위원회 '전북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추진결의
· 2016.02.02 - '전북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구성 제안서 발송
· 2016.02.12 - '전북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1차 준비모임
1) 정당초청 토론회, 부문별 정책제안 연속기자회견 등 추진사업 논의
2) 사업 실무를 위한 실무팀 구성
· 2016.02.17 - '전북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실무팀 회의
1) 조직구성(안) 논의
2) 발족 기자회견 일시: 2월 25일, 오전 10:30
· 2016.02.23 - 2차 준비모임 및 '2016 총선과 전북시민사회' 워크샵
· 2016.02.25 - '전북 2016총선 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및 사업계획 발표
- 정당초청토론회, 릴레이정책제안 및 공약수용성평가, 주요사업으로 채택

② 2016총선 정당초청 시민사회토론회 무산

· 2016.03.10. - 예정된 토론회 준비하기 위해 방송사와 총선넷 실무팀 4차례 모임

· 2016.03.09. - 오후 6:10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방송사 토론회취소 결정

· 공직선거법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2) 정책제안 사업

① 경제민주화 및 민생살리기 분야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중소상인보호(복합쇼핑몰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

· 불공정하도급 개선 및 이익공유제 실시,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및 법인세 인상

· 쉬운해고·비정규직고용 사유제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요과제로 채택

② 정치제도개혁 및 지방자치권 확대 부문 /경제민주화 및 민생살리기 부문 시민사회 및 중소상인단체와 공동으로 제안 발표

3) 2016 총선 좌담회 "총선과 지역정치"

· 일 시: 2016년 3월 24일(목) 저녁 7시

· 장 소: 참여자치연대 5층 회의실

· 시민사회·언론인 초청 자유토론 진행

4) 시민사회 정책제안 기자회견 "20대 국회, 이것만은 꼭!"

· 일 시: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 소: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

· 정치제도개혁, 민생살리기, 사회복지 3대 분야 13개 우선 입법과제 후보자 질의서 발송

5) 20대 총선 전북시민사회 정책과제 후보자 수용성 평가

· 각 후보 제안서 발송 및 답변서와 발표된 공약을 토대로 수용성 평가

· 2016.04.07. - 조사 및 평가 보고서 작성 후 발표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활동

1) 선거법 개정입법안 청원을 위한 시민정치포럼(국회의원) 공동워크샵

· 2016.08.16(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 공직선거법 개정청원안 제출

· 2016년 8월 24일(수), 주요내용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및 투표권 확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행·의정 모니터링 사업

1. 2016년 정보공개청구 현황

· 청구 건수 : 총 18건

· 공개 결과 : 공개 16건, 부분공개 1건, 부존재 1건

2. 시민안전예산 분석 공동사업

1) 예산안 분석 1차모임 - 2016.09.28., 오후 1시, 대전 NGO지원센터

· 기존 단체별 예산안 분석 활동 및 보고서 형식 등 노하우 공유

· 공동의제 선정, 진행을 위한 논의

· 시민안전예산 관련 지역별 정보공개청구 추진 합의

2) 예산안 분석 2차모임 - 2016.10.18., 오후 3시, 대전 NGO지원센터

· 공개된 청구자료 검토 및 분석기준 협의

· 사회재난, 자연재난 사업 건수 및 예산 비중

· 무늬만 안전예산 분석 (1회성, 행사성 사업 목록 추출)

· 재난/재해 기금 사용의 적절성, 기금 적립의 충실도

· 안전예산에 대한 분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점검

3) 전라북도 재난안전 관련 예산 현황 파악

① 개요

· 정보공개청구 일자 : 2016.10.04.

· 정보공개청구 기관 : 전라북도 및 14개 기초 시·군

· 정보공개청구 기간 : 2013년 ~ 2016년 9월 집행분

· 정보공개청구 내용 : - 재난·안전관리 사업 현황
- 재난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 재난재해안전 관련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 현황
- 시민안전관련 위원회 현황

② 공개내용 (전라북도)

ㄱ. 재난안전 예산 현황 : 2017년 전라북도 재난안전 예산은 5,051억 원으로 전체예산 4조 6,800억 원의 10.79%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146억 원 증가했지만, 비율로는 0.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 재난분야별 예산 현황 : 2017년 재난안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난 예산이 3,329억 원(65.9%)원이고, 사회재난 예산이 1,087억 원(21.5%)이고, 기타가 554억 원(11%)이고, 안전관리가 79억 원(1.57%)으로 구성되어 있다.

ㄷ. 재난유형별 예산 현황 : 재난예산 총 5,051억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각각 자연재난 예산은 3,329억 (66%)원, 사회재난 예산은 1,087억(21.5%)원, 안전관리 예산은 79.3억(1.57%)원, 기타 예산은 555억(10.9%)원으로 편성되었다.

ㄹ. 교육 및 홍보 예산 : 교육 및 홍보 예산은 10개 사업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2016년에는 가장 큰 것은 소방서별 재난안전교육 사업에 2억8천4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했다. 2017년 예산에는 소방서 재난안전교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보다 44% 줄어든 3억1천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ㅁ.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현황 :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5년간 291억을 조성해서 법정적립기금액(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1/100) 기준 적립률이 10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4억을 집행하였고, 조사대상 기간 이전 조성액을 포함해서 2016년 9월 말 기준 253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동안 집행한 293억 원 중에서 149억(51%)은 재난관리예방사업에 집행하였고, 재난경보시설 통합연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 집행하였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적립기준액 이상으로 적립되었고 연도말 잔액은 205억 원이었다.

※ 관련 예산 현황 집계는 이후(2018년) 시민안전관련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

지역경제·중소상인살리기 민생 사업

1. 선불식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환원을 위한 사업

· 2016.06 : 1차 자료수집, 타지역 사례조사 및 정보공개청구 등

· 2016.07.16 :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잔액 사회환원 및 공익적 사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오전 10:20, 전북도의회 세미나실

· 2016.10 : 전라북도,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2. 에코시티 코스트코 입점 저지 활동

· 2016.07.05 : 대전 코스트코 현장 방문

· 2016.07.11 : 성명 '전주시는 에코시티 대형쇼핑몰 입점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3.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반대활동

· 2016.09.20 :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
- 오전10:30, 전북도의회 세미나실,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 2016.10.05 : 강원랜드 및 인근지역 현장 방문

· 2016.10.11 : 새만금법 개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오전 10:30, 국민의 당 전북도당

· 2016.10.20 :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반대 기자회견,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2016.11.02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관련 공개질의서 및
소관위원회 안건폐기 요청서 발송

· 2016.12.27 : 새만금 내국인카지노(도박장) 허용 법안 폐기촉구 기자회견
-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4. 중소상인 살리기 및 경제 민주화 요구 활동

1) 20대 총선대응 민생 및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간담회

· 2016년 3월15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 하현수(전북전통시장연합회), 최진원(전북수퍼마켓협동조합), 권승주(전북중소상인연합회), 박기수(전북중소상인연합회), 이창엽, 김 숙, 박우성

· 경제민주화 및 민생살리기 분야 5대 정책과제 확정

2) 경제민주화 및 민생살리기 분야 5대 정책과제

① 복합쇼핑몰 규제:
복합쇼핑몰 출점 허가제 실시를 위한 국토계획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②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
현행 제도 상 권고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③ 불공정 하도급 개선 및 초과이윤 공유제 도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행사 및 초과이윤 공유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가맹정사업법 개정

④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및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적정유보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 부활 및
기업 본래 목적을 벗어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관련법률 개정

⑤ 쉬운 해고·비정규직 고용 제한 및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기준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근로기준법 개정

시민교육, 문화사업

1. 역사문화기행

· 회원가족 여행을 통한 친목과 결속, 단체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여한 역사기행이 최근 회원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와 휴무제 정착으로 회원 참여가 극심하게 줄고 고령자의 참여가 늘면서 역사기행의 목적이 달성에 어려움을 겪어옴

· 따라서 도시 근현대사 골목기행으로 주제를 변환하여 2회째 진행

· 인문학적 교양과 근·현대 역사를 돌아보기 위한 주제와 도시 선정

구분	날짜	주 제 기행지	참석인원
제30회	10월 30일	“내 동무야, 청라언덕 가자” 근·현대사 따라 골목길 걷기 대구 (청라언덕 - 이상화고택 - 계산성당-진골목- 대구근대역사관 - 향촌문학관 - 동성로 - 북성로)	32명

2. 회원여름야유회

· 일 시 : 2016.07.16.(토) 오전 11시, 완주군 동상면 화이트밸리 펜션

· 참 석 : 회원 및 가족 20명

· 지 출 : 35만 원 (식사 및 장소 대여료)

· 식사 후 아이들 물놀이, 성인 배드민턴, 족구 경기 진행

3. 청소년 교육활동

1) 초등학교 방문 교육

· 2016.02.04. 오전 10:30,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 신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후원금 수령

2) 완주지역 중학생 미션활동 방문기관 참여

· 3차례(10.21, 11.01, 11.16) 11개 팀 방문

4. 자원봉사·학생실습 프로그램

1) 10기 NGO 인턴십

· 기 간 : 2015.12.21 ~ 2015.02.12 (8주)

· 업 무 : 일과업무 보조, 회원사업(소식지 발송, 회원정보 보정, 정기총회 안내 등),
사무보조(기관/언론사 연락처 업데이트), 정기감사 준비 보조,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 등

· 평 가 : 지역 학교 출신이었으나 해외연수, 취업 등으로 지속적인 연락 유지 어려움

2) 우석대학교 사회봉사활동

· 상반기: 신청자 15명 가운데 12명 수료, 이틀주막 활동 중심으로 진행

· 하반기: 신청자 02명, 업무 보조, 강연회 및 거리 선전전 참여 등의 내용으로 진행

활동기구·소모임 등 회원 자치 활동

1. 편집위원회

1) 월간 소식지 기획회의 (매월 2번째 화요일 → 목요일로 변경)

구 분	회원탐방	성명 논평	연재 기고	주요 내용
1월호 (통권184)	노백송	1	5	[신년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슈]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월호 (통권185)	정우식	1	4	[총회보고] 제17기 정기총회 [이슈] 주민소환운동 충분히 정치적이다
3월호 (통권186)	권승주	2	3	[기자회견문] 전북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이슈] 필리버스터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들
4월호 (통권187)	-	2	3	[총선특집 I] 20대총선 시민사회·중소상인 우선입법과제 [총선특집 II] 시민사회 정책과제 후보자 수용성 평가보고
5월호 (통권188)	박 진	2	4	[특집] 20대 총선 돌아보기 [이슈]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 분	회원탐방	성명 논평	연재 기고	주요 내용
6월호 (통권189)	박재홍	2	4	[특집] 이번엔 우리 밥상이다 (GMO벼 상용화 문제) [행사스케치] 2016 참여자치이틀주막
7월호 (통권190)	-	2	3	[이슈] 버스카드 낙전수익 [현장] 전주 동네빵집 협동조합 결성의 의미와 전망
8월호 (통권191)	김여명	2	3	[특집] 김영란법 들여다보기 [이슈] 국내카지노업계 현황
9월호 (통권192)	김로연	1	2	[특집] 전북지역정치단상(연재) [이슈] 시민이 주인되는 선거제도 개혁
10월호 (통권193)	김상오	1	2	[시국선언문] 백남기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 [이슈] 새만금 카지노 토론회 지상중계
11월호 (통권194)	조경호	3	3	[시국선언문] 전북시민사회 시민공동시국선언 [기자회견문] 내국인 카지노 허용 즉각 중단하라
12월호 (통권195)	안봉주	6	3	[이슈] 강원랜드 탐방기 [회원의글] 촛불집회 참여후기

2. 시민교육문화센터

· 매월 월례모임 진행

· 역사기행 기획 및 진행 참여

· 전주 소풍 기획 (이야기 따라 걷는 전주천 길, 한옥마을에서 옛날이야기 듣기)

· 시민교육문화센터 회원 일터 방문 (장신구, 갤러리송)

3. 시민경제위원회 (매월 두 번째 화요일)

· 매월 정례 모임을 진행하며 현안공유와 토론 진행

·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의 이해를 높힘

· 7월, 대전 코스트코 현장방문 실시

· 10월,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및 인근지역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대응사업: 군산롯데아울렛, 옥시불매운동, 에코시티코스트코 입점, 새만금카지노추진 등

4. 회원자치모임

1) 독서토론회 (주례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7:30분)

· 찾아가는 독서 활동

· 전주대 오항녕 연구교수 초청

· 사람책읽기

· 안상학 시인 초청 저자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

2) 학생·청년회원 모임(첫 번째 화요일)

· 2015년 9월부터 모임 결성 후 6월까지 진행(6명 내외)

· 구성원의 취업 및 입대 사유로 인하여 7월부터 모임 중단

3) '소란', '좌우지간'

· 활동 정지 회원들이 늘어나며 잠정적인 휴면 상태

회 원 현 황 (단위: 명)

	2015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신입		3	3	1	1	4	4	1	-	1	-	-	2	20
탈퇴및 정리		-	-	1	1	-	1	-	2	2	2	1	1	11
회원수	839	842	845	845	845	849	852	853	851	850	848	847	848	

조직 운영

1. 운영위원회

· 매월 셋째주 목요일 개최

· 사무처 보고 / 위원회 활동 보고

· 사안별 의제 토론 진행

1차 운영위원회 (02.18) - 2016 총선과 전북 시민사회

2차 운영위원회 (03.17) - 20대총선 정책과제, 교통카드 낙전수익 사회환원 요구 사업

3차 운영위원회 (04.21) - 4.13총선평가

4차 운영위원회 (05.24) - 재정 안정을 위한 희망나눔 이틀주막 준비 점검

5차 운영위원회 (06.16) - 에코시티 대형마트 진입 저지

6차 운영위원회 (08.18) - 새만금내국인카지노 추진 개정법안에 대한 대응 계획

7차 운영위원회 (10.20) -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분석 사업

8차 운영위원회 (11.18) - 박근혜 헌정유린사태와 국민촛불

2. 정책위원회

1) 매주 목요일 5시 진행 : 현안 사업 검토 및 정책 과제 발굴 토론

2) 정책위 논의 및 토론 내용

① <현안 점검>

-. 에코시티 코스트코 입점 저지

-. 전주 항공대 이전 사업

-.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관련

-. 새만금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 저지

② <총선 특별위 활동 점검>

-. 총선 대응, 정당 정책 검증 토론회, 정책 제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옥시 불매운동, 국정교과서 등 대응사업

-. 총선시민연대 사업 검토

③ <정책 토론>

-. 시민정치 조직 사례 토론, 정치개혁 과제 토론, 시국 좌담회 개최 등

④ <연대사업 점검>

-.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총선시민연대 활동 등

-.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 정세 관련 토론

-.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 활동 현안 점검

연대 사업

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14기 운영위원회 : 2016.01.26 (7차) - 총선네트워크 구성 결의
2016.02.09 (순연) - 총선네트워크 출범준비로 순연
2016.03.22 (8차) - 3개 단체 신규가입 승인
2016.04.20 (대체) - 대표자회의 준비모임으로 대체

2) 15기 대표자회의 (정기총회)

· 2016.04.26, 오전 10:30, 참여자치연대 회의실

· 결의사항 : 14기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15기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15기 운영위원회 : 2016.05.17 (1차) - GM벼대책위 참여, 활동가역량강화 프로그램
2016.06.21 (2차) - 하계 워크샵, 활동가 세미나 추진 결의
2016.07.19 (순연) - 하계 워크샵으로 순연
2016.08.23 (3차)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반대활동 추진 결의
2016.09.20 (순연) -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토론회 개최로 순연
2016.10.18 (4차) - 백남기농민 투쟁본부 참여, 중간회계결산
2016.10.28 (임시)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긴급 임시운영위
2016.11.15 (5차) - 전북비상시국회의 활동 경과
2016.12.20 (순연) - 연대회의 시국집담회 개최로 순연

4) 활동가역량강화 프로그램

① 예산·정보공개 학교

· 2016.06.14.~07.05 매주 화 저녁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8명 교육과정 수료

② 하계워크샵

· 2016.07.12.(화), 지리산 창원마을 및 산청 경호강 일원

· 지리산 둘레길 걷기, 경호강 레프팅, (9개 단체, 25명 참가)

③ 활동가세미나

· 2016.07.20.(수), 오전 10시, 전북환경련 세미나실

· 주제 -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주민공동체 사업의 이해”

· 초대강사: 이현민 소장(전주시마을만들기센터), 이정섭 박사(전북연구원)

5) 기타 연대활동

① 2016년 전북시민사회 신년하례회

· 2016.01.06.(목) 오전 10:30, 전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강당

② 4·19 기념 김주열열사 묘소참배

· 2016.04.19.(화) 오전 10시, 남원 김주열열사 묘역

③ 이세종열사 추모제

· 2016.05.18.(수)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광장

2. 가습기 살균제 관련 대응사업

1) 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불매 시민 직접행동 주간 (2016.05.10~16)

· 2016.05.10.(화)오전 11시 - 소비자정보센터 강당, 준비모임
오후 2시, 롯데마트 효자점 앞 옥시불매 전북행동 공동기자회견
· 2016.05.11.~13 서신동 이마트 앞 1인피켓시위 진행 (김숙, 박우성, 박영진 참여)
· 2016.05.16.(월)오후 2:20 롯데마트 효자점 앞 기자회견 및 옥시불매 시민행동

2) 가습기 살균제 전북 피해현황 발표 기자회견

· 2016.06.13.(월) 오전 11시, 전북도청 브리핑룸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현황발표, 피해사례 소개
· 전북지역 희생자(8명) 추모 촛불 퍼포먼스

3. 미원상사 발암물질 배출 전라북도 대책 마련 촉구 전북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16.10.20(목) 오전 10:30, 전북도청 브리핑룸
· 아모레퍼시픽, 부광제약 등에 원료 납품한 미원상사(완주군 봉동소재 제1,2공장 및 계열사 미원스페셜티케미컬)의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은 도내 1위, 매년 4~14톤에 달하는 벤젠(1급 발암물질) 대기로 배출 중
· 미원상사의 벤젠 저감대책 및 지자체의 현황 파악과 특별 점검, 주민안전 대책 등 요구

4. 반 GMO전북도민행동

1)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GM)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2016.05.31.(화) 오전 11:20, 농촌진흥청 앞
· 참여단체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2개 단체, 생협조직, 농민단체 등
· 유전자조작(GM)작물 개발 반대 캠페인 참여 및 대국민 호소문 연명
· 요구사항 : 농진청 유전자조작(GM) 벼 상용화 및 작물개발 중단,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완전 표시제 시행 등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 2016년 정기총회 및 동계워크샵

· 일시·장소 : 2016.01.29~30(금~토), 충남 공주, 계룡산 인근
· 지역운동연대 정기총회 및 2016년 활동계획 공유
· 특강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의사결정모델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정치적 실험'

2) 하계워크샵
· 일시·장소: 2016.08.25~27(목~토), 거제 가배랑 리조트
· 교육프로그램: 각계 각층 개헌론에 대한 이해(박근용 처장), 시민주권론(진시원 교수)
· 2016.08.26.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 프로젝트 수행

6. 전주버스개혁시민모임
· 매월 1회의 정례모임 진행
· 이용자인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개혁 논의
· 재정 투명성, 노사 갈등 등 중재방안 마련

7. 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 회의
· 2016년 감시관 회의는 총11회 정례회의 및 1회 야외 간담회로 진행됨.
· 의문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사업 설명을 요청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개선 요구 등 적극적인 활동 전개
· 감시관 대상사업 : 마중길 사업/보행자중심테마거리 조성사업/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풍길 조성사업/수목식재현황 및 유지관리 자료 검토-도시숲조성사업/상관저수시 생태레저타운 조성 기본계획
· 시민감시관 (김남규, 강미현, 국순화, 김신영, 김종만, 나인호, 황지욱) / 사무국장 (김숙)

8. 주요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 반GMO전북도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 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협의회

9. 기타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전라북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전라북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전주시시민의버스위원회/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전라북도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2017년(제18기) 사업 평가

◈ 2017년 사업 총평

2017년 우리 국민은 1,700만 촛불을 들어 불의한 권력을 탄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민주주의 새 역사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상인단체,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여 중소상인살리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변칙과 편법을 앞세워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재벌유통에 맞서 활동을 진행했다. 단체가 제기한 현안과 이슈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등 온라인 소통활동을 강화했다. 회원 감사카드 보내기와 회원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회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연대사업

대한민국은 혹독한 겨울을 뚫고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어젖혔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가슴 뜨거운 역사의 현장에서 1,700만 촛불과 함께 했다. 우리는 광장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갑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촛불 승리를 언론, 검찰, 정치제도 등 사회개혁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 정치제도 개혁 사업

단체는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의회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승자독식 선거법을 개혁하기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 이어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했다. 특히 권역별 연동형비례제, 지역정당 허용,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핵심요구로 대선시기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활동을 전개했다. 시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거리 홍보활동, 1인 피켓팅, 거리 서명활동을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청원운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9월 중에는 국회 입법청원 운동을 벌였으나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3,4인선거구 확대를 위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3. 중소상인 보호 연대 및 시민권리 사업

변칙과 편법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탈하려는 유통재벌에 맞서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을 벌였다. 특히 노브랜드라는 PB상품을 앞세운 이마트의 진입을 막기 위해 '중소상인살리기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중소상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였다. 즉각적인 대응

으로 사업중지명령을 이끌어 냈고, 현장실태조사와 의회 토론회, 집회 등으로 중소상인 보호에 대한 이슈를 다시 확산시켰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과 연대하여 법률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생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채택한 금융수수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4. 이슈 공유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사업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온라인 소통활동을 강화했다. '회원통신'이라는 오프라인 매체와 더불어 새로운 온라인 매체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발송을 시작했다. 뉴스레터는 단체가 발굴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지역사회와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유함으로써 이슈 확산과 단체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웹포스터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전파하였으며, 이슈를 보다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온라인 배포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와 각종 SNS의 단체 계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5. 회원사업

단체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회원들을 접촉하기 위해 가입월과 가입연도로 분류하여 감사카드 발송사업을 진행했다. 감사편지를 받은 회원으로부터 오히려 단체가 감사표현을 받았으며, 일상적이고 감성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앞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현대사 스토리 탐방'으로 주제를 바꾼 역사문화시민기행은 고령자와 어린이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인문학적 요구를 가진 참가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사업방식에서는 변화를 주지않아 참가자 감소가 계속되었다. 기획과정에서 홍보구성까지 회원 및 기존 참가자에게 정보를 미리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 2017년 분야별 사업 보고

민주주의

1. 박근혜퇴진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1) 박근혜정권퇴진 전북시국회의

① 경과

· 전북도민총궐기: 1월 7일(9차) ~ 3월 4일(16차), 매주 토요일 개최

· 탄핵촉구 평일 집회: 3월 6일(월) ~ 3월 9일(목), 4회 진행

· 헌재선고 중계방송 공동시청 및 촛불 승리 기자회견: 3월 10일(금) 오전

· 3월 10일(금) 17차(마지막) 전북도민총궐기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 전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1월 9일(8차) ~ 3월 21일(17차), 8회 진행

· 3월 25일(토) 박근혜 구속촉구 전주 촛불집회를 끝으로 전북시국회의 활동 종료

② 전북시국회의 정세강연 및 시국간담회

· 일시 : 1월 9일, 오후 7시

· 장소 :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강당

· 초대손님 :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대변인

2) 시민원탁토론회

① 제안배경 및 사업목표

· 광장민주주의로 비롯된 시민 참여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

· 새로운 방식의 토론과 타협, 시민 간 소통의 도구로서의 열린 토론회

② 경과

· 기획회의: 2016.12.8.부터 4차례, 12.10~24 촛불집회에서 설문조사 및 사전 참가신청 접수

· 퍼실리테이터 교육: 2017.01.07.(토) 오후 1시, 참여자치연대 회의실

· 퇴진행동(서울) 시민참여위원회 교육강사 및 실무자 파견, 사전교육 및 행사 당일 기술지원

③ 전북 시민원탁회의 개최

· "당신이 말 할 때가 민주주의: 대한민국 어디부터 손봐야지?"

· 일시: 2017.01.12.(목) 오후 7시

· 장소: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 토론주제1: 한국사회, 당신이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 토론주제2: 동네/집/직장/학교, 당신이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 참석자: 13개조 77명(퍼실리테이터 및 실무자 제외)

3) 박근혜정권퇴진 전북시국회의 정리위원회

· 3월21일(화) 17차대표자회의: 전북시국회의 해산, 상임대표/상황실에 정리위원회구성을 일임

· 3월 27일(월)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단 회의: 정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결의

· 활동내용 : ① 전북시국회의 활동 보고서 발간 및 촛불집회 관련 자료 수집

② 상황실(정리위원회) 중심으로 25일 집회 및 세월호3주년 추모집회 준비

③ 상황실 + 자원봉사자 중심의 실무자 집담회 개최(3월 25일)

· 보고서 발행 (발행일자:217.06.10, ISBN 979-11-960945-2-2)

2.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사업

· 3월 29일(수)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회의: 3주기 추모사업 실무협의 및 재정계획
· 4월 05일(수)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회의: 세부 진행사항 및 행사일정 점검
· 추모행사 내용: 4월 13일부터 풍남문 광장에서 사진전 “잊을 수 없는 그날들” 진행
4월 15일(토) 오후 4시, 기억문화제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4월 16일(일) 오후 3시, 추모제 “기억과 다짐”

3. 6·10 항쟁 30주년 기념사업

1) 87년 6월민주대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전북조직위원회

① 조직구성

· 대표자회의: 모든 참여단체의 대표/실무책임자
· 공동대표단: 김완술회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김영기대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종광본부장 (민주노총전북본부)
최승희대표 (전북여성단체연합)
황민주이사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 실행위원회: 이창엽실행위원장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실행위원(노현정,박연수,박우성,소영식,양병준,유기만,이정현,이창엽,정선숙,조혜진)

② 사업기조

· 30주년을 맞이하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그 현재적 의미를 찾는다.
- 6월항쟁에서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광장의 시민에 대한 재발견
-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역량과 가능성
- 다시 살려낸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 공유
·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 결과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 광장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 모든 것에 대한 민주주의

③ 경과

· 2017.04.11.(화): 제안단체 간담회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017.05.08.(월): 6월민주항쟁 30주년기념사업 전북조직위원회 참여제안서 배포

· 2017.05.12.(금): 조직위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 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 실행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 초청토론회, 기념대회, 시민축제(부스운영) 등

· 2017.05.17.(수): 1차 실행위원회 회의

· 2017.05.24.(수): 2차 실행위원회 회의

· 2017.05.30.(화): 대표자회의

· 2017.06.07.(수): 3차 실행위원회 회의

2) 6월항쟁 30주년 기념 토론회 "6월에서 촛불로,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 일 시 : 2007년 6월 9일(금) 저녁 7시

· 장 소 : 전주(중부교회) 중부비전센터 4층, 그레이스홀

· 주제 발표 : '87체제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시민주권' - 임성진 교수(전주대학교)

· 분야별 토론자

분야	성명	소속
노동	염경석	민주노총전북본부 지도위원
교육	김정훈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평화·통일	국 산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환경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여성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시민사회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3) 6월항쟁 30주년기념 민주주의 대축제 -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이름	주관단체	내용/이벤트
	버스킹공연1	스위트포테이토	
	버스킹공연2	우리동네	
	6월에서 촛불로	조직위(실행위)	6월항쟁·촛불혁명 사진전
1	610 시민바람	조직위(실행위)	대통령에게 엽서쓰기 610개 바람개비나눔
2	백핵무익展	전북환경련	탈핵관련 그림전시
3	국민마이크 in 전주	전북민언련	국민정책제안/시원한 물 나눔

4	복지사회로 가는 길	희망나눔재단	비누방울 날리기
5	선거바꿔: 정치개혁과제	참여자치연대	새콤달콤 슬러시
6	교육3주체의 목소리	전북교육자치연대	알록달록 페이스페인팅
7	100원의 기적	전북YWCA	북한어린이돕기/아이스크림
8	여성비정규직 권리찾기	여성노조전북지부	최저임금 인증샷!
9	여성개혁과제 장미꽃투표	전북여연	면생리대체험/얼음아메리카노
10	성별임금 불평등 해소	여성노동자회	송판뿌셔!/쮸쮸바
11	사드가고 평화오라	전주평통사	사드 반대, 평화협정 홍보
12	빨간우산캠페인	민주노총전북본부	빨간우산 체험(대여)
13	모두가행복한최저임금만원	스마일만원운동본부	결정! 최저임금 제자리멀리뛰기

① 시민희망난장 : 버스킹공연/ 6월항쟁·촛불사진전/ 시민부스

② 기념대회 : 오후 6시부터 기념식 및 문화제 진행

- 시민선언낭독, 시민바람읽기, 6월과 촛불의 만남(영상인터뷰)
- 공연 :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아퀴/ 김용진/ 이상한계절/ 홍성욱/ 쁘렌데레/ 휴먼스/ 전주연합풍물패

4. 촛불 1주년 기념사업

1) 전북 촛불1주년사업 준비위원회

① 경과

· 2017.09.27.(수), 오전 10시, 전북농민회 - 촛불1주년 기념을 위한 1차 준비모임
: 전북시국회의 정리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

· 2017.10.12.(목) 부터 전북 촛불1주년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 4차례 진행
: 영화상영, 온라인 설문조사, 사진전 및 사회개혁부스, 토론회 등 기획

② 기념 사업 내용

· 촛불항쟁 1주년 기념 특별영화상영 : '모든 날의 촛불'
10월 24일(화)오후7시, 남부시장 청년몰

· 온라인 설문조사 : 촛불 1주년, 촛불시민에게 묻다
"촛불 1년 우리가 바꾼 것은 무엇인가요?"

· 촛불1주년 기념행사: 10월28일(토) 민예총 천고제, 촛불1주년 사진전, 사회개혁부스(3개소)

운영

· 촛불 1주년 토론회는 잠정 연기

정치제도 개혁 사업

1.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사업

1)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 1월 23일 기준 전국 115개 노동·시민단체 참여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결성
- 개혁요구안(3대 과제) 발표 : ① 국민참정권(18세 투표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② 연동형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도입
  ③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 대선 후보 및 각 정당 선거제도 개혁 공약 등 검증 및 홍보 활동 계획

2) 선거법개혁 전북공동행동

① 경과

· 2017.03.15.(수) - 참가제안서 배포

· 참여단체: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2개 단체), 전주YMCA, 민주노총 전북본부

②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전북공동행동

· 기자회견: 2017.03.27.(월)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 전국 집중행동 주간에 맞춰 4일간(27~30) 선거법 개혁 주요 거리 피켓시위 진행

- 출근 피켓시위: 효자동 KT 사거리 3회
- 점심 피켓시위: 국민의당 도당 4회, 더민주당 도당 1회, 구도심 2회, 한옥마을 1회

3)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① 정치개혁 공동행동(전국)

· 대선 후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재편하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구성됨

· '3대 의제 11개 과제' 선정 (8월 중)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국회 입법청원 릴레이 진행(9월 중): 15차례
· '정치야 말 좀 들어' 온라인 입법청원 운동
· 각 지역별, 부문별 강연회/토론회 개최

②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 활동 경과

2017.09.21.(목)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제안간담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2017.09.27.(수)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준비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대회의실)
2017.10.11.(수)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1차 대표자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
2017.10.16.(월)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전라북도의회 1층 브리핑룸)
2017.10.20.(금)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1차 집행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
2017.11.06.(월) 도내 국회의원 및 정당 입법정향조사 공개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배포)
2017.11.14.(화) 지역 정치인에 대한 정치개혁 지지선언 요청
2017.11.15.(수)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2차 집행위 (세월호 농성장)
2017.11.22.(수) 정치개혁 공개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
2017.11.24.(금) 민주당 전북도당 방문면담
2017.12.11.(월)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3차 집행위 (참여자치연대 사무실)
2017.12.20.(수)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4차 집행위 (참여자치연대 사무실)

· 홍보 활동

2017.10.28.(토) 전주시 '사람의 거리' 행사 참여, 정치개혁과제 부스운영 (충경로)

2017.11.08.(수) 전북대 구정문 거리캠페인

2017.11.15.(수) 한옥마을 거리캠페인

2017.11.22.(수) 전주대 학생회관 거리캠페인

2017.12.06.(수) 객사 앞 거리캠페인

2017.12.20.(수) 객사 앞 거리켐페인

· 초청강연회

2017.10.16.(월)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개혁' 하승수선생 강연회 (중부비전센터 가나안홀)

2. 2017대선 대응사업

1) 2017대선 주권자 전북행동

· 2017.04.05.(수) 오전 11시, 민언련사무실: '2017대선 주권자 전북행동' 실무준비팀 구성

· 2017.04.11.(화) 오후 1시, 북카페 카프카: 1차 실무팀 회의

· 2017.04.13.(목) 보도자료 배포: 2017대선 주권자 전북행동 출범 및 온라인 캠페인 홍보

- #VoteFor대선주권자행동 인증샷 캠페인, 대선공약 팩트체크(분야별), 선거법피해사례 수집

· 2017.04.20.~25. 촛불대선 설문조사: 개혁과제 및 정책우선순위

2) 19대 촛불대선,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주권자파티

· 2017.04.26.(화) 오후 7시, 중부비전센터 4층 그레이스홀

-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 초청공연: 이상한 계절
- 촛불대선 설문조사 결과 공유
- 원탁토론 진행 및 주권자 선언 손피켓 작성
- 주권자 선언 인증샷
- 2부 "더 파티": JTBC 대선후보 토론회 공동시청, 인문학카페 파사주

투명사회를 위한 행정 · 의정 감시 사업

1.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법정 공개자료 수집

1) 보궐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 4·12 재보궐 선거: 전주시제4선거구(2명), 완주군라선거구(4명)

· 5·09 제19대 대통령선거: 전주시마선거구(2명)

2)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자료: 관보-제188974호(2017.03.23.)

· 공개대상자: 1,800명 (전북 83명 포함, 공개자 소속과 직위는 2016.12.31. 기준)

·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거부자: 550명 (30.6%, 역대 최고)

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대응사업

1) 대응 사업

· 전북지방검찰청 중간수사결과 발표(2017.08.09.):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11명

· 당일 성명발표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 및 편성 재량사업비 즉각 삭감'

· 라디오, TV 등 언론 인터뷰: JTV 저녁뉴스, CBS 사람과 사람

2) 정보공개청구

· 청구대상: 전라북도, 전주시

· 청구내용: 2016~2017년도 재량사업비 편성사업 목록 및 기집행내역

· 전라북도 비공개결정 사유: 검찰수사를 위해 제공된 자료 공개 불가

· 전주시 정보공개 내용: 선거구별로 구분된 주민참여사업비 예산 내역(의원별 목록 부존재)

지역경제·중소상인살리기 민생 사업

1. 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1)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저지를 위한 대응 사업

① 사업배경

·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지 오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재벌기업들은 변칙적인 방법들을 개발해가며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라는 PB상품을 앞세워 전국의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려 하고 있음. 유통 재벌기업의 횡포로부터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지키고 중소상인의 존립과 성장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

② 사업목적

· 대형마트 허가제 및 규제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몰락하고 있는 중소상인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③ 노브랜드 입점 현황

· 노브랜드는 2015년 4월부터 이마트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로서, 2016년 11월 기준 약 800여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전국: 59개 (2017년 10월 기준)
· 전북: 3곳 입점 예정(효자동, 삼천동, 송천동)

④ 경과

· 5월22일 노브랜드 효자점 사업일시정지 권고
· 7월07일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과 면담
· 7월07일 노브랜드 철수 촉구 대회 1차 (오후2시, 서신동 이마트 앞)
· 7월27일 삼천점 사업일시정지 권고
· 8월01일 송천점 사업일시정지 권고
· 8월11일 노브랜드 청주점 현장 실태조사 및 청주 상인들과 간담회 진행
· 8월17일 노브랜드 입점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준비 모임
· 8월23일 노브랜드 입점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준비 모임
· 8월29일 노브랜드 철수 촉구 대회 2차 (오후2시, 서신동 이마트 앞)
· 9월14일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면담(대형마트, SSM 사업조정 이행 점검 실태조사 촉구)
· 9월25일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오전11시, 도의회)
· 10월13일 중소상인살리기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1차 회의
· 10월25일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관 방문 (사업조정협약 이행 점검 실태 파악 요청)
· 10월26일 노브랜드 사업조정 실무회의 1차(도청 소회의실12층)
· 11월0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면담 (정치권의 협력과 공조요청)
· 11월06일 중소상인살리기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2차 회의
· 11월08일 전라북도의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면담
· 11월20일 국민의당 전북도당 김종회 위원장 면담
· 12월01일 골목상권·중소상인 살리기 정책토론회 진행
· 12월15일 중소상인살리기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3차 회의
· 12월21일 노브랜드 삼천점 사업조정 실무회의 1차(도청 소회의실12층)
· 12월22일 조배숙 의원(국회 산자벤처위) 면담

⑤ 조사사업

· 판매량 기준, 생활필수품,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으로 30개 품목 선정

	조사 내용	조사방법 및 세부내용
제품조사	가격조사 및 성분조사	- 1차 : 노브랜드 제품 가격, 성분 조사 - 2차 : 노브랜드· 타사제품 간 비교 조사

· 조사 내용 : 1차 현장실사 진행 후, 2차 인터넷 및 전문가 자문으로 비교 조사 실시

· 조사보고서 소식지 게재

2)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

① 출범 기자회견: 9월 25일 오전11시, 도의회 브리핑룸

② 조직구성

○ 참여단체 (42개 단체)

○ 공동대책위원장: 김영기, 최진원, 임규철, 윤종광, 두완정

○ 집행위원회 및 상황실 :

- 집행위원회: 전북소상공인대표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군산마트연합회
- 상황실장: 김숙

③ 활동목표

- 노브랜드 입점저지 및 재벌기업 골목상권 입점저지
- 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 중소상인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몰락하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 지역경제 상생 방안 모색

3) 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정책토론회

① 일 시 : 12월 1일(금) 오후 2시

② 장 소 : 도의회 1층 세미나실

③ 사 회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④ 발 제 : 유대근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교수):노브랜드점의 출현과 중소유통업의 대응

⑤ 토론자: 최우종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대표),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연합회장),
박재만 (전라북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이성일 (전라북도의회 국민의당 도의원),
전해성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김봉정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장)

⑥ 주요내용 : - 대형마트·SSM과 무기력한 골목영세업체
- 이마트노브랜드 진입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막아야
-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정교해지는 대형유통자본의 위장과 변장술, 강력한 규제만이 살길이다
- 전라북도 준대규모점포 사업조정현황
- 대형유통업체 진입에 따른 전주시의 규제 현황

4) 사업조정협약사항 이행점검실태 조사 촉구

2. 금융(예금)입·출금 수수료 현황 조사사업

1) 사업취지

- 은행의 수익구조는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로 수익을 얻고 있음. 또한 고객의 예금인출, 입금, 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책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연 서비스 수수료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자동화기기(ATM)설치는 은행의 운영비용(인건비)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되었기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업체가 영업이익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기기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 부담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 자료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자동화기기 입·출금 수수료 현황을 파악하여 은행의 전체 수수료 수익 중 입·출금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비율을 파악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이 적정한 지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함.

2)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 조사대상 : 시중은행(6곳), 특수은행(5곳), 지방은행(6곳)
- 조사기간 : 2017.03~04월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취합,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료 수집.
- 조사내용 ○ 각 은행의 자동화기기 입·출금 수수료 금액규모별, 마감전·후 현황
○ 창구 송금수수료 금액규모별, 마감전·후 현황
○ 부문별 손익 자료 현황 및 공시 여부

3) 제안사항

○ 은행 자동화기기 입금、인출수수료 적정화

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등 공익적 성격이 있으며 예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이에 수반되는 예금 인출, 입금, 송금 등은 은행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로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봄.

○ 자동화기기(ATM) 유지관리 비용 및 입·출금 수수료 수입현황 공개

은행이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자동화기기의 유지를 통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이에 명확한 근거를 위한 입·출금 거래에 의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정보 공시 접근성 필요

은행의 입출금 수수료 구조가 금액 규모 및 영업시간 이후 여부에 따라 다르고, 은행별 수수료 차이도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합리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수료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은행 창구나 홈페이지에 분야별, 및 금액 규모, 영업시간 이후 여부에 따른 수수료 정보를 게시하고, 은행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수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됨.

3.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실태조사

1) 배경

·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은 이미 전주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음. 특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라감영 일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영세 임차인이 내몰림을 당하고 있음.

· 타 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직영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되고 상업화됨에 따라 영세업자들은 설 곳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2) 조사사업

· 타 지역 사례 및 각 종 참고자료 등 기초자료조사 진행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실태조사

· 동문거리 등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피해자 인터뷰 진행 (3건)

시민참여, 문화사업

1. 역사문화시민기행

1) 제31회 역사문화시민기행 개요

구분	날 짜	주 제 기행지	참석 인원	결 산
31회	11월5일 (일)	제3탄 근현대 따라 골목길 걷기 순 천 (매산등-공마당길-순천향교-여순학살사건) 벌 교 (태백산맥 문학관-현부자네집-소화의집-보성여관)	25명	981,840원

2) 경과

· 기획(2017년 6월): 순천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스토리 발굴 시작

· 해설사 섭외: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해설사 섭외 시도

· 1차답사 : '근·현대사 골목길 탐방' 기획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순천의 도시재생 중심의 답사로 진행됨. 답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함. (답사자: 김희진 김정희 김성수)

· 2차답사 :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지역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오 대표 섭외. 순천의 근·현대 기독교 역사 및 여순 학살사건 등의 내용이 담긴 기행프로그램으로 진행 확정.

3) 총평

· 회원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와 방식으로 전환된 도시근현대사 골목기행으로 3년 연속 진행하였음. 고령자와 어린이 참여가 눈에 띄게 줄고 인문학적 요구를 가진 참가자 증가.

· 문화유적지 탐방에서 근 현대사 스토리로 주제는 바뀌었으나 사업진행 방식은 바꾸지 않음.

· 회원 및 기존 참가자들과 기행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홍보를 미리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가을운동회

1) 기획의도 : 회원들과 친목 단합의 시간을 갖자는 회원의 제안으로 운동회를 기획하였고 이후 계속적인 단체 사업으로 정례화 할 필요성 있음.

2) 경과 : 가을운동회 회원준비 모임을 3차례 진행하였음.

3) 준비위원 : 박창환 김병홍 김치훈

4) 주요내용

날짜	장 소	진행프로그램	참석인원 (회원 및 가족)	결 산
10월28일(토) 오후1시~5시	아중초등학교 강 당	배구/피구/족구 지네발이어달리기/ 제기차기	45명	989,720원

3. 온라인 사업

1) 소셜 매체별 운영

① 카카오톡

○ 목표 : 기존 일 방향적인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소셜 매체 중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이용 회원들과의 쌍 방향적 소통을 이어 나가보고자함.

○ 운영내용 : 1:1채팅, 카드뉴스 및 웹포스터 등의 이미지화를 통한 정보 제공, 단체카톡을 통한 동시 정보전달

② 페이스북 및 밴드

○ 목표 : 단체 정보 제공 및 회원 참여 유도를 위해 페이스북 매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운영내용:

- 뉴스·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 관련 이슈 및 현안을 파악, 아이디어 회의 및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여 제작의 형태 결정 후 제작 및 배포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회원들의 질의 및 댓글, 좋아요 클릭에 대한 리플 및 답장

2) 홈페이지 운영

○ 목표:

- 메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우측상단에 메뉴를 배너화 시킴. 또한 게시판의 글이 메인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
-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게시판은 숨기고 필요한 게시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고, 배너를 행사나 시기에 따란 변경 운용
- 기존 오프라인을 통한 회원가입의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회원가입 수요 증대

○ 운영내용:

- 알기 쉬운 <회원가입 안내> 개설
- 회원가입안내(온라인용 신청서) 개설

- 뉴스레터 온라인 구독 신청서 개설

3) 소셜 매체 발송 현황

① 웹포스터 및 카드뉴스

월별	횟수	웹포스터	카드뉴스
2월	웹포스터:5회 카드뉴스:1회	촛불집회(2월 3일, 2월 10일, 2월 17일, 3월 8일, 3월 10일)	시민경제위원회 홍보 (2월 22일)
3월	웹포스터:2회	시민강연회 '노동정책'(3월 20일) 선거법 개정 시민 홍보 캠페인(3월 29일)	
4월	웹포스터:1회	세월호 참사 3주년 행사(4월 14일)	
5월	웹포스터:2회	이틀주막(5월 25일, 6월 15일)	
10월	웹포스터:2회	가을운동회(10월 17일) 31회 역사문화기행(10월 18일)	
11월	웹포스터:1회	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토론회 (11월 23일)	
12월	웹포스터:2회	정기총회 개최 공고(12월 21일) 신년하례회(12월 29일)	
1월	카드뉴스:1회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5-정치개혁(1월 3일)

② 뉴스레터 : 참여자치-E소식

월별	횟수	내용
3월	1회	박근혜대통령 파면 헌재선고, 전북 몫 찾기, 대형마트 에코시티 입점(3월 10일)
4월	1회	세월호 조사 및 박근혜 구속, 새만금 카지노, 단체 활동 소식(4월 20일)
5월	1회	촛불대선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기능요원, 대선 후보들의 참담한 남북관계 정책 (5월 2일)
7월	2회	이마트 노브랜드Ⅰ,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이틀주막(7월 21일) 이마트 노브랜드Ⅱ(7월 25일)
8월	1회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우리의 과제, 마중길 논란, 이마트 노브랜드Ⅱ(8월 10일)

9월	1회	마중길 논란, 이마트 노브랜드 실태조사①/②, 국회 개헌특위 대국민 토론회, 전북교육청(9월 13일)
11월	2회	열여덟 생일에 부쳐, 사업 조정 협약이행 점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한방직 부지 개발, 또다시 함께 평화의 촛불을!(11월 13일) 전주시내버스, 1일 2교대와 고정노선 시행(11월 29일)
12월	2회	의원 갑질 논란, 개헌과 더불어 시민운동도 변해야 한다, 도내 국회의원 각 정당 대부분 정치제도 개혁에 찬성 입장 밝혀(12월 18일) 저작권법, 노브랜드점의 출현과 중소유통업의 대응, 사람과 도시, 새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소망한다(12월 29일)

* 후원안내 꼬리표 달기 계속 진행 중 (카드뉴스 및 뉴스레터)

■ 뉴스레터 상세 통계 및 분석 (2017년 12월 13일 현재)

제목	발송일자	발송횟수	성공횟수	실패횟수	확인횟수	미확인횟수	확인율(%)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3월)	2017.03.10.	766	601	165	151	450	25.1%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4월)	2017.04.17.	795	755	40	167	588	22.12%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5월)	2017.05.02.	777	753	24	157	596	20.85%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7월)	2017.07.20.	779	741	38	173	568	23.35%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7월-2)	2017.07.25.	765	739	26	173	566	23.41%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8월)	2017.08.09.	764	735	29	218	517	29.66%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9월)	2017.09.04.	759	728	31	181	547	24.86%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9월-2)	2017.09.13.	1,403	1,289	114	283	1006	21.96%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10월)	2017.10.17.	1,409	1,312	97	243	1069	18.52%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11월)	2017.11.13.	1,394	1,299	95	241	1,058	18.6%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11월-2)	2017.1 - 1.29.	1,395	1,291	104	246	1,045	19.1%
뉴스레터	참여자치 -E소식 (12월)	2017.12.18.	1,387	1,277	110	228	1,049	17.9%
총 : 3월호 ~ 12월호 / 1,395DB / 12회 발송								

4) 온라인 소통 사업 평가

- 회원통신과 뉴스레터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하였고, 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여 문제의식 공유를 확대함.
- 소통 사업 대상자를 회원에서 지역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으로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 대상자는 3월 766명에서 11월 1,396명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고 확인 건수는 151명에서 246명으로 증가함.
- 특히 전주 마중길 논란을 주제로 제작된 8월호 뉴스레터가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주요 독자층은 기자들과 도내 대학 교수진으로 나타남.
- 단체가 발굴한 지역 이슈를 보다 많은 부문과 계층과 공유하고 꾸준한 호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이슈 확산의 가능성을 확인함.

4. 자원봉사·학생실습 프로그램

1) 전북대 산학협력 현장실습

① 2017년 하기 계절제 산학협력현장실습

· 인원 : 2명

· 기간 : 2017.06.26. ~ 2017.07.21. (4주) , 1명
2017.06.26. ~ 2017.08.25. (8주) , 1명

· 업무 : 업무 보조, 이틀주막 준비 보조, 기부금영수증 발송 작업,
회원연락처/언론 연락처 업데이트. 실습학생 기획프로젝트 시행

· 교육프로그램: 독서토론회, 이슈브리핑(뉴스클립핑), 공감세미나, 시민단체탐방

· 평가 : 사전운영방안 마련, 활동 만족도와 업무 성과 높았음.

② 2017년 2학기 학기제 산학협력현장실습

· 인원 : 1명

· 기간 : 2017.09.01. ~ 2017.12.26. (15주)

· 업무, 교육 프로그램 : 이전 실습과 동일

2) 우석대학교 사회봉사활동

· 기간: 2017.03.28. ~ 2017.05.18. (8주)

· 신청: 우석대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9명 수료

· 내용: 역사•이슈 등을 함께 학습 및 토론, 업무 보조

· 평가: 대부분 봉사활동을 교육 활동 등으로 대체하였음
차후에 우석대학교 사회봉사를 비롯한 단체 자원봉사 참여 학생 수행과제, 계획을 새롭게 재정비하기로 함

활동기구·소모임 등 회원 자치 활동

1. 시민교육문화센터

1) 센터장(국순화), 운영위원장(박창환), 회원(김정희, 송을이, 양정임, 정현관, 이창엽)

2) 월례모임 : 매월1회 예정했으나 일정 조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진행됨

· 신년모임 - 일시·장소: 2017.02.14.(화) 오후 7시, 동문사거리 라디오스타
- 2017년 활동계획 및 모임 운영에 관한 토의

· 3월모임 - 일시·장소: 2017.03.22.(수), 오후 7시, 승암산 동고사 일대

· 4월모임 - 일시·장소: 2017.04.26.(수), 오후 6:30, 완산칠봉 투구봉 일대

2. 시민경제위원회

1) 활동회원 : 김진왕, 박순정, 정현관, 허헌회 / 김남규, 김숙

2) 2017년 시민경제위원회 월례모임 현황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회의내용
1차	17.03.01(화) 12:00	중앙동 커피숍	정현관,허헌회,김복순, 김숙	- 신입회원 환영(김복순) -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정보 공유 - 금융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현안문제 공유
2차	17.05.29(화) 12:00	황가네 (경원동)	김남규,김진왕,정현관, 허헌회,김숙	현안공유 및 학습 (에코시티 코스트코 입점)
3차	17.07.14.(금) 13:00	삼양다방 (경원동)	김진왕,김복순,허헌회, 박순영,김남규,김숙	노브랜드 관련 현안 공유 및 조사사업 계획 논의
4차	17.08.11.(화) 09:30	청주 노브랜드 실사	김진왕,김남규,김숙,	현장실사 및 청주상인 간담회

5차	17.08.18.(화) 12:00	참여자치전북시 민연대사무실	김진왕,허헌회,김남규, 김숙	노브랜드 실사 소회 및 구입 제품 시식
6차	17.10.16.(수) 12:00	중앙동 커피숍	정현관,박순영,김남규, 김숙	유통법 관련 학습 및 법률개정 현황, 지역 현황 공유

3. 소식지편집위원회/독서토론회

1) 활동회원 : 위원장 - 이강주, 김경숙, 이경한, 이영숙, 이형월

2) 소식지기획회의

· 매월 첫째 화요일에 진행하다가 3월부터 독서모임 날짜가 월요일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

· 200호 기념호 기획회의: 5월 22일(월) 오후 7:30, 북카페 카프카

3) 독서모임

· 매주 월요일 독서모임 진행

· 묵독파티: 7월 15일(토) 오후 3시, 북카페 카프카, 근영여고 학생 7명 등 참여

회원사업

1. 회원현황 (단위: 명)

	2016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신입		7	3	5	4	1	7	3	2	1	1	1	2	37
탈퇴및 정리		3	96*	3	2	2	-	2	1	1	1	1	4	116
복귀		3	2	-	-	-	-	-	-	-	-	-	-	5
회원수	851	855	762	764	766	765	772	773	774	774	774	774	772	772

96* = 2월 비활동회원 96명 정리

2. 회원감사 편지 보내기

1) 대 상 : 후원회원 감사편지 발송

2) 발송인원 : 464명 (12월까지)

기 준	2월~3월	4월~7월	8월~12월
1년	5명	15명	5명
2~5년	65명	76명	40명
6~7년	23명	27명	21명
8~9년	95명	39명	53명
	188명	157명	119명

3) 평 가

- 감사편지를 받은 회원으로부터 오히려 감사표현을 받았으며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감성적인 소통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앞으로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임.

4) 외부로 발송되는 모든 홍보매체에 회원가입/후원계좌 꼬리표 달기 진행 중

〈 회원사업 총평 〉

2017년 가을운동회, 감사편지 보내기, 뉴스레터 발송, 회원통신비치 등 회원참여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듣는 모니터 작업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회원사업 이후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 작업이 필요함.

3. 월간 소식지(회원통신) 발행

1) 소식지 발송현황

호수	회원 탐방	성명 논평	회원 기고*	내용	발송 부수
1-2월 (196호)	유후선	2	5	[신년사]촛불민심의 바다 위에 정의와 평등의 꽃을 피우자 [총회보고]제18기 정기총회 보고	963
3월 (197호)	황지욱	3	6	[시국선언]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고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라 [특집]'전북 몫 찾기'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으로	909
4월 (198호)	김인수	2	5	[특집]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이슈] '은밀하게! 조용히!' 내국인 카지노는 지금도 진행 중	897
5월 (199호)	박기수	1	5	[대선특집1]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정 [대선특집2] 주권자 파티	895

6월 (200호)	이영호	2	5	[특집1] 87년 체제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시민주권 [특집2] 200호에 담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발자취	863
7월 (201호)	문창선	2	5	[특집] 유통공룡 '이마트 노브랜드'-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대책은? [행사스케치] 2017 시민과 함께하는 이틀주막	892
8월 (202호)	김병홍	2	3	[이슈]전주 '마중길'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뉴라이트로 기전대학교를 장악하라?	892
9월 (203호)	-	1	5	[현장]국민 없는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현장 실태 [이슈]전주 '마중길'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889
10월 (204호)	한주연	-	5	[이슈]낙후의 원인을 시민사회로 돌리는 것이 '전북자존찾기'인가? [기획]부패한 공직자와 청렴한 국민 사이의 간극	889
11월 (205호)	장미숙	-	5	[이슈]대한방직 부지개발, 도민의 공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행사스케치] 2017 가을 운동회	889
12월 (206호)	김회신	1	5	[해설]정치개혁 11개과제 도내 국회의원/각 정당 응답현황 분석결과 [행사스케치]제31회 역사문화시민기행	891

*회원기고 : 소식지에 담긴 정기, 부정기 회원들의 기고 꼭지 수

2) 제작비 현황

구분	내용
제작비	850,000원 × 12개월
발송비	3,163,800원 (연간)
봉투제작비	1,650,000원
총액	15,013,800원

조직 운영

1. 운영위원회

· 매월 셋째주 목요일 개최

· 사무처 보고 / 위원회 활동 보고

· 현안 브리핑 및 기타토의 진행

1차 운영위원회 (02.16) - 전라북도 '전북 몫 찾기' 관련

- 지역관련 대선공약 분석
- 송천동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대응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2차 운영위원회 (03.16) - 대통령 파면 및 대선 정국, 3당 개헌요구 관련
- LG U+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및 공대위 활동

3차 운영위원회 (04.20) - 입출금수수료 현황 조사사업 보고
- 군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실태 조사 보고

4차 운영위원회 (06.15) - 6월항쟁 30주년 기년 민주주의 축제 준비 보고
- 이틀주막 준비 점검

5차 운영위원회 (07.20) -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대응
-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관련 사안 공유

6차 운영위원회 (08.17) -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관련 사안 공유

7차 운영위원회 (10.19) - 정치제도 개혁 시민운동
- 2018년 지방선거
- 이○○ 목사 사기 및 횡령사건

8차 운영위원회 (11.16) -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2. 정책위원회

·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정책위원회 개최

· 현안 공유와 대응방향 토론, 지역 이슈 발굴

연대 사업

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15기 운영위원회

날짜	회차	장소	주요내용
2017.01.03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신년하례회
2017.02.21	6차	전북민언련 회의실	시국선언, 3·8여성의날, 16기대표자회의
2017.03.14		중화산동 조이커피	대표자회의 준비회의

2) 16기 대표자회의 (정기총회)

· 일시 장소 : 2017.03.21. 오후 2시, 참여자치연대 회의실

· 결의 사항 : 15기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16기 임원진 인선, 16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16기 운영위원회:

날짜	회차	장소	주요내용
2017.04.05	임시	북카페카프카	대선대응유권자네트워크구성 및 실무준비 조직
2017.04.27	1차	전북민언련 회의실	단체간 활동공유,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
2017.05.23	2차	전북민언련 회의실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 활동가 집담회
2017.06.20	3차	YWCA회관 민들레홀	활동가 공감토론회
2017.07.18	4차	전북민언련 회의실	공영방송정상화/부안여고성추행사건/하계워크샵
2017.08.22	5차	전북환경련 회의실	정치개혁공동행동/신고리원전/이마트노브랜드 등
2017.09.19	6차	전북민언련 회의실	정치개혁/노브랜드/원전/공영방송 등
2017.10.16	7차	희망나눔재단 회의실	전발연토론회 장명수발언 대응/촛불 1주년 사업 등
2017.11.20	8차	참여자치연대 회의실	정치개혁/노브랜드/공영방송/촛불1주년/전발연대응
2017.12.26	9차	참여자치연대 회의실	2018년 신년하례회 논의/정치개혁/공영방송정상화

4) 하계워크샵

· 일시: 2017.09.05.(화) 오전 10시 무녀도 주차장 집결

· 장소: 군산 선유도 일대

· 10개 단체, 36명 참가 - 선유도 산책, 바다낚시, 집라인 & ATV체험 등 진행

5) 기타 연대활동

① 2017년 전북시민사회 신년하례회

· 일시: 2017.01.03.(화) 오전 10:30

· 장소: 전주 YWCA 전북여성인력개발센터

② 탄핵안인용 및 특검수사기간 연장 시민사회 시국선언

· 일시: 2017.02.24.(금) 오전 11시

· 장소: 전북지방법원 정문 앞

③ 김주열열사 묘소참배

· 일시: 2017.04.19.(수) 오전 10시
· 장소: 남원 김주열열사 묘역

④ 이세종열사 추모제
· 일시: 2017.05.17.(수) 오후 5시
· 장소: 전북대 이세종광장

⑤ 활동가 공감토론회 “촛불대선 이후 전북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 일시: 2017.06.20.(화) 오전 10시
· 장소: 전주YWCA회관 민들레홀
· 발제: 임성진 교수(전주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과제”
· 발제 후 월드까페 방식의 원탁토의 및 스티커 투표 진행

⑥ 기전대학교 일본군 ‘위안부’ 폄훼 동영상 소감문 강요 규탄 기자회견
· 참여단체: 6·15공동선언 실천 전북본부 등 68개 시민사회단체
· 일시: 2017.07.27.(목) 오전 10:30
· 장소: 전주기전대학교 정문 앞
· 내용: 일본군 위안부를 폄훼한 동영상에 대한 소감문 요구 의도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

⑦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실현가능한 새만금 정책토론회
· 주제: “에너지 전환시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로 선도하라”
· 일시: 2017.09.21.(목) 오후 1:30
· 장소: 전라북도의회 회의실

⑧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토론회
· 주제: “학교, 인권을 말한다”
· 일시: 2017.10.11.(수) 오후 6시
· 장소: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

⑨ 전북발전원 토론회 장명수 전총장 발언 대응
· 제목: 시대착오적 관변운동과 도민 편가르기 부추기는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7.10.12.(목) 오전 11시
· 장소: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 2017년 정기총회 및 동계워크샵

· 일시·장소: 2017년 1월 20일(금)~21일(토),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 일원

· 2017년 정기총회 개최: 2016년 결산 및 2017년 사업계획,
직접민주주의 확장과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개혁 사업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관련 '적폐청산' 사업 등 사업 채택

· 우리 생각은 이래요!(참치활동가토론회)

2) 하계워크샵

· 일시·장소: 2017년 8월 24일(목)~26일(토), 서울YMCA다락원 캠프장

· 지역 권력감시 운동의 한계와 혁신, 대전의 도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처장) 발제

· 서울 혁신로드 투어

3) 집행위원회 9차례 개최

3.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북도민행동

1) 경과

· 2017.08.17.(목) 전북환경련 사무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북도민행동 준비모임

· 2017.08.24.(목) 전북도청 브리핑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북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2017.09.01.(금) 전북환경련 사무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북도민행동 1차 집행위회의

· 2017.09.06.(수) 전북녹색당 사무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북도민행동 전체회의

· 2017.10.30.(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북도민행동 회의 및 해단식

2) 한빛원전 현황파악 및 전북 안전성 점검 토론회

· 일시: 2017.09.06.(수) 오전 10시

· 장소: 전북도의회 소회의실

3) 홍보활동

· 2017.08.26.(토) 전주 사람의 거리 행사, 에너지의 날 탈핵부스 운영(객사 앞)

· 2017.09.09.(토) 전주 다수 거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플랑 게시

· 2017.09.13.(수) 전주대 사거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거리 캠페인

· 2017.09.14.(목) 전북대 구정문, 거리 캠페인

· 2017.09.20.(수) 전주대 사거리, 거리 캠페인
· 2017.09.21.(목) 전북대 구정문, 거리 캠페인
· 2017.09.28.(목) 중앙살림광장, 거리 캠페인
· 2017.09.29.(토) 남전주KT 사거리, 거리 캠페인
· 2017.10.11.(수) 남전주KT 사거리, 거리 캠페인
· 2017.10.13.(금) 전북대 신정문, 거리 캠페인
· 2017.10.18.(수) 남전주KT 사거리, 거리 캠페인
· 2017.10.24.(화) 남전주KT 사거리, 거리 캠페인

4.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1) 영화 '공범자들' 지역 순회 상영

· 1차 시사회(2017.08.10.): 전주 독립영화관
· 김제 영화관 상영
· 2017.09.08.(금)부터 5차례(정읍,김제,전주,진안,무주) 순회상영

2) KBS·MBC 언론 노동자의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지지·응원하는 기자회견

· 2017.09.06.(수) 오전 11시, 전북도청 브리핑룸
· 도내 59개 단체 연명

3) 공영방송 정상화 현수막 걸기

·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현수막 달기
· MBC, KBS 파업 출정식에 맞춰 9월 4일 약 32개 단체 40여개 현수막 게시

4) 선전전 및 집회 진행

· 전주시평생학습한마당 <날아라!공영방송정상화>엽서쓰기부스/적폐이사사임촉구서명
· <돌마고 촛불문화제 1회> 9월 13일, 오거리 광장
· <거리 피켓 시위> 9월 13일, 관통로 사거리
· 2017.09.21.(목), 민주노총 사무실, 공영방송 정상화 TF 구성, 공동활동 및 대응논리 논의
· 2017.09.27.(수), 중화산동 한빛안과 사거리, KBS·MBC 공영방송 정상화 거리 캠페인
· 2017.09.28.(목), MBC 노조 격려방문 및 격려금 전달
· 2017.11.24.(금), KBS정문, KBS이인호 고대영 사퇴 촉구 집회
· 2017.12.08.(금), KBS정문, KBS비리이사 해임 촉구 기자회견

5.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참여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45개 시민사회단체

2) 일시: 2017.09.11.(월) 오전 11시

3) 장소: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6. 전쟁반대·한반도평화실현 전북행동

1) 전쟁반대·평화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일시: 2017.10.23.(월) 오후 2시

· 장소: 전북도의회 세미나실

· 명칭: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전북행동

· 목표: 트럼프 미대통령 방한에 맞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도모

· 조직: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8개 단체)

2)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전북행동 기자회견

· 일시: 2017.10.26.(목) 오전 10:30

· 장소: 전북도청 2층 기자회견실

3)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도민대회

· 일시: 2017.11.04.(토) 오후 5시

· 장소: 전주풍남문광장

7. 사회복지시설 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복지정책 토론회

· 주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의 무한반복, 해법은 없는가?

· 일시: 2017. 11월 15일(수) 오전 10:00~12:00

· 장소: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1층)

· 공동주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8. 주요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 전주시청렴시민감시관협의회

9. 기타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 전라북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 전라북도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전주시시민의버스위원회 /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 / 전라북도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2018년(제19기) 사업 평가

◈ 사업 총평(2018년)

1. 정치제도 개혁과 지방선거 대응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를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중·대 선거구 확대 등 정치제도개혁운동을 벌였다. 또한 재량사업비 폐지, 도내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혁,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맑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불공정행위로부터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입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활동을 벌였다.

2. 투명사회를 위한 사업

투명사회를 위한 행·의정 감시사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사업을 진행했다. 도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인사위원회 운영개선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가 산하 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결정함으로써 일부 성과를 이루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및 행정정보공표 현황에 대한 조사사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촉구사업을 진행했다. 도내 전·현직 지방의원과 업자들이 연루되어 구속수감에 이르게 된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촉구사업을 벌였고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재량사업비를 2019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게 되었다. 지방의원들의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유권자를 대변하여 지자체 감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 겸직·겸업 금지를 위해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촉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 중소상인 보호 및 민생 관련 사업

대형유통재벌들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침입을 막아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벌이면서 중소상인 보호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및 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기구 도입과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4. 온라인 소통 사업

'회원통신'과 함께 온라인 매체 '뉴스레터'를 매월 제작하여 발송함으로써 단체가 발굴한 다

양한 이슈들을 지역사회에 전파했다. 모바일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하여 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이슈 확산과 단체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홈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반응을 포함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5. 재정 및 회원사업

회원들을 접촉하기 위해 가입월과 가입연도로 분류하여 감사카드 발송사업을 2017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진행했다. 근현대사 도시 골목기행을 주제로 역사문화시민기행을 연이어 진행하여 새로운 참가자들을 발굴했으나 참가자 감소 추세는 막지 못했고 이를 극복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에는 상반기 이틀주막과 하반기 후원의밤 등 두 차례 재정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단체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 분야별 사업 보고

정치제도 개혁 및 지방선거 대응 사업

1.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대응

1) 사업 배경

○ 현행 기초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새로운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입을 활성화시켜 지역정치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 지난 2010년과 2014년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가 어렵게 만들어낸 4인선거구는 특정정당이 독점한 도의회에 의해 2인선거구로 쪼개져 승자독식 소선거구와 다를 게 없는 제도로 전락하기도 했다.

2)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대응

① 선거구획정위에 의견서 전달 및 보도자료 배포 (3월 5일)

- 3·4인 선거구 확대 요구(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2인 선거구 배제, 3·4인 선거구 획정 촉구)
- 전주시 광역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기초의회 선거구에 적용, 선거구 쪼개기 자체를 배제할 것을 요구

② 도의회 행자위장 면담 (3월 16일 오후 2시)

-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함

③ 도의회에서 6일부터 16일까지 1인 시위 진행 (오전 11시 ~ 오후 12시)
④ 행자위원회 앞 피켓 행동 (3월 19일 오전 10시)

2. 지방선거 정책제안 사업

1) 기자회견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6.13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
- 일시: 2018년 5월 24일(목) 오전 11시
- 장소: 전라북도의회 1층 브리핑룸

2) 정책제안

〈밝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6가지〉

① 재량사업비 폐지
② 감사위원회 설치와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③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④ 도시 대규모 개발 등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⑤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⑥ 지방의회 안건(예산안, 조례안, 결의 및 동의안) ‘기명 투표’ 100% 실시

〈지역 민생을 보호 지원하는 정책 2가지〉

⑦ 대기업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설
⑧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 기구 설치

3) 6.13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 설명서

〈밝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6가지〉

① 재량사업비 폐지
- 제안 배경
  : 전·현직, 도의원 및 기초의원들과 업자들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은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하는 방식의 재량사업비는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법예산이며, 단체장과 의회의 야합의 결과물이다. 오래 전부터 불투명, 불공정으로 지탄을 받아온 재량사업비는 이미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 정책 방향

: 자치단체와 의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 주민숙원사업이라 불리는 재량사업비는 폐지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감사위원회 설치와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 제안 배경

: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운영되어온 현행 감사관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방식이다. 자치단체의 공직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주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혁은 절실하다. 개방형 감사관제로 일부 제도가 바뀌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임명에 의해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

- 정책 방향

: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해야 한다.

③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 제안 배경

: 지방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된다는 점에서 인사에 있어서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지방공공기관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속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규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추천위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책 방향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들이 임원추천위원에 다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지역시민사회 또는 해당 기관 노동조합에 부여하여 낙하산 인사, 선거 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도시 대규모 개발 등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 제안 배경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방직부지 개발 등 도시 대규모 개발의 방향과 과정에서 지역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결정권한은 자치단체만이 갖고 있다.

- 정책 방향

: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며 장밋빛 개발계획으로 지역민을 현혹하여 개발이익만 챙김으로써 지역갈등과 공공성 훼손이라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참여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양한 부문과 계층이 참여하여 방향과 과정에 대해 의견을 소

통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⑤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제안 배경

: '행정정보의 공표' 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끔 2004년에 도입되었다. 공표할 행정정보의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미리 규정하고, 공표되는 행정정보의 내용이 충실한지, 또 최신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궁금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무원들이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또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관으로 '정보공개심의위'가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정보공개심의위가 과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 정책 방향

: 행정정보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정보공표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및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위'가 공무원의 편의적 결정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부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하되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제한하여 심의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공개, 비공개일 때는 반드시 심의위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⑥ 지방의회 안건(예산안, 조례안, 결의 및 동의안) '기명 투표' 100% 실시

- 제안 배경

: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거나 또는 의원별로 의견이 치열히 나뉘는 쟁점 안건 중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 결과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작 주민들은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 투표를 했는지를 영원히 모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 투표' 또는 '기립 투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한 의원이 누군지는 기록에 남지 않고 있다. 적어도 예산안,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이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의 기본조건이다.

- 정책 방향

: 국회의 본회의에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명 투표를 하여 찬성 또는 반대표결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되고 기록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도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

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해야 한다.

〈지역 민생을 보호 지원하는 정책 2가지〉

⑦ 대기업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설

- 제안 배경

: 전라북도 및 도내 지자체의 경우 프랜차이즈, 또는 대기업 대리점 방식의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다. 현행법상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에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재량권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나, 지자체 차원의 '을' 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대기업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업주들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 정책 방향

: 불공정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고 나아가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및 지자체 차원의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기업 납품, 비정규직, 청년 등)』설치하여 피해자 법률 상담과 교육,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태 파악,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⑧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 기구 설치

- 제안 배경

: 대형마트와 SSM 등 재벌유통기업들은 편법, 불법을 동원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침탈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 입법이지만,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조례 제·개정 등으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소상인 정책의 방향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 관계 전문가 및 상인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상시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 방향

: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상인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되는 전담 기구를 운영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행·의정 감시 사업

1.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사업

1) 전라북도, 전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위원회 운영 조사

○ 전라북도, 전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출연기관장 선발 규정(조례, 규칙) 전수 조사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수 조사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

시도	단체장	소속 정당	실시 여부	근거	비 고
서울	박원순	새정치	실시	협약	- 대상: 5개 투자기관장 - 인사청문회 실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2016.3)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 (2016.7~8)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2016.11)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2016.1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2017.06)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2018.04)
부산	서병수	새누리	-	-	
대구	권영진	새누리	실시	협약	- 대상: 5개 공공기관장 - 인사청문회 실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2017.07)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2017.10)
인천	유정복	새누리	-	지침	-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2013년 1월 수립) 정무부시장 임용후보자 인사간담회 실시 (2014년) 필요시 개방형, 공사공단의 임원도 가능하나 산하 기관장에 대해 시행한 적은 아직 없음
광주	윤장현	새정치	실시	협약	- 대상: 8개 공공기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여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 인사청문회 실시 (2017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4월)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5월)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6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9월)
대전	권선택	새정치	실시	규정	-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2014년) -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2014.08)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2014.10)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2015.03)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2016.09)
울산	김기현	새누리	-	-	
세종	이춘희	새정치	-	-	

경기	남경필	새누리	실시	협약	- 대상: 시 산하 공공기관 - 인사청문회 실시 • 2014년 6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경기화학기술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 • 201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6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9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12월) • 2017년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5월)
강원	최문순	새정치	실시	협약	- 대상: 3개 공공기관 - 인사청문회 실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 (2015.07)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2017.09)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2018.01)
충북	이시종	새정치	-	-	
충남		권한 대행	-	-	
전북	송하진	새정치	-	조례	대법원 위헌 판결로 실시된 적은 없음
전남		새정치	실시	협약	
경북	김관용	새누리	실시	협약	- 대상: 도산하 5개 기관장 - 인사검증회 개최 (2018년) 김천의료원장 후보자 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경남		권한 대행	-	협약	- 대상: 12개 출자·출연기관 - 협약체결 후 미이행 (055.211.7062)
제주	원희룡	새누리		특별법	- 특별법에 의해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만 실시 - 공공기관은 비대상

3) 도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성명 발표 (8월 7일)

- <성명> 전라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4) 지방의회인사청문회법제화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18. 11. 01.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찬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1) 취지 및 배경

○ 행정정보공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도입되었음. 전체적으로 사전정보 공표 수준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일부 도내 지자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정한 공표할 행정정보의 일반적 범위를 준용할 뿐 세부적인 조례 운영이나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는 취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심의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정보공개법에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7월 4일 현재, 도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을 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상 내부인사나 다름없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 몫으로 위촉하는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취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각 지자체 조례 수집
- 정보공개포털사이트(www.open.go.kr)의 각 지자체 정보공개현황 수집

○ 조사내용

- 민선6기(2014.7~2018.6)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 현황
- 정보공개 관련 원문 공개율 현황
- 행정정보 사전공개 관련 홈페이지 게재 현황 등

3) 도내 지자체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2018.08.13.)

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② 전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요청
④ 정보공개심의회의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⑤ 행정정보공표 목록 확대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개시
⑥ 별도의 문서공개 시스템을 구축
⑦ 정보공개책임관을 설치·운영
⑧ 시민모니터단 구성 등 모니터 기능 설치·운영

4) 회신결과 발표 (2018.10.01.)

①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개정 통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예정 (진안군은 유보적 입장)
② 예산이 수반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극적
③ 제안결과 회신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3. 지방의원 겸직현황 실태조사

1) 개요

○ 2015년 국민권익위 권고안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 2016년 12월까지 이행권고 했으나 대다수 의회 조치 없음
○ 민선6기 광역의회 의원 겸직신고 비율 36% (출처: 2018.0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지방선거 후 당선인 등록 과정에서 전북도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법규정 위반 문제 제기
○ 지방의원들의 부당겸직 실태 파악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두

2) 경과

○ 2018.10.22. 연합뉴스 “지방의원이 9년째 어린이집 대표 겸직…매년 1억5천만원 지원”보도
○ 2018.10.24. <논평> “오평근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 2018.11.01. 도내 지방의회에 “의원겸직 현황 및 겸직신고 내용 전수조사 요청” 공문 발송
○ 2018.11.02.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등” 정보공개요청 접수 (도의회 및 14개 기초의회)
○ 2018.11.12. 공문 회신 자료 및 정보공개 내용 취합 / 미신고 겸직내역 1차 조사
○ 2018.11.21. 미신고 겸직내역 추가 조사 및 의원 질의
○ 2018.11.26.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3) 보고서 주요 내용

○ 지방의원 겸직신고 총체적 부실
○ 점검 장치 없고 위반 시 사임 권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 없음
○ 의원 60명 겸직신고 위반 의심 (미신고 및 신고 누락 의심 겸직 84개)
○ 미신고 겸직 가운데 부당겸직 의심 사례 16명, 18개 직
○ 지방의원 236명 중 82명(119개 겸직)이 겸직 신고
○ 신고한 겸직 가운데 14명(17개 겸직)이 부당겸직으로 사임 권고
○ 사임 권고 받은 의원 가운데 2명, 사임 권고 미이행
○ 공개된 자료만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 미신고 및 부당겸직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4) 개선방안

①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계 강화
② 겸직신고 내역 점검 장치 마련
③ '수의계약 제한대상 지방의원 관계자' 검증 장치 마련
④ 지방의원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

4. 완주군 의정비 인상 관련 대응 활동

1) 경과

○ 2018.12.03.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
○ 2018.12.07.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 2019년도 의정비 21.15% 인상 잠정 결정
○ 2018.12.17. <성명>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
○ 2018.12.26. 완주군의회 앞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 및 공청회 장소 앞 피켓시위
○ 2018.12.27. <성명>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의정비 인상안을 완주군의회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 2018.12.28. 심의위원회 의결 무효 확인 등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법적 자문 요청

2) 완주군의회 의정비 결정 과정의 문제점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 심의위원 구성의 편중성
○ 심의위 회의 과정에서 의정비 결정을 위한 필수 고려 요소에 대한 논의 부재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대신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진행
○ 공청회에서 규정에도 없는 설문조사 형식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

지역경제·중소상인살리기 민생 사업

1. 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①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진행

-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법 개정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 부여
- 시 · 도의원들에게 관련 정책 대안 마련 및 조례화 촉구
- 2018.01.26.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 2018.03.20.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② 간담회 내용

- 국정감사에 정용진 증인 채택
- 2월 1일에 개최하는 '국민의당·바른정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상인 측 발언기회 보장하고 유통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공론화 될 수 있는 기회 마련

2)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저지를 위한 대응 사업

① 중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1차 간담회

- 일시·장소 : 2018년 3월 19일(월) 오후 4시 30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실
- 간담회 내용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전라북도의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 전라북도가 지역상권 보호 방안 마련할 것 요구

②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2차 간담회 진행

- 일시·장소 : 5월 24일(월) 오후 2시,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실
- 요구사항 :

  사업조정협약사항 이행점검실태 조사 촉구

  중소상공인 지원 시민 참여형 전담기구 설치 제안

  도내 14개시 · 군 지자체간 의사소통 창구 구성 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도민운동본부 의견 제안

  ○ 대규모유통업 내 입점매장 실태조사(입점형태, 불공정거래행위형태 등)

  ○ 용역업체 현황

  ○ 도내산품 매입현황

○ 대규모유통업 종사자 고용현황 (근로실태, 고용형태 등)

※ 진행상황은 일자리경책관실 팀장과 수시로 소통

③ 익산 노브랜드 입점관련 기자회견

- 일시·장소: 5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프레스룸(1층)
- 내용:
  ○ 이마트 노브랜드 부송점의 사업조정을 전면 재협상하라
  ○ 이마트 노브랜드 부송점 입점과 관련하여 익산시가 지역 상인들에게 합의서 서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 익산시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라

④ 이마트 노브랜드 익산(부송점)입점 예고와 관련한 공개질의서 발송 (전라북도, 익산시)

⑤ 익산 부시장 면담

- 일시·장소: 5월 3일(수) 오전 11시, 종합상황실
- 요구사항:
  ○ 이마트 노브랜드 부송점의 사업조정 전면 재협상
  ○ 노브랜드 부송점 입점과 관련 익산시가 지역 상인들에게 합의서 서명을 유도한 의혹 관련 해명 요구
  ○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인근 주변상권 피해사실 실태조사 요구

3)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기구 설치 제안

① 방향 :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상인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되는 전담 기구 운영

② 향후 일정: 2월 중 전라북도(경제산업국) 간담회 진행 예정

4) 노브랜드 사업조정 자율협의

○ 이마트 및 행정기관 항의 피켓 시위 진행 (9차례 진행)

시민참여사업

1. 역사문화시민기행

1) 제32회 역사문화시민기행 개요

구분	날 짜	주 제 및 기행지	참석인원	소요예산
32회	11월 10일 (토)	“인천, 멀다 하면 안 되갔구나!” 차이나타운→자유공원→중구청→ 은행거리→신포시장	22명	1,150,900

2) 경과

○ 사전답사: 2018년 10월 4일

○ 해설사: 이종복 인천 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대표
인천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섭외

○ 답사결과: 해설사와 사전 만남을 통해 역사기행 취지와 의미 공유
인천의 근·현대 및 현재 인천의 변화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기행프로그램 구성

3) 평가

○ 회원참여를 확대를 위한 30~40대 대상으로 역사기행 취지 함께 공유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았음.

○ 회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의 정보제공 시스템 홍보영상 제공, 시립도서관 홍보물 비치, 페이스북 홍보영상 게시 등의 기행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기행은 새로운 참가자가 더 많았음.

○ 역사문화시민기행의 현지해설사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

2. 회원 여름캠프

1) 프로그램 개요

날 짜	장 소	진행프로그램	참석인원 (회원 및 가족)	결 산
8월 25~26일 (1박2일)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 들꽃마을	공동체프로그램 (자기소개/신발멀리던지기/ 노래자랑/바베큐파티)	43명	1,520,000

3. 회원 현황 (단위: 명)

	2017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신입		1	-	-	7	-	2	2	1	1	1	1	3	19
탈퇴및 정리		6	-	-	1	6	1	1		-	-	-	5	20
복귀		-	-	-	-	-			2	-	-	-	-	2
회원수	772	767	767	767	773	767	768	769	772	773	774	775	773	

4. 회원감사 편지 보내기

1) 대상

-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가입한 신입회원

2) 발송인원 - 33명

3) 평가

- 일상적이고 감성적인 소통방식으로 2018년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19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임.

5. 월간 소식지(회원통신) 발행

구 분	회원탐방	성명 논평	연재 기고	주요내용
1월호 (207호)	윤낙중	2	5	[이슈] 당신도 저작권 위반자가 될 수 있다. [칼럼] 새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소망한다.
2월호 (208호)	여태권	-	5	[이슈] 개헌과 지방분권 논의,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 [총회보고] 제19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기총회보고
3월호 (209호)	김현승	2	5	[칼럼] 진보의 기준은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로 보아야한다 [참고] 전라북도교육청 비정규직 현황
4월호 (210호)	이명자	1	6	[칼럼] 6·13지방자치선거 승리를 위한 대장정 시작
5월호 (211호)	김완술	1	5	[칼럼] “잠꼬대 아닌 잠꼬대” 故문익환 목사님을 생각하며

6월호 (212호)	김윤수	-	5	[칼럼]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어른 한규채 대표님 영면에 들다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우리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
7월호 (213호)	백미영	1	4	[이슈] 한눈에 보는 6.13 전북 지방선거 결과 [칼럼] 6·13 지방선거결과는 선거제도 개혁의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8월호 (214호)	송병주	1	5	[칼럼] 법과 제도 개선으로 정치·경제 개혁을 앞당겨야 [특집] 전라북도 산하기관 인사청문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의 면피용 대책
9월호 (216호)	윤인성	1	5	[칼럼] 문재인 정부 집권2년차 [특집] 행정정보 공표, 하려면 제대로 하자
10월호 (217호)	-	-	5	[칼럼] 비핵화에 좌우는 없다 [특집] 판점에서 평양까지(선언문 주요내용 비교)
11월호 (218호)	송봉수	1	5	[이슈] 정부의'지방자치법 '전부개정'내용살펴보기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의 수준을 갖춰야 [칼럼] 인사청문제도 도입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해야
12월호 (219호)	-	-	6	[칼럼] 전북은 아직도 '새만금앓이'중 [특집] 지역 대표성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회원기고 : 소식지에 담긴 정기, 부정기 회원들의 기고 꼭지 수

연대 사업

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16기 운영위원회

날 짜	장 소	주 요 회 의 안 건
2018.02.20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16기 결산보고 · 2018년 공동대표단회의 (제17기 정기총회) 개최

2) 17기 대표자회의 (정기총회)

○ 일시: 2018.03.20. 오전 10시

○ 장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

○ 결의사항: · 안건1) 제16기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안건2) 17기 임원진 인선
· 안건3) 17기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 기타안건)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미투운동'지지 선언문 채택

3) 17기 운영위원회

날 짜	장 소	주 요 회 의 안 건
2018.04.17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지방선거 대응사업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참여 ·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토론회 참여
2018.05.14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6·13 지방선거 대응사업 공유
2018.06.20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6·13 지방선거 진행사업 정리 이후 공동사업 모색 · 여름하계수련회 개최 관련 준비
2018.07.16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여름하계수련회 개최 관련 준비 · 광주·대전 NGO센터 설립 및 운영과정 사례
2018.10.16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관련
2018.11.20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사업 참여
2018.12.18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2019 신년하례회 개최 관련

4)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2018.01.15 16:00 pm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대표자회의
2018.01.23 11:00 am	전라북도의회	·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시작 촉구 기자회견
2018.03.05 10:30 am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5차 집행위
2018.03.06 10:30 am	전라북도의회 앞	· 3,4인 선거구 확대 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
2018.03.12 10:30 am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6차 집행위
2018.03.16 14:00 pm	도의회 김종철의원실	· 기초의회선거구획정 관련 김종철행자위원장 면담

2018.03.19 10:45 am	전라북도의회 2층	· 도의회 상임위 앞 피켓팅 시위
2018.03.26 17:00 pm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활동평가 및 향후계획 논의

5)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① #미투 #위드유 캠페인 '함께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 기간: 2018.04.16.(월) ~ 04.20(금), 점심시간 (12:00 ~ 13:00 pm)
- 장소: 전북대 구정문 앞 / 전주대 앞

② 주요 활동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2018.04.18 11:00 am	전주 풍남문광장	· 10:30 am 대표자 회의 진행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2018.04.21 15:00 pm	전주 풍남문 광장	· 전국동시다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2018.04.23 18:30 pm	중부비전센터 4층	· 미투 대중강좌 '미투운동은 왜 시민혁명인가' (이나영교수)
2018.06.12 03:30 pm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대표자회의

6) 6.13 지방선거 대응사업

① 우리동네 선거방송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2018.04.27 10:00 am	영상미디어시민센터	· 우리동네 선거방송 기획단 출범 및 업무 협약식
2018.04.30 11:00 am	영상미디어시민센터	· 우리동네 선거방송 기획단 회의
2018.05.16 10:00 am	티브로드 전주 스튜디오	· 유권자 의제 토론회
2018.05.27 05:00 pm	티브로드 전주 스튜디오	· 광역의원 토론회 (제8선거구)
2018.05.27 08:00 pm	티브로드 전주 스튜디오	· 기초의원 토론회 (전주 카선거구)

② 6·13 지방선거 릴레이 정책제안 발표

○ 기간 : 2018년 5월 15일 ~ 5월 30일

○ 제안방식 : 기자회견 / 질의응답 / 보도자료

③ 시민시회 정책제안 경과 및 수용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

○ 6.13 지방선거 시민사회 정책제안 경과 및 수용결과 발표

"지역을 살리는 좋은 정책 지방자치도 살린다"

7)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라북도 사회적 대화

○ 일시/장소 : 2018년 10월 30일(화) 13:00 ~ 16:30,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 토론주제 : 의제1. 한반도 미래상

의제2. 평화와 통일에 기대되는 효과

○ 진행 : 시민패널 70명 참가, 5개 모둠 원탁토론

○ 활동일지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2018.10.22 11:00 am	중앙동 카페 '오가다'	· 진행방식 및 주제선정
2018.10.30 10:00 am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최종 점검회의
2018.11.14 11:00 am	중앙동 카페 '헤밍웨이'	· 결산 및 평가회의

8) 기타연대활동

구 분	일 시	장 소
① 전북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2018.01.09.(화) 10:30am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② 국민헌법 전북시민사회 간담회	2018.02.28.(수) 14:00pm	중부비전센터 3층
③ 세월호 참가 4주기 추모 문화제	2018.04.16.(월) 19:00pm	전주 풍남문광장
④ 김주열 열사 묘역참배	2018.04.19.(목) 09:00am	남원 김주열열사 묘역
⑤ 전라북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	2018.04.26.(목) 16:00pm	전북치과의사회 회의실
⑥ 이세종열사 추모식	2018.05.17.(목) 17:00pm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

⑦ 5·18 전북영화제 개막식	2018.05.18.(금) 18:00pm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⑧ 기무사 해체 요구 기자회견	2018.07.12.(목) 13:00pm	송천동 기무사 정문
⑨ 프레시안 전북본부장 협박·폭언 및 제보 유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2018.09.12.(수) 11:00am	도의회 브리핑룸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 2018년 대표자회의 및 동계워크숍

· 일시·장소 : 2018년 2월 1~2일(1박 2일), 전주 별빛마루 펜션

· 2018년 대표자회의 : ① 2017년 사업보고
② 2017년 결산(안) 승인
③ 2018년 사업계획 승인
④ 기관 및 임원 선임
⑤ 규약 개정

· 동계워크숍 진행 : ① 이런 활동 어때요? 2017년 새로운 활동을 소개합니다
② 이런 고민 어때요? '개헌 이후 지방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대응방안'

2) 하계워크샵

· 일시·장소: 2017년 8월 22~24일(2박 3일), 경기 가평 밀키웨이 펜션

3) 2018년 집행위원회

구분	일 시	장 소	주 요 회 의 안 건
1차	2018.01.09 4pm	대전NGO센터	· 개헌TF 논의 결과 보고 및 추가 논의 · 2018년 사업계획 초안 논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개정 논의
2차	2018.02.27 2pm	대전NGO센터	· 개헌에 대한 입장 정리 · 회비금액 조정 · 활동가 교육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 추진(안) · 지방선거 대응 사업(안)
3차	2018.03.27 2pm	대전NGO센터	· 개헌 논의 · 지방선거 대응 · 상근자 교육
4차	2018.04.24 2pm	대전NGO센터	· 지방선거 대응 · 개헌 관련 대응

5차	2018.05.29 2pm	대전NGO센터	· 지방선거 대응 공유 및 검토사항 · 지방의회 운영평가 및 개선요구 공동사업 추진 검토 · 제8대지방의회 모니터링 또는 정보제공웹사이트 추진검토 · 활동가역량강화사업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제안 · 2018 하계워크숍 추진 계획 논의 · 2018 참치활동가 여행 기획단 1차 회의 결과
6차	2018.06.26 2pm	대전NGO센터	· 지방선거 공동 대응 평가 · 지방의회 운영평가 및 개선요구 공동사업 기획안 · 2018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살펴본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 기획 검토 · 2018 하계워크숍 추진 계획 논의
7차	2018.07.24 2pm	대전NGO센터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계획 · 2018 하계워크숍 추진 계획 논의 · 참치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관련
8차	2018.08.23 9am	가평밀키웨이 펜션(하계 워크숍장소)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계획
9차	2018.09.18 2pm	대전NGO센터	· 공익활동가협동조합 '동행' 조합원 가입 지원 · 지방의회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뒷받침 위한 법률개정 로비 ·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 하반기 사업 점검 · 재량사업비 문제의 건
10차	2018.11.01 4pm	서울국회의원 회관 9간담회실	·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개선 대응 · 지방의회 공동 모니터링 · 정치개혁공동행동 사업 제안 ·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담합 대응 연대
11차	2018.11.27 2pm	대전NGO센터	·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모니터링 이슈 리포트 발행 ·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관련 현황 및 공동대응 검토 ·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담합 공동대응 · 지방자치법 등 법개정 입법예고 대응 · 2019년 총회 및 동계워크숍
12차	2018.12.26 2pm	대전 대흥노마드	· 2018 사업평가 및 2019 사업계획 · 2019 총회 및 동계워크숍 진행 계획